

월간

# 재정포럼

2024. June  
Vol.336

06



---

## 권두칼럼

식량안보와 정부의 역할

| 이명현

---

## 현안분석

수혜요건을 고려한 생계급여 및  
근로장려금 복지재정지출 논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을 중심으로

| 김정환

---

## 특집

2024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

수상자 필립 스트랙의

경제학적 기여

| 문지웅

---

## 정책연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사업과 지역발전:

자본지출과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외

---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규정 발표 외

---

Kipf

# 재정포럼

2024.06. Vol.336

월간 재정포럼 2024년 6월호 통권 제336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044) 414-2137 홈페이지 www.kipf.re.kr

## CONTENTS

### 권두칼럼

02 식량안보와 정부의 역할 | 이명현

### 현안분석

08 수혜요건을 고려한 생계급여 및 근로장려금 복지재정지출 논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을 중심으로 | 김정환

### 특집

38 2024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 수상자 필립 스트랙의  
경제학적 기여 | 문지웅

### 정책연구

60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사업과 지역발전:  
자본지출과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 고창수·이환웅

64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 송경호

67 지역노동수요충격이 지역 경제 및 재정에 끼친 영향  
| 이환웅·고창수·홍용기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72 미국 -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규정 발표 외

『재정포럼』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포럼』은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 식량안보와 정부의 역할



이명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의 원인과 불안정성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세계 곡물가격이 2020년 대비 50%나 상승하여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그 후 곡물 가격은 서서히 하락하여 현재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더 길게 보면 1990년 이후 세계 곡물 가격은 대세 상승기에 들어와 있다. FAO의 곡물가격지수(2014~2016년 수치를 기준값으로 함)는 1990년 59에서 꾸준히 상승하다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138로 튀어 올랐다가 다소 진정되는가 싶더니 2011년 142로 기록을 경신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55까지 치솟은 것이다.

이러한 곡물 가격 상승은 수요측면에서 신흥국 인구와 소득수준 성장, 공급측면에서 우리 인류의 농경이 시작된 이래 거의 처음 경험하고 있는 전 지구적 경작면적 감소와 토지생산성 증가 둔화가 결합된 결과이다. 이러한 추세적 가격 상승압력에 더하여 최근 세계 여러 곳에서의 지정학적 불안 증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곡물 가격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현황과 정부의 역할

대한민국은 이러한 흐름 앞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불안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이 먹는 식량의 자급률은 40%에 불과하다. 쌀은 남아돌지만 에너지 섭취에서 쌀 못지않은 역할을 하는 밀과 옥수

수의 자급률이 각각 1%도 안 되기 때문이다. 가축이 먹는 곡물까지 함께 고려하는 곡물자급률은 20%에 불과하다. 사료용 곡물(밀과 특히 옥수수가 중요한 품목)의 생산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이다. 국내 생산이 적더라도, 자유무역 질서가 안정적이어서 우리가 잘 만드는 상품을 수출해서 외화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다면, 그리고 국외에서 농산물 수입도 늘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1995년 WTO 체제의 시작과 더불어 전성기를 선포했던 전 세계적 자유무역 시대는 힘없이 기울고 있다. 강대국들은 중요한 상품들의 공급망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구축하려 하고 있다. 또한 자국 내 산업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지원책들을 구사하고 있다. 곡물시장의 기본적 불안정 요인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이렇게 식량안보의 조건들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5천만 국민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전제인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 그리고 재정은 무엇을 해야 할까?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내 농산물, 특히 식량생산 능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정부가 도입·확대하고 있는 전략작물에 대한 직접 지불제도(가루쌀, 두류, 옥수수, 밀, 조사료 등을 대상으로 함)가 이러한 방향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곡물자급률을 높임으로써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비용과 수요구조를 섬세하게 고려하지 않는 생산 촉진책은 재정과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마저 있다. 또한 생산능력 제고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단기에도 닥쳐올 수 있는 생산 및 세계적 유통 차질에 대응하는 정책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생산능력을 높이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되, 다른 한 편으로 ‘사전적(事前的) 위기관리’라는 측면에서 식량확보 방안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첫째, 식량확보와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상황의 종류를 예측하고 그 구체적 모습을 생각해 두는 노력이 필요하다. 2021년 말 겪었던 ‘요소수 대란’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중요한 재화의 생산을 위한 수많은 원재료를 국제분업 원리에 따라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중 핵심적 원재료 한 가지

식량안보의  
조건들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5천만 국민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전제인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  
그리고 재정은 무엇을  
해야 할까?

중요 농산물 및  
핵심적인 농업용 기자재  
및 원재료의 생산과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국내외적  
상황의 변화 중에서  
그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

만 수입에 차질이 생겨도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중요 농산물 및 핵심적인 농업용 기자재 및 원재료의 생산과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국내외적 상황의 변화 중에서 그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후위기의 구체적 양상과 그것이 국내의 농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 우리 농산물 생산에 중요한 수입 기자재 및 원재료의 외국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에 분석이 포함될 것이다.


둘째, 필수적인 농산물과 기자재 적정량을 효율적으로 비축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생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우리나라의 자급률이 낮으므로 국내의 생산이나 유통망의 교란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비축분을 가지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하다. 단, 이러한 비축량이 모두 공공 재고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민간 수입업체, 가공업체들은 각기 자신의 이윤 동기에 따라서 사적으로 적정량의 재고를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과의 협력 체제를 통해서 재고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민간이 예측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예외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비축하는 것이 필요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필요한 부분만큼만 추가적 비축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될 것이다. 예컨대, 스위스는 중요 농산물별로 1년 수입량을 비축 목표량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직접적인 정부 비축분 형태가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조직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의무 비축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그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 비용을 보증과, 필요에 따라서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해 주고 있다.

셋째, 만의 하나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필요할 수도 있는 공급 단위 제한, 배급제도 등의 긴급한 시장개입적 조치를 법적으로는 어떤 법령에 근거해,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와 백신의 공급 및 분배에 애로를 겪은 바 있었고 또한 그것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위기적 상황에서 농산물과 식료품의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물적 기반을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러한 기반이 일단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변화하는 내외 여건에 맞추어 그 준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역시 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주어진 국토와 농업인력 자원을 이용

해서 국민 모두에게 필수적인 열량과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계획모형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다시 스위스의 예를 들면 전 국민에게 일일 2,300Kcal 공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요소들을 어떻게 결합하는 것이 최적인지를 계산하는 컴퓨터 계산 모형을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다.

## 나가며: 정부의 지속적인 위기관리 준비

식량안보는 치안, 국방과 더불어 국가의 가장 오래된 임무이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그 임무 달성을 위해서 정부는 위기관리 준비를 끊임없이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식량안보는 치안, 국방과 더불어 국가의 가장 오래된 임무이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그 임무 달성을 위해서 정부는 위기관리 준비를 끊임없이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재정포럼 독자께 드리는 말씀>

2024년 5월호 재정포럼 원고와 관련하여,  
저희 재정포럼 편집위원회의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재정포럼을 성원해 주신 많은 독자분들께 염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저희 편집위원회는 앞으로 검토 절차를 보완하여,  
향후 양질의 원고로 독자분들을 찾아뵙는 재정포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재정포럼 편집위원회 일동

# 현안분석

- + 수혜요건을 고려한 생계급여 및 근로장려금 복지재정지출 논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을 중심으로  
김정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수혜요건을 고려한 생계급여 및 근로장려금 복지재정지출 논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을 중심으로



김정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jhkim30@kipf.re.kr

## 1. 서론

기획재정부의 「2023 경제정책방향」에 서술된 바에 따르면, 민생경제 회복지원을 위한 주요 중점 방안으로는 생계비 부담 경감, 약자 복지 확충 등을 제시하였고, 생계비 부담 경감의 내용에는 서민·취약계층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약자 복지 확충의 내용에는 보장성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보강, 근로·자립 의욕 제고로 이어지도록 복지제도 등의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 목표에 맞춰 제도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 2024년 올해부터 생계급여의 수혜기준 금액이 해당연도 중위소득의 32%로 기존의 제도 기준보다 2%p 더 상승하였다. 근로장려금 제도 또한 제도가 생긴 이래 복지확장의 기조 아래 수혜요건 완화와 근로장려금 수혜액을 증가하는 추세이다.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자가 예상한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현실로 다가오며 현재 시행되는 제도들이 과연 다가온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증시되고 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고령화의 주체가 되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만약 가상의 두 나라의 인구 연령별 비율이 같더라도, 각 나라의 특정 연령층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다면 동일한 제도에 다르게 반응할 유인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징과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제도를 적용할 경우의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 복지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충격과 제도 변화는 사회구성원 중 반응하기 힘든 취약계층에 더 큰 충격과 변화 정도를 경험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생계급여제도와 근로장려금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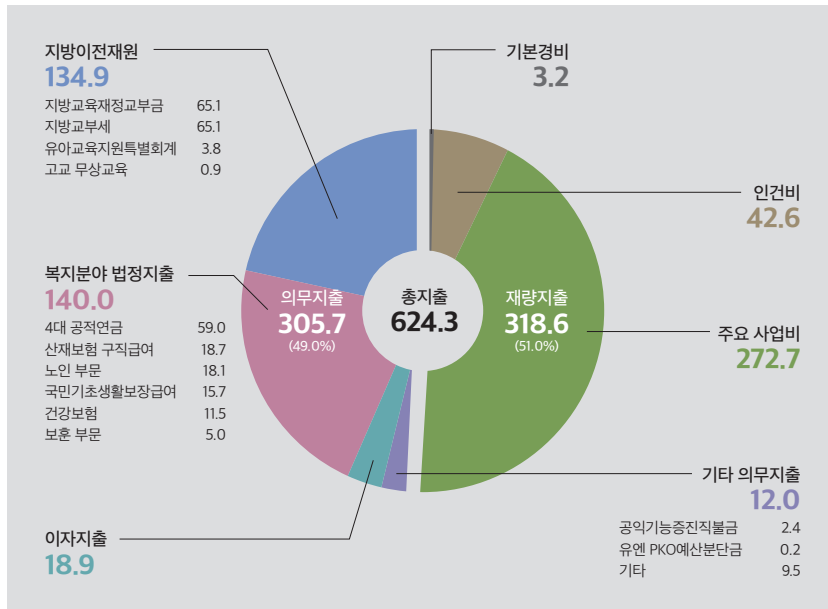
의 수혜집단은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 타 제도들과 비교하여 인구구조 고령화 추세에 맞춰 연구의 시급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다른 각도에서 연구의 중요성을 암시하는 내용으로는 생계급여제도와 근로장려금제도는 공공부조제도의 일부로서 복지 지출의 한 부분이며, 법정 의무 지출에 포함되어 있기에 근 미래에 유연한 재정적 대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고령화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고 이해하여 해당 제도에 다가올 재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 원고를 작성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징과 복지재정지출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제Ⅲ장에서는 생계급여 및 근로장려금에 대한 제도를 소개한 후, 제Ⅳ장에서는 제도와 관련 있는 모수 및 경제 충격에 대한 생계급여 및 근로장려금으로 인한 재정지출 탄력도를 살펴보았다. 제Ⅴ장은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언급하며 본고를 마무리하였다.

생계급여제도와 근로장려금제도의 수혜집단은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 타 제도들과 비교하여 인구구조 고령화 추세에 맞춰 연구의 시급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 Ⅱ.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징 및 재정지출에 대한 이해

[그림 1] 예산 총지출 구성요소



주: 1. 2022년 1차 추경분 포함 예산 기준

2.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출처: 한국재정정보원, [https://www.fis.kr/ko/major\\_biz/finance\\_info\\_analysis/brief/collection?articleSeq=2428](https://www.fis.kr/ko/major_biz/finance_info_analysis/brief/collection?articleSeq=2428)

고령 인구 증가는  
연금, 노인 부문,  
기초생활보장 급여,  
건강보험의 수혜 집단  
증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지출의 증가로  
이어져 재정 부담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예상되는 예산지출 증가가 큰 이유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복지 지출의 증가 때문이다. 국가 재정 지출은 크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누어지는데 총지출 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부분을 재량지출로 정의하기 때문에 의무지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의무지출의 범위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크게 네 부분으로 지방이전 재원, 복지 분야 법정지출, 이자지출, 기타 의무지출로 구분된다. 2022년 예산 기준 총지출은 624.3조원이며 이 중 의무지출은 총지출의 약 49%에 해당하는 305.7조원이었다. 의무지출 중에서 복지 분야 법정지출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40조원에 해당한다. 복지 분야 법정지출은 크게 여섯 부분으로 구분하여 4대 공적연금, 산재보험 구직급여, 노인 부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건강보험, 보훈 부문으로 나누어진다.<sup>1)</sup> 고령 인구 증가는 연금, 노인 부문, 기초생활보장 급여, 건강보험의 수혜 집단 증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지출의 증가로 이어져 재정 부담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재정지출의 증가세를 막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해당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느냐가 큰 과제로 남아있다. 한편 고령화로 인한 의무지출의 증가는 한국의 국가 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코로나 이후 시기 OECD 국가 중 1위인 현상과 맞물려 재정준칙 법제화 등의 이슈와도 연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의 재정지출을 논의하기 위하여 수혜요건에 해당하는 가구 형태 및 가구원 수, 소득, 자산, 부채와 같은 변수에 대해, 인구구조 고령화의 특징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들을 참고하였다.

타 연구에서 밝히는 주장을 요약 정리하면 인구구조 고령화의 특징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에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대략 1955~1974년에 태어난 세대를 통칭하는 개념이며, 해당 세대는 6·25 전쟁 이후 한국 경제 회복과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경험을 겪은 세대로 볼 수 있다. 특히 교육 개편으로 인한 인적 자본 개발이 산업의 고도화를 이끌었으며, 젊은 연령층 인구의 증가로 인한 총노동공급량의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경제적 요인인 산업화의 진행과 사회적 요인인 개인주의화로 인한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구 형태의 변화 또한 해당 세대가 겪은 주요 변화이다. 통계에 따르면 1980년 한국의 평균 가구원 수는 4.62명이었으나 2010년 2.69명까지 급격하게 감소하였고(김유경 외(2013)), 2021년 기준으로는 2.3명으로 나타났다.

1) 한국재정정보원 참고자료

베이비부머 세대를 연구한 국내·외 연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강상경(2012)은 삶의 만족도 및 관련 요인을 세대별로 비교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구를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52세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43~51세),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18~42세)로 구분하고, 세대 간 삶의 만족도 차이 여부와 성별, 교육, 수급 여부, 소득, 가족관계, 건강 상태, 장애 유무, 의료서비스 등의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수급 여부, 소득, 건강 상태, 장애 유무 등의 요인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아(2014)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세대별 노후 준비 및 경제적 수준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인구를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1932~1954년생),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1968~1974년생)로 분류하고 세대별로 노후 준비, 소득, 자산, 교육 수준 등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소득과 자산 수준은 베이비부머 이전, 이후 세대보다 모두 높았으며, 높은 경제활동참가율로 인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이전 세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준비 격차는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고학력자의 비중이 이전 세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민정·문정숙(2016)은 제5차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와 이전 세대의 소비지출구조를 비교하고, 소비지출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가구의 특성을 알아본 결과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가 많고, 교육 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으며, 가구원 수도 더 많게 나타났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출 규모는 이전 세대에 비해 2배 이상 컸으며, 특히 교통통신비, 교육·보육비, 생활보조금의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출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원 수와 근로소득으로 나타났다.

조현승 외(2017)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이후 세대의 특징을 파악하고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베이비부머 세대와 이후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학력과 소득이 높으며, 공적연금 가입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저축액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후 세대보다 많았으며, 가구원 수는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이후 세대가 고령층으로 진입하면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필수 소비지출은 감소하고, 여가·취미와 같은 사치재의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구구조 고령화의 특징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에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대략 1955~1974년에 태어난 세대를 통칭하는 개념이며, 해당 세대는 6·25 전쟁 이후 한국 경제 회복과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경험을 겪은 세대로 볼 수 있다.

<표 1> 국내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연구 목적	연구 방법 및 자료	연구 결과
강상경 (2012)	베이비부머 세대와 전후세대의 삶의 만족도 및 관련 요인 비교	-카이제곱검정, t-검정, 다중집단분석 -한국복지패널(2006)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음 -수급 여부, 소득, 건강 상태, 장애 유무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
김경아 (2014)	베이비부머 세대와 전후세대의 노후 준비 및 경제적 수준의 차이 비교	-세대별 비교분석 -가계금융복지조사(2012), 사회조사(2011)	-베이비부머 세대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음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준비 격차가 작음 -베이비부머 세대는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음
김민정·문정숙 (2016)	베이비부머 세대와 이전 세대의 소비지출구조 및 결정요인 분석	-t-검정, 카이제곱검정, 다중회귀분석 -제5차 국민노후보장패널(2015)	-베이비부머 세대는 교통통신비, 교육·보육비, 생활보조금의 지출 규모가 큼 -가구원 수, 근로소득이 지출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조현승 외 (2017)	베이비부머 세대와 이후 세대의 특징 파악 및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세대별 비교분석, PS-AIDS -재정패널(2015)	-베이비부머 세대와 이후 세대는 학력과 소득이 높음 -저축액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구원 수는 이후 세대가 더 많음 -베이비부머 세대와 이후 세대가 고령층 진입 시 사치재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 세 가지로 구분된다.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은 그중에서 기초연금, 자활 지원, 장애인 연금 등과 함께 공공부조에 속한다.

Easterlin et al.(1993)은 미국 베이비부머 세대의 소득, 부, 가정환경을 부모 세대와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베이비부머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소득이 높고 저축을 통한 부의 축적률이 높았으며, 은퇴 시 경제 상황이 좋을수록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물질적인 복지 측면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나, 베이비부머 세대의 독신 비율이 높고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 총체적인 복지 측면에서는 부모 세대보다 향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Keister & Natalia(2001)는 미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를 1945~1965년생으로 정의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산 소유 및 부의 상향 이동 가능성을 부모 세대와 비교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이가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젊은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소득 대비 순자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상향 이동 가능성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높았지만, 여성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부의 상향 이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Ⅲ. 생계급여제도 및 근로장려금제도 소개 및 현황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의 최상위개념은 사회보장제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사

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를 가진다.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 세 가지로 구분된다.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은 그중에서 기초연금, 자활 지원, 장애인 연금 등과 함께 공공부조에 속한다.

## 1. 생계급여제도 소개 및 현황

생계급여제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소개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2014년까지는 소득인정액<sup>2)</sup>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모든 급여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며, 2015년 7월 1일부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기존 통합급여체계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되면서 급여별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다르게 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 이후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으로 2015년 7월 이후의 제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기준중위소득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및 급여 기준선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앙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다.<sup>3)</sup>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 2)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 제1항

<표 2> 기준중위소득 변화(2015~2023년)

(단위: 원/월)

연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15년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6,566,039
2016년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20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20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2019년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20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20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주: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에 더해서 산정함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각 연도

<표 3> 연도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2015~2023년)

(단위: 원/월)

연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15년	선정 기준(28%)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1,838,491
2016년	선정 기준(29%)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2017년	선정 기준(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2018년	선정 기준(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2019년	선정 기준(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2020년	선정 기준(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2021년	선정 기준(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2022년	선정 기준(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2023년	선정 기준(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주: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액에서 6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7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액에 더해서 선정함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각 연도

생계급여액의 산정은 앞서 언급한 소득인정액과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선정 기준액의 차이로 계산된다.

생계급여 기준은 2015년에 기준중위소득의 28%에서 시작하여 2년간 1%씩 증가하였고, 2017년 이후로는 기준중위소득의 30%를 유지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생계급여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32%로 상승하여 수혜집단과 수혜 금액의 확대가 결정되었기에 시기적으로 재정의 부담이 얼마나 가중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생계급여액의 산정은 앞서 언급한 소득인정액과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선정 기준액의 차이로 계산된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재정지출에 큰 영향을 주는 모수는 재산평가액 계산에 필요한 모수들과 매년 새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 값으로 볼 수 있다. 재산평가액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개념이다. 재산평가액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주요 재산 종류는 주거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가액으로 나누어진다. 각 재산 종류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활에 더 필수적으로 보이는 재산의 가중치를 더 적게 주어 제도적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 포트폴리오 결정 행태에 영향을 주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구체적인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 4)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30% 공제
- 5) 상시근로자 소득 + 일용근로자 소득 + 자활근로 소득 + 공공일자리 소득
- 6) 농업소득 + 임업소득 + 어업 소득 + 기타사업소득
- 7) 임대소득 + 이자소득 + 연금 소득
- 8) 사적 이전소득 + 부양비 + 공적 이전소득

**(소득인정액 계산식)**

1)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식)**

2)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비용 - 근로소득공제<sup>4)</sup>

3) 실제 소득 = 근로소득<sup>5)</sup> + 사업소득<sup>6)</sup> + 재산소득<sup>7)</sup> + 이전소득<sup>8)</sup>

4)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비용

$$= \text{장애요인으로 인한 금품}^{9)} + \text{질병 요인으로 인한 금품}^{10)} + \text{양육 요인으로 인한 금품}^{11)} + \text{국가 유공 요인으로 인한 금품}^{12)}$$

앞서 소개한 소득평가액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하나 소개한다.

(재산소득환산액 계산식)

5) 재산소득환산액

$$= \text{최종 주거재산*주거재산 소득환산율} + \text{최종 일반재산*일반재산 소득환산율} + \text{최종 금융재산*금융재산 소득환산율} - \text{부채 총차감액} + \text{자동차 재산가액}$$

재산 산출에 있어 본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재산에 대한 공제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주거, 일반, 금융, 자동차 재산을 조사하여 공제 제도와 부채 차감을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소득환산율을 각각 곱하여 더하여 최종 재산소득환산액을 산출한다. 소득환산율은 2020년 기준 주거용 재산은 1.04%, 일반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 자동차 재산은 100%를 적용한다. <표 4>~<표 6>, [그림 2] 생계급여제도의 수급자 및 수급액에 대한 통계이다.

<표 4> 수급자 연도별 규모 추이(2015~2022년)

(단위: 명, 가구, %)

연도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수급률
	인원	가구	인원	인원	
2015년	1,646,363	1,014,177	1,554,484	91,879	3.2
2016년	1,630,614	1,035,435	1,539,539	91,075	3.2
2017년	1,581,646	1,032,996	1,491,650	89,996	3.1
2018년	1,743,690	1,165,175	1,653,781	89,909	3.4
2019년	1,881,357	1,281,759	1,792,012	89,345	3.6
2020년	2,134,186	1,459,059	2,046,213	87,973	4.1
2021년	2,359,672	1,637,569	2,268,852	90,820	4.6
2022년	2,451,458	1,699,497	2,359,228	92,230	4.8

주: 수급률 = (수급자 수/주민등록인구통계)×100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각 연도

재산 산출에 있어

본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재산에 대한 공제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 9)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법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 고령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재활보조금 +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 월정금
- 10) 만성질환 등의 치료 요양 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 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 식이 구입비 + 한센인 피해자 위로 지원금
- 11)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 양육비 및 추가 아동 양육비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촉진 수당 +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피부양 보조금 + 양육보조금 + 농어민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 12)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체육 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 참전 명예 수당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독립유공자(손)자녀 생활지원금

[그림 2]에서는  
일반수급자가 노년기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며 노동시장  
은퇴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에 대한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5> 연령별 수급자 연도별 규모 추이(2015~2022년)

(단위: 명)

연도	0~4세	5~9세	10~19세	20~39세	40~64세	65세 이상	계
2015년	24,242	73,176	353,528	159,155	524,931	419,452	1,554,484
2016년	21,988	73,282	343,420	155,089	525,029	420,731	1,539,539
2017년	19,886	65,139	301,857	149,798	524,421	430,549	1,491,650
2018년	21,744	64,948	281,224	165,452	577,157	543,256	1,653,781
2019년	24,198	68,695	263,138	179,531	624,808	631,642	1,792,012
2020년	27,383	75,857	273,719	218,671	727,069	723,514	2,046,213
2021년	27,473	79,313	278,053	238,149	793,468	852,396	2,268,852
2022년	25,829	75,178	275,527	235,984	810,645	936,065	2,359,228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각 연도

<표 6> 가구 규모별 수급자 연도별 규모 추이(2015~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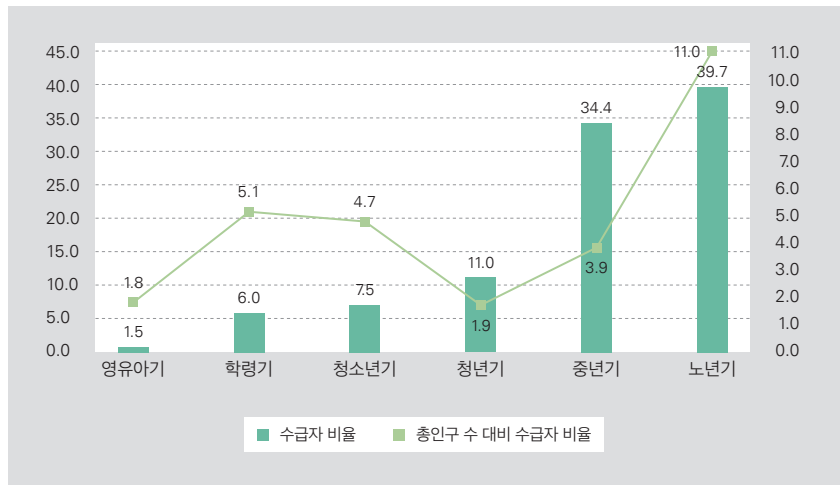
(단위: 가구)

연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2015년	611,050	182,426	115,847	68,969	26,997	6,596	2,292
2016년	630,037	186,329	116,251	67,080	26,613	6,762	2,363
2017년	655,191	182,673	107,217	57,240	22,620	5,844	2,211
2018년	771,235	205,863	105,577	53,982	20,803	5,549	2,166
2019년	879,270	220,685	103,674	51,231	19,650	5,172	2,077
2020년	1,012,753	249,521	113,305	55,325	20,611	5,448	2,096
2021년	1,160,708	274,502	116,797	56,675	21,320	5,480	2,087
2022년	1,234,650	275,663	110,789	52,134	19,457	4,963	1,841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각 연도

[그림 2] 생애주기별 일반수급자 분포(2022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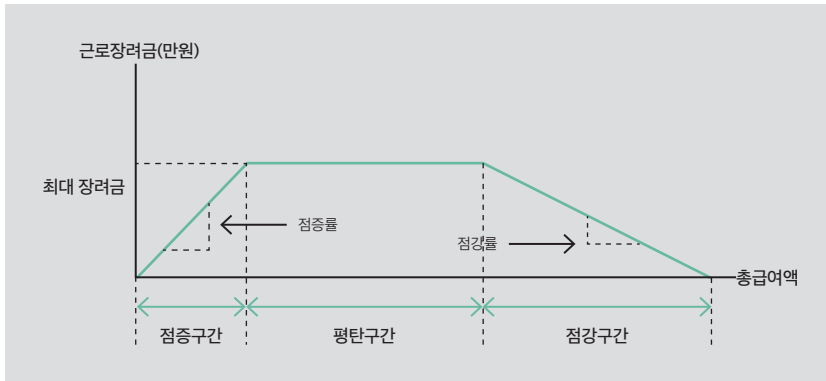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 24

[그림 2]에서는 일반수급자가 노년기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며 노동시장 은퇴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에 대한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고령화 현상과 함께 이해해야 할 주요 과제로 사료된다.

근로장려금제도는 근로자의 노동 의욕을 돋우기 위한 제도이자 동시에 저소득층 가구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된다.

## 2. 근로장려금제도 소개 및 현황

[그림 3] 근로장려금제도 구조



출처: 고지현 외(2023)

근로장려금제도는 근로자의 노동 의욕을 돋우기 위한 제도이자 동시에 저소득층 가구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된다. 처음 도입된 시기는 2006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2009년도에 처음으로 수급이 실시되었다. 제도의 취지는 생계급여제도와 같은 기존 복지제도들이 가구 소득을 지원하지만 노동 공급감소에 따른 사중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표 7>, <표 8>은 근로장려금제도의 수혜 가구 및 수혜액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7> 근로장려금 국세 통계 현황(소득 종류별)

(단위: 가구,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근로소득	1,097,257	2,452,379	2,660,504	2,535,565	2,597,564	2,377,440
사업소득	596,355	1,415,295	1,529,217	1,655,775	1,749,347	1,793,005
근로소득자 지급액	795,724	2,626,024	2,691,899	2,603,426	2,595,458	2,593,423
사업소득자 지급액	485,097	1,649,191	1,670,711	1,803,590	1,828,363	2,045,047

출처: 국세통계포털,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표 8> 근로장려금 국세 통계 현황(가구 유형별)

(단위: 가구,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단독 가구	795,432	2,381,247	2,671,439	2,736,349	2,956,175	2,877,204
홀벌이 가구	796,096	1,230,152	1,272,823	1,217,393	1,166,188	1,099,434
맞벌이 가구	102,084	273,812	270,015	253,091	239,962	208,507
단독 가구 지급액	363,454	2,068,227	2,259,795	2,382,556	2,510,791	2,692,367
홀벌이 가구 지급액	798,695	1,831,389	1,768,966	1,687,343	1,604,646	1,654,752
맞벌이 가구 지급액	118,672	400,726	362,767	358,743	329,265	313,495

출처: 국세통계포털,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우선 근로소득의  
관점에서 보면,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노동생산성과 임금이  
낮은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을 것을  
암시한다.

#### IV. 실증분석: 생계급여제도 및 근로장려금제도의 재정지출 비율 변화<sup>13)</sup>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할 제도의 수혜집단은 대부분 저소득층 가구에 해당하기에, 앞서 언급한 고령화 인구구조의 특징 중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자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다음과 같이 고민하였다. 우선 근로소득의 관점에서 보면,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노동생산성과 임금이 낮은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을 것을 암시한다. 다만 세대 별로 다른 경제성장 정도를 경험하였을 것이기에 세대 내에서의 이질성뿐 아니라 세대 간의 이질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생계급여와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는 제도의 모수 크기를 제외한 제도 형태의 큰 변화가 없었던 2015~2022년도 복지패널 자료의 가구별 소득, 자산, 부채, 가구원 수 및 가구 형태 데이터이다. 해당 자료를 가공하여 가구별 잠재적 근로장려금 및 생계급여 수혜 금액을 추정하고 연도별 추세를 확인하여 앞서 조사한 지급 현황과 비교하여 재정 추이를 살펴보는 것을 분석 목표로 하였다.

본 분석의 주요 변수인 잠재적 근로장려금 및 생계급여 수혜액은 가구별 근로장려금 및 생계급여 수혜요건 및 수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을 제도에 맞게 산정하여 생성하는 변수이다.

가구의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구별 상태변수를 가정하여 구분하였다. 상태변수는 가구주가 어떤 세대에 속하는지, 가구원 교육 수준, 가구

13) 경제학에서 흔히 탄력성의 개념과 유사한 비율 추정 시도

원 수 및 가구 형태로 가정하였다. 가구주의 세대 상태변수는, 앞서 언급한 인구 구조 고령화의 특성을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과 동일시하여,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 세대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가구원 교육 수준은 복지패널의 각 가구원의 교육 수준에 대한 범주형 자료를 활용하여 모든 가구원의 범주형 변수를 더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가구 전체의 교육 수준에 대한 대리변수의 개념이며, 인적자본 노동생산성의 차이로 인한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수준의 이질성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가구의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는 가구별 상태변수를 가정하여 구분하였다. 상태변수는 가구주가 어떤 세대에 속하는지, 가구원 교육 수준, 가구원 수 및 가구 형태로 가정하였다.

1) 베이비부머 세대 이해를 위한 기초 통계량 소개 및 해석

데이터 주요 통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증분석에 포함된 전체 가구 수는 3만 4,066가구이며, 이 중 가구주가 베이비부머 세대인 가구는 1만 2,477가구에 해당한다.<sup>14)</sup> 세대별로 교육 환경이 다르고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가구 형태가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여 세대별로 교육 정도 및 가구원 수 및 가구 형태의 이질성을 다음과 같이 여러 각도에서 정리해 보았다.

가. 가구원 평균 교육 수준 및 가구원 수에 따른 이질성

세대별 가구원 수와 교육 수준에 대한 분포는 연도별 추세를 관찰하기 전에 세대별 이질성을 예측할 수 있게 도와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교육 정도에 있다. 복지패널 가구 표본으로 확인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이전에는 초등학교 진학 이하 혹은 미취학 비율이 약 17%에 달했으나, 베이비부머 세대의 교육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초등학교 진학 이하 혹은 미취학 비율이 1%까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이상 진학 비율도 동일한 세대를 비교할 때, 약 20%에서 약 67%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원 수에 대한 이해를 위해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의 연령이 약 50~70세인 것을 감안한다면 생애 주기적으로 부모·자녀를 부양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나. 세대별 2015~2023년 연도별 평균 교육 수준 및 가구원 수 변화의 단일 분포

최근 2015년 이후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구조 고령화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이 적었다면, 총인구의 가구원 수별 가구 구성 비율을 활용하여 생계급여 수혜 조건에 따른 재정지출을 추정해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복지패널자료의 세대별 가구원 수

14) 그 외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 1만 8,158가구, 이후 세대 3,431가구가 데이터에 포함되었음

본 연구의 한계점 중 하나는 가구별 평균 교육 수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분해하여 반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가구의 형태를 따로 고려하지 않아서 가구원 수만으로는 어떤 지원이 적절할지 판단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이질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대가 흐를수록 핵가족화로 인한 1인, 2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보다,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의 분리된 저소득 노인 가구 비율이 높은 현상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인다.

### 다. 연도별 평균 교육 수준에 따른 가구 비율 이질성

<표 9> 교육 수준별 인구(2015년 기준)

(단위: %)

연령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졸업 이상
60세 이상	31.4	18.5	50.1
40~59세(베이비부머)	4.5	9.1	86.5
40세 미만	0.0	0.9	99.1

주: 통계청 자료 저자 가공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성, 연령 및 교육정도별 인구

연도별 평균 교육 수준에 따른 가구 비율의 추세는 여러 가지 효과가 혼합되어 있어 분석 시 유의할 점이 많다. 연령별 개인의 교육 비율과 가구 구성원의 평균 교육 비율은 차이가 있으나, 세대별 교육 수준의 추세는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중 하나는 가구별 평균 교육 수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분해하여 반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가구의 형태를 따로 고려하지 않아서 가구원 수만으로는 어떤 지원이 적절할지 판단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경우를 가정할 때, 경제활동이 가능한 2인 가구와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할아버지와 손자의 가구를 비교해 보자. 이 경우 유사한 생계급여액 수혜를 가정한다면, 전자의 경우에는 자활의 가능성이 높고 후자는 자활의 가능성이 낮기에 생계급여로 인한 재정지출 부담에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교육 수준은 30세 이상의 가구주 표본을 상정할 경우, 대부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로 보인다. 따라서 고령자 인구의 교육 수준 비율의 변화를 이끄는 주요 요인은 고령자의 연령·세대별 사망률일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사망률을 고려하지 않은 것 또한 한 가지 한계점으로 보인다.

### 라. 가구별 소득, 자산 분포 이질성

생계급여 및 근로장려금 수혜액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가구별 소득, 자산 등의 변수가 포함된다. 변수별로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소득변수는 가구원들

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합으로 정의되고, 자산변수는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가액이 중·저소득층 대부분의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주거용 재산의 분포를 살펴보기로 한다. 노동시장의 은퇴 연령에 따라서 소득, 자산의 분포는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연령별 이질성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변수들의 분포를 가구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세대별로 1인 가구, 2인 가구, 그리고 3인 이상 가구로 구분하여 분포함수를 활용하여 이질성을 확인하였다.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의 가구원 수별 소득과 주거용 재산 분포를 살펴본 결과, 가구 소득과 주거용 재산은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가구주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하였을 확률이 높아 소득이 적게 발생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산을 생활비용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 내부에서도 세대 간 격차로 인한 빈곤 정도의 이질성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베이비부머 세대 가구의 소득과 주거용 재산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와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지만, 그외 2인 이상의 가구에서는 가구주 연령에 따른 표본의 가구 소득과 주거용 재산 분포 이질성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 가구의 소득과 주거용 재산 분포를 살펴본 결과,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의 경우 아직 노동시장에서 은퇴하지 않은 표본이 많기 때문에 앞선 세대들과는 상당히 다른 패턴을 보였다. 우선 가구주 연령의 증가는 노동시장 숙련도, 생산성 증가와 연관이 있으므로 소득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산의 경우도 소득이 저축으로 연결되어 주거용 재산 획득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가구주 연령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분석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견한 점은 가구원 수별로 가구주 연령의 하위 25% 값을 구해보면 1인 가구는 21세, 2인 가구는 33세, 3인 이상 가구는 38세로 나타나는데,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의 청년층 혼인 여부, 자녀 유무 여부와 연관 있으며, 낮은 혼인율 및 출산율 등의 문제와 연결된다.

**마. 연도별 생계급여 평균액의 세대, 교육, 가구원 수별 이질성**

베이비부머 이전·이후 세대 가구들의 연도별 평균 교육 수준 및 가구원 수를 고려한 잠재적 생계급여 평균액의 추세를 정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분석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견한 점은  
 가구원 수별로  
 가구주 연령의 하위  
 25% 값을 구해보면  
 1인 가구는 21세,  
 2인 가구는 33세,  
 3인 이상 가구는  
 38세로 나타나는데,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의 청년층 혼인  
 여부, 자녀 유무 여부와  
 연관 있으며, 낮은  
 혼인율 및 출산율 등의  
 문제와 연결된다.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는 타 세대에 비교하여, 수혜자 집단 내에서 교육 수준 및 가구원 수 차이에 따른 수혜 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소득과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가구는 평균 잠재적 수혜액이 낮을 것이기 때문에 교육 수준 및 가구원 수와 소득 및 자산 간 양의 상관관계를 고려한다면, 교육 수준이 높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수혜액이 적을 것으로 관측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혜자 집단에서는 교육 수준에 따른 수혜액 크기의 분포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생계급여 수혜 가능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평균 수혜액이 높은 현상을 보인다.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는 타 세대에 비교하여, 수혜자 집단 내에서 교육 수준 및 가구원 수 차이에 따른 수혜 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베이비부머 이전·이후 세대 가구들의 연도별 평균 교육 수준 및 가구원 수를 고려한 잠재적 생계급여 평균액의 추세를 정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서술한 수혜 금액은 대체로 가구원 수에 따른 증가세만을 보이지만, 수급률에서는 예상한 바와 같이, 소득과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가구는 생계급여 수혜 가능성이 낮을 것이기 때문에 교육 수준 및 가구원 수와 소득과 자산 간 양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면, 교육 수준이 높거나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수혜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계급여 수혜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수혜율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 바. 연도별 근로장려금 수급액의 평균액의 세대별, 교육 수준별, 가구 형태별 이질성

베이비부머 이전·이후 세대 가구들의 연도별 평균 교육 수준 및 가구 형태를 고려한 잠재적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의 추세를 정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최대 수혜 가능 금액이 달라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형태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다른 지급 기준을 적용한다. 베이비부머 세대 혹은 이전 세대에서는 가구 형태에 따른 수혜지급액의 차이가 관찰된다. 교육 수준에 의한 근로장려금 수혜액은 비교가 어려워 보이며, 노인 일자리 사업, 종사하는 사업의 차이에 따른 사업소득의 격차, 최저임금제도 등이 함께 고려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부머 이전·이후 세대 가구들의 연도별 평균 교육 수준 및 가구 형태를 고려한 잠재적 근로장려금 수혜율의 추세를 정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 가구 형태가 맞벌이 가구인 경우의 근로장려금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2) 베이비부머 세대 이질성을 고려한 제도별 재정지출 변화 비율 분석

앞서 데이터의 세대별, 교육 수준별, 가구별 이질성을 고려한 생계급여제도와 근로장려금제도에 대한 주요 통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두 가지 주요 요인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생계급여 및 근로장려금 재정 지출 추계를 논의하려 한다. 첫 번째 주요 요인은 앞서 살펴본 고령화의 거시 경제적 특징으로 데이터 표본의 소득이나 자산에 충격이 나타날 경우, 재정지출의 변화 비율을 관찰한다. 두 번째 주요 요인은 제도 수혜요건 모수들의 변화에 따른 재정지출의 변화 비율을 관찰한다. 앞서 두 가지 분석을 진행 후, 특정 유형의 소득이나 자산 충격에 적절한 제도적 반응은 어떤 것일지를 찾아보는 것을 최종 분석으로 진행한다.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본 분석의 한계점은 가구의 행태변화를 고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가구에 시장 소득 충격이 작용할 경우 생계급여 수급액 비율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표 10> 소득 비율 변화에 따른 잠재적 생계급여 수급액 비율 변화

(단위: %)

소득 비율 변화 크기	1%	5%	10%
전체	-0.23	-1.14	-2.20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	-0.18	-0.90	-1.75
베이비부머 세대	-0.53	-2.56	-4.86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	-0.94	-4.43	-8.20
초등학교 이하	-0.12	-0.61	-1.20
고등학교 이하	-0.24	-1.15	-2.22
고졸 이상	-0.35	-1.67	-3.19
1인 가구	-0.12	-0.60	-1.18
2인 가구	-0.27	-1.32	-2.55
3인 이상 가구	-0.76	-3.62	-6.86

출처: 저자 작성

시장소득(본 연구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합을 의미)을 1%, 5%, 10% 증가함에 따른 생계급여 혹은 근로장려금 수혜액의 전체 변화율과 가구 이질성을 고려한 변화율을 비교 관찰해보았다. <표 10>은 시장소득 변화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액 비율 변화를 보여준다.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의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소득 여부가 소득 비율 증가가 잠재적 생계급여 수급액 비율 변화가 크게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세대별 효과를 제외하면 대체로 소득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구간의 탄력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데이터의 세대별, 교육 수준별, 가구별 이질성을 고려한 생계급여제도와 근로장려금제도에 대한 주요 통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생계급여 및 근로장려금 재정 지출 추계를 논의하려 한다.

시장소득 변화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액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의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소득 여부가 소득 비율 증가가 잠재적 생계급여 수급액 비율 변화가 크게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표 11> 소득 비율 변화에 따른 잠재적 근로장려금 수급액 비율 변화

(단위: %)

소득 비율 변화 크기	1%	5%	10%
전체	-0.62	-2.98	-5.64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	-0.27	-1.30	-2.52
베이비부머 세대	-1.47	-7.02	-13.20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	-1.93	-9.03	-16.54
초등학교 이하	0.23	1.09	2.06
고등학교 이하	-0.49	-2.34	-4.45
고졸 이상	-1.25	-5.97	-11.25
단독 가구	0.03	0.17	0.41
홀벌이 가구	-0.51	-2.46	-4.77
맞벌이 가구	-2.47	-11.73	-21.72

출처: 저자 작성

<표 11>은 시장소득 변화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급액 비율 변화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생계급여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 수준이 낮거나 단독 가구 집단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의 증가가 수급액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근로장려금의 점증 구간에 존재하는 표본이 분포함을 의미한다.

<표 12> 자산 비율 변화에 따른 잠재적 생계급여 수급액 비율 변화

(단위: %)

자산 비율 변화 크기	1%	5%	10%
전체	-0.13	-0.63	-1.24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	-0.14	-0.68	-1.33
베이비부머 세대	-0.06	-0.35	-0.65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	-0.02	-0.11	-0.22
초등학교 이하	-0.09	-0.44	-0.87
고등학교 이하	-0.13	-0.64	-1.24
고졸 이상	-0.15	-0.81	-1.63
1인 가구	-0.08	-0.40	-0.80
2인 가구	-0.19	-0.98	-1.90
3인 이상 가구	-0.10	-0.46	-0.92

출처: 저자 작성

자산 충격에 따른 변화에 따른 재정지출 탄력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합을 1%, 5%, 10% 증가함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액의 전체 변화율과 가구 이질성을 고려한 변화율을 비교 관찰해보았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자산 요건이 존재하는데 이는 자산이 많은 가구가 수혜받지 못하도록 만든 제도적 장치이며, 복지패널 자료는 저소득층 가구를 주 대상으로 하

므로 본 분석에서 자산 분포 변화와 근로장려금 수급액은 관련이 없다.

<표 12>의 자산 변화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액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소득 비율 변화에 따른 <표 10> 결과와 비교하여 탄력도가 낮은 것으로 관찰된다. 흥미로운 점은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의 자산 비율에 대한 생계급여 수급액 비율 변화 크기가 타 세대와 비교하여 높다는 것이다.

앞선 분석에서는 가구의 소득과 자산과 같은 경제 변수가 영향을 받을 경우의 재정지출 탄력도를 살펴보았다. 다음의 분석은 생계급여제도와 근로장려금 제도의 주요 모수를 소개하고 각 모수의 변화에 따른 급여액 비율 변화를 관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계급여제도 모수 종류는 (P1)중위소득 증가율 값과 (P2)생계급여 최대 수혜 금액 결정 시 중위소득에 곱해지는 비율(2024년 32%로 상승), (P3)근로 및 사업소득에 적용하는 공제율, 그리고 (P4)재산평가액 환산 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 값을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주요 모수는 (Q1)점증 구간이 끝나는 소득의 크기, (Q2)점감 구간이 시작되는 소득의 크기, (Q3)근로장려금을 수혜 가능한 최대 소득, (Q4)평탄 구간 근로장려금 최대 수혜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 모수 변화에 따른 탄력성 비교는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2년 표본과 2022년 제도 요건만을 활용하여 시행하였다.<sup>15)</sup>

(P1)중위소득 값 증가율의 시나리오는 임금 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및 그 예측치로 구성하였다. 임금 상승률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 임금 상승률인 3.4%,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KDI 경제전망에서 발표한 2023년 1.4%, 2024년 2.2%를 활용하였다.

<표 13> 중위소득 증가율에 따른 잠재적 생계급여 수급액 비율 변화

(단위: %)

중위소득 증가율 크기	3.4% (임금 상승률)	1.4% (경제성장률)	2.2% (예측치)
전체	4.38	1.80	2.83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	4.16	1.71	2.69
베이비부머 세대	5.36	2.19	3.45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	6.49	2.63	4.15
초등학교 이하	3.88	1.60	2.51
고등학교 이하	4.38	1.80	2.83
고졸 이상	4.80	1.97	3.10
1인 가구	3.93	1.61	2.54
2인 가구	4.72	1.93	3.04
3인 이상 가구	6.53	2.66	4.20

출처: 저자 작성

흥미로운 점은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의 자산 비율에 대한 생계급여 수급액 비율 변화 크기가 타 세대와 비교하여 높다는 것이다.

15) 모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p. 28 [그림 4]와 함께 서술하였다.

<표 14>는 생계급여 수혜요건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수급액 비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앞선 결과와 중복되는 분석으로 보이나 해당 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중위소득 비율 상승으로 인한 재정지출 부담이 동일 비율 감소로 인한 재정지출 절약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3>은 중위소득 증가율에 따라 수혜자와 수혜 금액이 동시에 증가하여 생계급여 수급액도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상 가구의 탄력도가 높은 현상은 아마도 가구원 수가 높은 가구를 형성하고 있을 상관계수가 높기 때문에 제도적인 생계급여 수급 가능 최고액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P2)생계급여 최대 수혜 금액 결정 시 중위소득에 곱해지는 비율에 대한 시나리오는 2024년 32%로 상승함에 따라, 예전으로 회귀(30%), 수혜요건 완화(34%)로 구성하였다.

<표 14> 생계급여 수혜요건 중위소득 비율에 따른 잠재적 생계급여 수급액 비율 변화

(단위: %)

생계급여 수혜요건 중위소득 비율	30%	34%
전체	-7.95	8.16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	-7.57	7.68
베이비부머 세대	-9.61	10.16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	-11.67	13.16
초등학교 이하	-7.07	7.12
고등학교 이하	-7.95	8.14
고졸 이상	-8.71	9.11
1인 가구	-7.17	7.25
2인 가구	-8.52	8.73
3인 이상 가구	-11.56	12.80

출처: 저자 작성

<표 15> 근로 및 사업 소득에 적용하는 공제율에 따른 잠재적 생계급여 수급액 비율 변화

(단위: %)

근로 및 사업 소득에 적용하는 공제율 크기	35%	40%	50%
전체	1.93	4.09	9.69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	1.34	2.71	5.87
베이비부머 세대	4.39	9.64	24.19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	8.90	21.58	62.32
초등학교 이하	0.84	1.66	3.56
고등학교 이하	1.90	3.99	9.21
고졸 이상	2.97	6.51	16.48
1인 가구	0.97	1.99	4.38
2인 가구	2.34	4.75	10.48
3인 이상 가구	8.41	19.75	54.14

출처: 저자 작성

<표 14>는 생계급여 수혜요건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수급액 비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앞선 결과와 중복되는 분석으로 보이나 해당 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중위소득 비율 상승으로 인한 재정지출 부담이 동일 비율 감소로 인한 재정지출 절약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P3)근로 및 사업 소득에 적용하는 공제율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30%를 적용하고 있다. 시나리오는 노동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35%, 40%, 50%로 상승시키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근로 및 사업 소득에 적용하는 공제율에 대한 탄력도가 높은 집단은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 집단으로 보인다.

(P4)재산평가액 환산 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 값은 주거용 재산은 1.04%, 일반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로 명시되어 있다. 시나리오는 각 재산 종류별 환산 비율을 1%p 상승하였을 경우를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근로 및 사업 소득에 적용하는 공제율에 대한 탄력도가 높은 집단은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 집단으로 보인다.

**<표 16> 재산평가액 환산 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에 따른 잠재적 생계급여 수급액 비율 변화**

(단위: %)

재산 종류별 환산 비율 1%p 상승 기준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전체	-0.33	-0.83	-0.72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	-0.36	-0.90	-0.78
베이비부머 세대	-0.13	-0.41	-0.30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	-0.04	-0.05	-0.21
초등학교 이하	-0.37	-0.64	-0.34
고등학교 이하	-0.35	-0.80	-0.72
고졸 이상	-0.21	-1.14	-1.10
1인 가구	-0.25	-0.44	-0.49
2인 가구	-0.46	-1.40	-1.05
3인 이상 가구	-0.18	-0.67	-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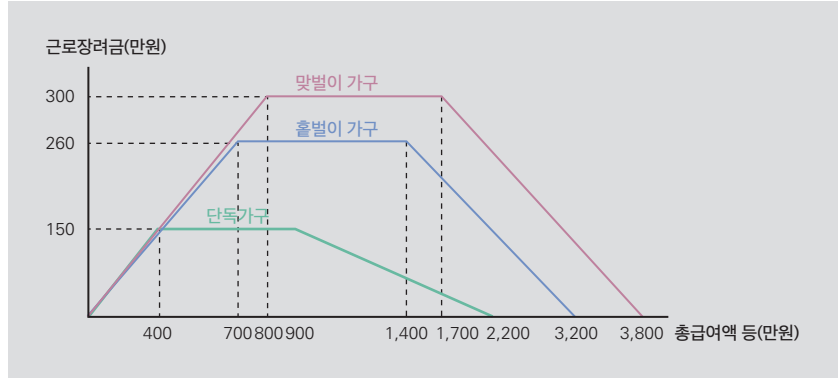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재산평가액 환산 비율은 상대적으로 일반재산에 대한 탄력도가 높게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의 수급액에 대한 탄력도가 높았다. 교육 수준에 따른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의 탄력도가 높은 점도 흥미로웠다.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의 탄력도가 높다는 점인데 이는 단순한 표본의 대표성 문제인지 추후 연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림 4]는 근로장려금제도의 제도 모수 변화에 따른 재정지출 비율에 대한 분석이다.

[그림 4]는 근로장려금 제도의 제도 모수 변화에 따른 재정지출 비율에 대한 분석이다.

[그림 4] 2022년도 근로장려세제



출처: 고지현 외(2023)

(Q1)점증 구간이 끝나는 소득의 크기를 1% 감소 혹은 1% 증가할 경우를 시나리오 구성으로 진행하였다.

<표 17> 점증 구간이 끝나는 소득의 크기에 따른 잠재적 근로장려금 수급액 비율 변화

(단위: %)

점증 구간이 끝나는 소득의 크기 증가율	-1%	1%
전체	0.32	-0.32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	0.41	-0.41
베이비부머 세대	0.13	-0.13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	0.12	-0.12
초등학교 이하	0.54	-0.55
고등학교 이하	0.35	-0.35
고졸 이상	0.17	-0.17
1인 가구	0.50	-0.49
2인 가구	0.30	-0.30
3인 이상 가구	0.02	-0.02

출처: 저자 작성

점증 구간이 끝나는 소득이 감소하는 것의 의미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증가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액의 크기가 더 가파르게 증가함을 의미하여 평탄 구간에 더 빨리 진입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의 탄력도가 높게 도출되었다.

(Q2)점감 구간이 시작되는 소득의 크기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도 앞선 분석과 유사하게 1% 감소 혹은 1% 증가할 경우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표 18> 점강 구간이 시작되는 소득의 크기에 따른 잠재적 근로장려금 수급액 비율 변화

(단위: %)

점강 구간이 시작되는 소득의 크기 증가율	-1%	1%
전체	-0.27	0.27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	-0.19	0.19
베이비부머 세대	-0.41	0.42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	-0.45	0.45
초등학교 이하	-0.10	0.10
고등학교 이하	-0.24	0.24
고졸 이상	-0.38	0.39
1인 가구	-0.15	0.15
2인 가구	-0.26	0.26
3인 이상 가구	-0.58	0.59

출처: 저자 작성

점강 구간이 시작되는 소득 크기의 감소는 평탄 구간을 감소시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총근로장려금 재정지출은 감소하게 된다. 앞의 분석과 달리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의 탄력도가 높게 나타난다.

점강 구간이 시작되는 소득 크기의 감소는 평탄 구간을 감소시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총근로장려금 재정지출은 감소하게 된다. 앞의 분석과 달리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의 탄력도가 높게 나타난다.

(Q3)근로장려금을 수혜 가능한 최대 소득의 크기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도 앞서의 분석과 유사하게 1% 감소 혹은 1% 증가할 경우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표 19> 근로장려금을 수혜 가능한 최대 소득의 크기에 따른 잠재적 근로장려금 수급액 비율 변화

(단위: %)

근로장려금을 수혜 가능한 최대 소득의 크기 증가율	-1%	1%
전체	-0.62	0.63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	-0.36	0.36
베이비부머 세대	-1.12	1.10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	-1.57	1.66
초등학교 이하	-0.14	0.14
고등학교 이하	-0.50	0.50
고졸 이상	-1.05	1.06
1인 가구	-0.32	0.32
2인 가구	-0.55	0.55
3인 이상 가구	-1.72	1.75

출처: 저자 작성

수혜 가능 최대 소득을 감소시키면 점강 구간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되며 전체 근로장려금 재정지출은 감소하게 된다. 앞선 분석과 유사하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의 탄력도가 크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고령화의 특징을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징으로 논의의 범위를 축소하여, 생계급여제도 및 근로장려금제도에 영향을 주는 세대, 교육 수준, 가구 구성에 대한 이질성 고려와 제도설계에 필요한 모수들을 기반으로 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공하였다.

(Q4)평탄 구간 근로장려금 최대 수혜액의 크기에 분석은 앞선 분석과 조금 다르게 진행하였다. 1% 감소 혹은 1% 증가할 경우의 시나리오는 이론적으로 전체 수혜액의 1% 감소 혹은 1% 증가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평탄 구간 근로장려금 최대 수혜액의 크기 비율의 조정 크기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설명하는 [그림 3]의 사다리꼴 모든 구간에서 높이 변화 비율(넓이 비율)과 동일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해석된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표 20>의 결과로 재확인하였다.

**<표 20> 평탄 구간 근로장려금 최대 수혜액의 크기에 따른 잠재적 근로장려금 수급액 비율 변화**

(단위: %)

평탄 구간 근로장려금 최대 수혜액의 크기 증가율	-1%	1%
전체	-1.00	1.00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	-1.00	1.00
베이비부머 세대	-1.00	1.00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	-1.00	1.00
초등학교 이하	-1.00	1.00
고등학교 이하	-1.00	1.00
고졸 이상	-1.00	1.00
1인 가구	-1.00	1.00
2인 가구	-1.00	1.00
3인 이상 가구	-1.00	1.00

출처: 저자 작성

##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고령화의 특징을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징으로 논의의 범위를 축소하여, 생계급여제도 및 근로장려금제도에 영향을 주는 세대, 교육 수준, 가구 구성에 대한 이질성 고려와 제도설계에 필요한 모수들을 기반으로 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공하였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고려할 경우,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은퇴하였을 확률이 높고, 베이비부머 세대는 은퇴 연령에 근접함에 따라 세대별 생애주기를 고려한 이질성 분석이 중요해 보인다. 특히 교육 수준의 증가와 인적자본 고도화, 산업화 등을 한꺼번에 이뤄낸 한국 경제의 가파른 성장을 함께한 세대이기에 베이비부머 세대 내에서도 이질성이 클 수 있어 추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분석 및 주요 통계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평균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이전과 이후의 교육 수준의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의 분리된 저소득 노인 가구 비율이 높은 현상이 관찰된다.

셋째,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의 가구 소득과 거주용 재산이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베이비부머 세대 가구의 소득과 거주용 재산의 분포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와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지만, 그 외 2인 이상의 가구에서는 가구주 연령에 따른 표본의 가구 소득과 거주용 재산 분포 이질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 가구의 소득과 주거용 재산 분포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은퇴하지 않은 표본이 많기 때문에 가구주 연령의 증가는 노동시장 숙련도와 생산성 증가와 연관이 있으므로 소득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산의 경우도 소득이 저축으로 연결되어 주거용 재산 획득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가구주 연령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넷째, 베이비부머 이전·이후 세대 가구들의 연도별 평균 교육 수준 및 가구원 수를 고려한 잠재적 생계급여 평균액 분석 결과, 수혜자 집단에서는 교육 수준에 따른 수혜액 크기의 분포가 유사하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평균 수혜액이 높은 현상을 보인다.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는 수혜자 집단 내에서 교육 수준 및 가구원 수 차이에 따른 수혜 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베이비부머 이전·이후 세대 가구들의 연도별 평균 교육 수준 및 가구원 수를 고려한 잠재적 생계급여 지급률은 소득과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가구들이 분포할수록 교육 수준이 높거나,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수혜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계급여 수혜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수혜율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베이비부머 이전·이후 세대 가구들의 연도별 평균 교육 수준 및 가구 형태를 고려한 잠재적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가구의 형태 이질성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다른 지급 기준을 적용한다. 베이비부머 세대 혹은 이전 세대에서는 가구 형태에 따른 수혜 지급액의 차이가 관찰된다. 베이비부머 이전·이후 세대 가구들의 연도별 평균 교육 수준 및 가구 형태를 고려한 잠재적 근로장려금 수혜율은 교육 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 가구 형태가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 낮게 나타난다.


특히 교육 수준의 증가와 인적자본 고도화, 산업화 등을 한꺼번에 이뤄낸 한국 경제의 가파른 성장을 함께한 세대이기에 베이비부머 세대 내에서도 이질성이 클 수 있어 추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의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에 대한  
 탄력도가 높다는 점인데  
 이는 단순한 표본의  
 대표성 문제인지  
 추후 연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섯째, 시장소득 변화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액 비율 변화는 다음과 같다.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의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소득 여부가 소득 비율 증가, 잠재적 생계급여 수급액 비율 변화를 크게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대체로 소득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구간의 탄력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소득 변화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급액 비율 변화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생계급여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 수준이 낮거나 단독 가구 집단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의 증가가 수급액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 가능하다. 자산 변화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액 비율 변화는 다음과 같다. 소득 비율 변화에 따른 결과와 비교하면 탄력도가 낮은 것으로 관찰된다. 흥미로운 점은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의 자산 비율에 대한 생계급여 수급액 비율 변화 크기가 타 세대와 비교하여 높다는 것이다.

일곱째, 생계급여제도 모수 종류는 (P1)중위소득 증가율 값과 (P2)생계급여 최대 수혜 금액 결정 시 중위소득에 곱해지는 비율(2024년 32%로 상승), (P3)근로 및 사업소득에 적용하는 공제율, 그리고 (P4)재산평가액 환산 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 값을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주요 모수는 (Q1)점중 구간이 끝나는 소득의 크기, (Q2)점강 구간이 시작되는 소득의 크기, (Q3)근로장려금을 수혜가능한 최대 소득, (Q4)평탄 구간 근로장려금 최대 수혜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 모수 변화에 따른 탄력성 비교는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2년 표본과 2022년 제도 요건만을 활용하여 시행하였다. (P1)중위소득 증가율에 따라 수혜자와 수혜 금액이 동시에 증가하여 생계급여 수급액도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 가구의 탄력도가 높은 현상도 관찰 가능하다. (P2)생계급여 수혜요건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수급액 비율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중위소득 비율 상승으로 인한 재정지출 부담이 동일 비율 감소로 인한 재정지출 절약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P3)근로 및 사업소득에 적용하는 공제율에 대한 탄력도가 높은 집단은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가구 집단으로 보인다. (P4)재산평가액 환산 비율은 상대적으로 일반재산에 대한 탄력도가 높게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베이비부머 이전 세대의 수급액에 대한 탄력도가 높았다. 교육 수준에 따른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의 탄력도가 높은 점도 흥미로웠다.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의 탄력도가 높다는 점인데 이는 단순한 표본의 대표성 문제인지 추후 연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Q1)점중 구간이 끝나

는 소득 변화의 경우, 저소득층의 탄력도가 높게 도출되었다. (Q2)점강 구간이 시작되는 소득 변화는 앞의 분석과 달리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의 탄력도가 높게 나타난다. (Q3)수혜 가능 최대 소득 변화는 앞선 분석과 유사하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의 탄력도가 크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으나 공공부조제도의 법령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적에 대한 서술 보완, 혹은 제도 설계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개념을 고려하여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것이 명확하게 공공부조제도의 영역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그 이유는 복지,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공부조제도의 목적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뒷받침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다는 목적과 일치한다. 하나의 제도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고 재설계하다 보면 추후에 중복 효과가 나타나는 제도 확인이 어려워지며, 제도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후적 평가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 가능하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의 목적에 맞는 설계와 상대적 빈곤의 해결에 대한 두 가지 목적을 따로 고려하는 제도를 각각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절대적 빈곤보다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개념을 고려하여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것이 명확하게  
공공부조제도의  
영역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 참고문헌

- 강상경, 「삶의 만족도와 관련요인의 세대 간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한 베이비 붐 세대와 이전 및 이후 세대 간 비교」, 『사회복지연구』, 제43권 제4호, 2012, pp. 91~119.
- 고지현·김정환·박정흠, 『고령자의 경제활동과 정부정책에 대한 연구: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2023.
- 김기호·유경원, 「인구고령화가 인적자본 투자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험개발연구』, 제19권 제3호, 보험연구원, 2008, pp. 165~207.

- 김경아, 「우리나라의 세대별 노후 준비 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베이비부머와 이전 및 이후세대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64권, 2014, pp. 7~30.
- 김민정·문정숙, 「베이비붐 세대와 베이비붐 이전 세대의 소비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의 비교」, 『소비문화연구』, 제19권 제3호, 2016, pp. 31~54.
- 김을식·이지혜, 『공공부조제도 재설계 방안연구: 대상자 선정 및 급여방식을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17, pp. 1~106.
- 김유경·진미정·송유진·김가희, 『가구·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
- 김창민·김은경·신광영, 「가구구조와 소득불평등」, 『한국인구학』, 제43권 제1호, 2020, pp. 31~59.
- 김태완 외, 『노인빈곤의 실태와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1.
- 나원희, 「OECD 국가의 교육비 지출에 따른 소득분배 효과」,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9(3), 2019, pp. 1~34.
- 남상호·권순현,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빈곤 분석: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KReIS)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pp. 3~32.
- 남상호·임용빈, 「정년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박형수·전병목,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조세연구원, 2009.
- 반승주·김재태, 「중·고령 1인가구의 자산, 부채, 행복에 관한 연구: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동산경영』, 제16집, 2017, pp. 355~384.
- 성명재, 「인구·가구특성의 변화가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무직가구, 부녀자가구 특성 및 인구고령화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2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5, pp. 215~236.
- 신상화·김문정, 『연구보고서 19-02 근로장려세제가 가구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 - 최저임금제도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020.
- 안종석, 『연구보고서 16-08 소득수준별 세부담 평가와 발전방향』, 2016.
- 이재준, 「고령화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정책시사점」, 『한국경제포럼』, 2016, pp. 83~102.
- 조현승·이동희·고대영·김승민, 『우리나라 각 세대의 특징 및 소비구조 분석 - 포스트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17.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제40권 40호, 2023.

홍석철·전한경,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의 심화」, 『한국경제의 분석』, 제19권 제1호, 한국  
금융연구원, 2013, pp. 72~114.

보건복지부,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통계청, 「2022 한국의 사회지표」

\_\_\_\_\_,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Easterlin, R. A., Schaeffer, C. M., and Macunovich D. J., “Will the Baby Boomers Be Less Well Off Than Their Parents? Income, Wealth, and Family Circumstances Over the Life Cycle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1993, pp. 497~522.

Keister, L. A., and Deeb-Sossa, N., “Are Baby Boomers Richer Than Their Parents? Intergenerational Patterns of Wealth Ownership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2), 2001, pp. 569~579.

웹사이트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sns/2023/policyA.do>

한국재정정보원, [https://www.fis.kr/ko/major\\_biz/finance\\_info\\_analysis/brief/collection?articleSeq=2428](https://www.fis.kr/ko/major_biz/finance_info_analysis/brief/collection?articleSeq=2428)



# 특집

- + 2024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 수상자 필립 스트랙의 경제학적 기여  
문지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01

# 2024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 수상자 필립 스트랙의 경제학적 기여



문지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jwmoon@kipf.re.kr

## I. 서론

2024년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John Bates Clark Medal)’의 영예는 예일대학(Yale University)의 필립 스트랙(Phillipp Strack) 교수에게 돌아갔다.<sup>1)</sup> 존 베이츠 클라크(John Bates Clark, 1847~1938)는 미국의 경제학자로서 19세기 말 윌리엄 제본스(William Jevons), 레온 왈라스(Leon Walras) 등에 의해 제시되었던 한계효용이론을 정리하고 체계화함으로써 경제학의 기틀을 세웠다고 평가받으며, 대표 저서로는 『부의 분배(The Distribution of Wealth)』(1899), 『부의 철학(The Philosophy of Wealth)』(1886), 『경제이론의 본질(Essentials of Economic Theory)』(1907) 등이 있다. 미국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에서는 그의 이러한 업적을 기려 경제학 발전에 기여를 한 40세 미만의 미국 경제학자에게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은 1947년부터 격년으로 선정되다가 2009년 이후 연간 수상으로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폴 새뮤얼슨(Paul Samuelson),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로버트 솔로우(Robert Solow), 게리 베커(Gary Becker) 등의 쟁쟁한 경제학자들이 이 상을 수상했고, 비교적 최근에는 에스터 두플로(Esther Duflo), 에마누엘 사에즈(Emmanuel Saez) 등의 학자들이 이 상을 수상했다.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수상한 많은 경제학자들이 훗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여 예비 노벨상으로 불리기도 한다.<sup>2)</sup>

1) 필립 스트랙은 독일의 본 대학(University of Bonn)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를 모두 마쳤고,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를 거쳐 현재 예일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 역대 수상자 내역 및 노벨상 수상 여부 등은 부록에서 소개한다.

이론경제학자로서는 율리 사니코프(Yuliy Sannikov) 이후 8년 만에 필립 스트랙이 이 상을 수상했는데, 미국경제학회는 스트랙의 수상 이유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에 대한 기여를 들었다.

스트랙이 기여한 첫 번째 분야는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과 의사결정이론(Decision Theory)이다. 구체적으로, 스트랙은 이론적 정립이 비교적 더뎠던 행동경제학적인 특성을 반영한 동태적 최적화 및 정보습득에 관한 여러 이론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이론이 어떻게 실증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지도 보였다. 또한, 경제학뿐 아니라 심리학 등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표류확산모형(Drift-Diffusion Model, DDM)을 일반화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추정법을 제시함으로써 의사결정 이론에 기여하고 있다.

두 번째 분야는 정보이론 분야로, 스트랙은 정보이론에서 추상적인 개념들을 구체화함으로써 정보이론이 분석하는 대상을 넓히고 새로운 문제들을 경제학의 모형을 통해 다룰 수 있도록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Privacy)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 정보 습득의 한계비용이 일정하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이 경제학의 모형으로 도입되어 한 차원 더 높은 논의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은 메커니즘 디자인(Mechanism Design) 분야에서의 방법론적인 기여이다. 스트랙은 함수의 변동성과 관련된 ‘Majorization’<sup>3)</sup>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경제학의 많은 최적화 문제가 Majorization

관계로 정의된 집합에서의 최적화 문제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방법론으로는 풀지 못했던 일반적이지 않은 경매 문제 및 최적 보험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미국경제학회에서는 이러한 스트랙의 기여가 행동경제학 및 의사결정이론에서 우리의 지식의 경계를 넓히고, 정보이론 및 메커니즘 디자인에서 새로운 이론적·실증적인 연구를 촉발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는 이론 경제학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며, 넓게 보면 모든 경제학 논문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스트랙의 연구는 비록 정책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보다 큰 차원에서 정책제언에 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스트랙의 경제학적 기여를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서술한다. 제II장에서는 의사결정이론-행동경제학에서의 기여를 소개하고, 제III장에서는 정보이론에서의 기여를 서술한다. 제IV장에서는 메커니즘 디자인에서의 기여를 소개하고, 제V장에서는 그의 연구가 가지는 가치 및 의의를 정리하며 결론을 맺는다.

## II. 의사결정이론-행동경제학에서의 기여

### 1. 의사결정이론과 행동경제학의 접목

행동경제학은 합리적 인간을 가정하는(고전) 경

3) Majorization이라는 수학 용어의 널리 통용되는 번역이 없어 원어를 그대로 쓰기로 한다.

제학의 가정에서 벗어나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의 전망 이론(Prospect theory)을 비롯한 많은 행동경제학의 연구들은 인간의 선택에서 합리적 인간의 가정이 어떻게 위배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이러한 행동경제학의 한 가지 한계는 이론의 검증이 주로 실험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실험적인 상황과 달리 현실에서는 선택과 정보의 습득이 동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행동경제학의 여러 이론에서는 선호의 시간적 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이 나타나는데,<sup>4)</sup> 이에 따라 엄밀한 이론 정립이 쉽지 않고, 따라서 실증연구의 발전 역시 비교적 더딘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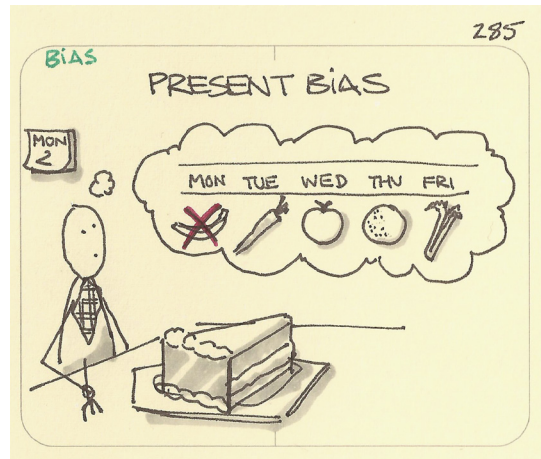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들에서는 실험적 상황에서 검증된 행동경제학의 개념을 확장해서 실제 데이터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Heidhues and Strack(2021)은 이러한 시도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엄밀한 접근이 왜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 관심을 갖는 개념은 현재 편향(Present Bias)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 편향이란 현재와 미래의 가치 사이에 매기는 할인율이 같은 시간 차이를 갖는 미래의 두 시점 사이의 할인율보다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현재 편향의 예시를 들기 위해서 오늘 0.8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운동하면 내일 1의 보상을 받는 경우

를 상정하도록 하자. 만약 어떤 개인에게 두 시점 간의 할인율이 0.9로 주어져 있다면, 그 개인은 운동을 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 개인이 현재를 다른 미래의 시점과 달리 취급하여 오늘과 내일 사이에만 할인율이 0.7로 적용된다면,<sup>5)</sup> 이 개인은 오늘 운동을 해서 내일 보상을 받는 것은 선호하지 않지만, 내일 운동을 해서 모래 보상을 받는 것은 선호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를 다른 미래의 시점과 다르게 특별히 더 중요하게 취급하는 선호를 ‘현재 편향이 있는 선호’라고 부르며, 이 선호는 시간적으로 비일관적이다. 왜냐하면 이 개인은 내일이 된다면 운동을 하지 않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오늘 0.8의 효용을 주는 치킨을 먹으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내일 1의 비용을 내는 경우를 상정할 경우, 현재 편향이 없는 개인은 치킨을 먹

[그림 1] 현재 편향 선호



출처: <https://sketchplanations.com/present-bias>

4) 예를 들어, 전망 이론에서는 개인이 아주 작은 확률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고, 확실하지 않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바라보는데, 이러한 비선형적인 확률변환은 베이스 법칙에 위배되고, 따라서 동태적으로 선호가 비일관적일 수 있다. 개인이 시간을 균등하게 할인하지 않는 경우에도(Hyperbolic discounting) 선호가 비일관적일 수 있는데, 이는 추후에 설명할 현재 편향과 관련된다.

5) 이 경우 단위시간 할인율은 0.9이고, 현재와 미래 사이에는 추가적인 할인율 0.7/0.9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지 않겠지만, 현재 편향이 있다면 내일의 치킨은 선호하지 않으나 오늘은 치킨을 먹을 수 있다. 이처럼 현재 편향이 있는 개인은 보상이 먼저 오는 것은 일찍 실현하려 하고, 보상이 미래에 오는 것은 미루고자 하며, 비슷한 이유로 일을 하지 않고 끝다가 데드라인에 맞춰서 끝내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일을 데드라인에 맞춰 끝내는 패턴을 자료에서 관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편향의 존재를 실증적으로 밝히고 그 정도를 추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Heidhues and Strack(2021)은 추가적인 자료가 없이 언제 일을 끝냈는지에 대한 관측만으로는 현재 편향이 있는 개인의 선택인지, 아니면 합리적 개인의 효용 최적화에 따른 선택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트랙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만약 일을 수행할 때 개인이 얻는 효용이 확률적으로 변한다면 기다리는 것의 옵션가치 때문에 데드라인에 가까워질수록 일을 끝낼 확률이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숙제를 데드라인에 맞춰서 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는 현재 편향이 있는 까닭일 수도 있지만, 숙제를 안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숙제가 취소되거나 누군가가 숙제를 공유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스트랙은 앞의 두 가지 상황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결과를 엄밀하게 보여주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편향이 있는 개인이 언제 일을 할지에 대해 선택할 때 나올 수 있는 패턴을 복잡한(Sophisticated) 경

제주체와 단순한(Naive) 경제주체에 대해<sup>6)</sup> 풀어내고, 각각의 패턴에 대해 합리적 경제주체의 선택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효용의 확률분포가 존재함을 보임으로써 언제 일을 끝냈는지의 정보만으로 현재 편향을 식별(Identification)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는 현재 편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재 편향이 어떠한 데이터로부터도 식별될 수 없다는 결과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현재 편향을 식별하기 위해 어떠한 데이터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 알려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는 행동경제학의 검증 및 활용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엄밀하게 접근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 2. 행동경제학적 개념의 새로운 적용

Heidhues and Strack(2021)이 행동경제학의 개념을 엄밀하게 적용하여 새로운 함의를 도출해 냈다면, 스트랙의 다른 논문 Heidhues, Koszegi, and Strack(2018)은 행동경제학의 개념을 새로운 질문에 적용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함의를 주는 논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의 주제가 되는 개념은 자기 과신(Overconfidence)으로, 개인이 자기의 능력에 대해 갖는 주관적인 믿음(Belief)이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믿음보다 더 높을 경우 자기 과신이 있다고 부른다. 이는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지만, 합리적 경제주체가 어떻게 자기 과신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직관적이

6) 본인의 시간적 비일관성을 이해하고 있다면 복잡한 경제주체이고, 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경제주체라고 정의된다. 앞서 처럼 운동의 예시를 들면, 개인이 내일의 자신이 운동하지 않을 것을 이해하여(비록 오늘의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내일 운동을 하는 것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헬스장을 등록하지 않는다면 이 개인은 복잡한 경제주체이고, 내일 운동하지 않을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오늘 헬스장을 등록한다면 이 개인은 단순한 경제주체이다.

지 않은데, 합리적 믿음은 정보가 쌓임에 따라 실제의 능력으로 수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sup>7)</sup>

그래서 선행연구들은 주로 합리적인 경제주체가 어떻게 자기 과신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럴 경우 자기 과신의 정도는 어떻게 결정되고 식별될 수 있는지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Heidhues, Koszegi, and Strack(2018)은 관점을 달리해서 개인이 자기 과신을 유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해 질문하지 않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기 과신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받아들인 상태로, 자기 과신을 가진 개인이 다른 사람의 능력에 대한 학습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에 대해 Heidhues, Koszegi, and Strack(2018)이 내놓은 대답은 다음과 같다. 자기 과신이 있는 사람은 정보가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의 능력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게 되고, 이러한 과소평가 경향은 정보가 쌓이면서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가 중요할 때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Heidhues, Koszegi, and Strack(2018)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팀플레이의 예시로 이해할 수 있다. 자기 과신이 있는 개인이 타인과 팀을 이루어서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의 결과가 팀 모두의 능력과 운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을 상정하도록 하자. 논의를 간단히 하기 위해 자기의 능력에 대한 학습은 하지 않고 팀의 성과는 완벽하게 관측되는 상황을 상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팀의 성과는 자신의 평균적인 기대보다 낮게 나오고, 따라서 타인의 능력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게 된다.<sup>8)</sup> 여기에 더해 스트랙의 중요한 직관은 이러한 과소평가 경향이 팀의 업무가 정확히 나뉘어져 각자가 할 일을 하는 경우보다 개인이 팀의 업무를 배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경우에 더 크다는 것이다.

과소평가 경향이 일의 배분과 관계가 되는 이유는 타인에 대한 평가가 배분에 영향을 끼치고, 이것이 곧 더 큰 과소평가를 불러일으키는 상호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자기 과신을 가진 개인이 팀의 업무를 배분할 경우, 본인의 자기 과신 때문에 나타나는 팀의 낮은 업무성과를 타인의 잘못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업무 비중을 더 늘리게 된다. 그러면 팀의 업무성과는 자신의 기대보다 더 낮아지고, 개인은 이를 타인의 능력이 낮다는 것에 대한 강한 증거로 판단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 과신을 가진 개인의 시점에서 타인들은 업무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팀의 성과를 크게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업무 비중을 더 늘리게 되고, 이에 따라 성과는 더 떨어지며, 이는 타인의 능력에 대한 더 큰 불신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더 큰 편향이 발생한다.<sup>9)</sup>

같은 이유로, 행동의 결과가 더 중요할 경우 본인의 믿음보다 업무성과 저해가 더 크게 발생하고,

7) 합리적인 경제주체가 베이츠 법칙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고, 실제 능력이 경제주체가 생각하는 가능 세계에 들어와 있을 경우

8) (평균적으로) 낮은 업무성과는 본인 혹은 타인의 낮은 능력에서 기인하는데 본인의 능력에 대한 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9) 축구 경기로 예를 들면, 자기 과신을 가진 스트라이커가 마무리로 골을 넣지 못하면서 패스를 해준 미드필더의 탓을 할 때보다, 자기 과신을 가진 미드필더가 팀원 스트라이커를 무시해서 패스 자체를 하지 않고 혼자 축구를 하는 경우가 팀의 성과도 더 나쁘고 타인에 대한 잘못된 평가 정도도 더 크다.

이는 타인의 능력에 대한 더 큰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Heidhues, Koszegi, and Strack(2018)의 이러한 직관은 행동경제학의 개념이 현실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편, 집단의 일원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겸손의 미덕을 보여준다.

행동경제학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집단에서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로 Harel, Mossel, Strack and Tamuz(2020)가 있다. 이 논문은 어떠한 공통된 상태에 대해 각 개인이 독립적인 신호를 받고 개인적으로 선택을 할 때, 독립적인 신호를 받은 집단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공통된 상태에 대한 학습이 얼마나 빨라지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이때, 이 논문에서 관심을 가지는 질문은 각 개인이 다른 개인의 선택을 볼 수 있지만 신호는 볼 수 없는 경우의 학습에 관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정책이 도입된 후 그 정책의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논의를 한정시키기 위해 이 정책의 효과는 모든 사람에게 좋거나 모든 사람에게 나쁘다고 가정하고, 각 개인이 관측하는 신호는 정책의 효과성에 독립적인 오차항을 더한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때, 각 개인은 정책의 효과에 대해 스스로 관측하는 정보가 있는 한편,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정책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파악하는데, 편의상 SNS에 올라오는 정보는 정책이 '좋다' 혹은 '나쁘다'로만 표현되며,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가진 정보하에서 합리적인 믿음에 근거하여 정책이 좋다 혹은 나쁘다고 표현한다고 가정한다.

일반적인 베이시안 학습 문제를 생각할 경우,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독립적인 신호의 개수도 늘

어나고 따라서 실제 상태에 대한 학습도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직관적인 추측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호를 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각 개인의 선택에서 SNS를 통해 얻는 정보에 비해 개인이 새롭게 받는 정보의 중요성은 작아지고 따라서 SNS에 새로운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 역시 작아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개인적인 신호가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믿음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따라서 이 개인이 관측했던 긍정적인 신호는 집단학습에 이용이 될 수 없는 것이다.

Harel, Mossel, Strack and Tamuz(2020)는 이와 같이 신호가 직접 학습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해 추론되는 경우의 집단학습에 대한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집단이 아무리 많은 사람의 선택을 통해 학습하더라도 어떤 정해진 숫자  $k$ 개의 독립적인 신호를 보고 학습하는 것보다 실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더 느리다는 것을 보였다. 이때,  $k$ 는 신호의 분포에만 의존하며 오차항의 분포가 정규분포일 경우 그 값은 4에 불과하다. 이는 집단학습에 있어서 비록 다수의 의견과 다를지라도 각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3. 의사결정이론에서의 이론적·실증적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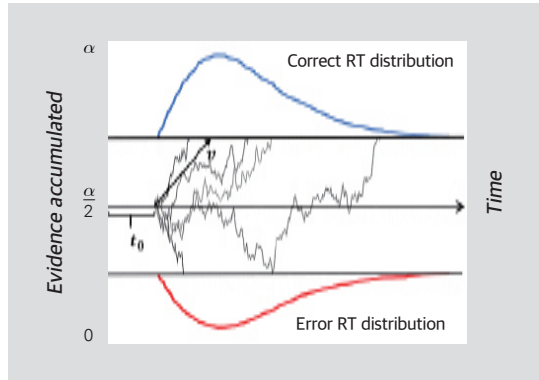
의사결정이론과 관련된 스트랙의 중요한 기여 중 하나는 표류확산모형과 관련된 이론적·실증적인 기여이다. 표류확산모형이란 정보가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모형으로, 정보를 주로 표류(Drift)가 있는 확산과정(Diffusion process)

을 통해 기술하기 때문에 표류확산모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sup>10), 11)</sup> 현실의 많은 선택 과정은 표류확산모형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수학 문제를 풀며 1번이 정답일지 2번이 정답일지 고민하는 것이나, 대학에 입학할 때 경제학과에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통계학과에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역시 표류확산모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 문제에서는 많은 경우 정답을 맞힌다는 개념이 존재한다. 앞선 수학 문제의 경우 정답은 명확하고, 과 선택의 경우 역시 모든 정보 집합 위에서 두 학과에 대한 선호가 완벽하게 정의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정답을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태에서 더 높은 효용을 주는 학과를 선택한 경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선택은 모든 정보가 밝혀진 이후에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수집 후에 결정하더라도 그 결정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이때, 정답을 맞히는 것의 효용을 1, 그렇지 못하는 것의 효용을 0으로 두고 더 생각하는 것의 한계비용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최적의 선택 전략은 어떤 선택지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확률이 일정 임계치를 넘어 갔을 때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 아래 표류확산모형에서 도출되는 임계치의 특징은 그 값이 정답을 맞히는 효용 및 정보비용에 의존하나 시

[그림 2] DDM 예시



출처: Cohen et al., 2018의 Figure 2

간에는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정답이라는 믿음이 x%가 넘어가면 선택을 하는 것이 최적이고, 그 임계치 x%는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지와 무관하게 결정된다는 뜻이다.

이 임계치가 시간과 독립적이기 때문에 표류확산모형의 결과로 나타나는 ‘정답을 맞힐 확률’은 선택을 내리기까지 걸리는 시간과는 독립이다. 즉, 이와 같은 원리로 결정을 내린 사람이 수학 문제를 1분 만에 푼 경우와 20분 만에 푼 경우를 비교해보면, 정답을 맞힐 확률은 양쪽이 똑같은 것이다.<sup>12)</sup> 일반적으로 선택까지 걸리는 시간은 정답을 맞힐 확률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영향을 끼친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정보효과로 이는 선택까지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효과이다. 이 효과는 정답을 맞힐 확률과 선택시간 사이의 양

10) 통계학에서 확산과정(Diffusion process)이란 연속시간에 정의된 확률과정으로서 각각의 실현들이 시간에 대해 연속적이고 마코프 성질을 만족하는 확률과정을 말한다. 대표적인 확산과정으로는 브라운 운동(Brownian motion)이 있다. 확산과정이 시간에 대해 평균적으로 변하는 정도를 표류(Drift)라고 부르며, 많은 경우 확산과정  $X_t$ 를 정규 브라운 운동  $B_t$ 에 대해 표류  $\mu t$ 와 확률적인 변동  $\sigma B_t$ 을 통해  $X_t = \mu t + \sigma B_t$ 와 같이 기술한다.

11) (대칭적) 표류확산모형을 통한 선택 과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두 가지 선택지  $A = \{l, r\}$ 이 주어져 있고 관측되는 정보  $Z_t$ 는 브라운 운동  $Z_t = \delta t + \alpha B_t$ 를 따른다. 이때  $\delta$ 는 관측되지 않는 모수로서  $\delta \in \{\delta^l, \delta^r\}, -\delta^l = \delta^r > 0$  이다. 따라서 정보가 음수로 향하는 것은 선택지  $l$ 에 대한 증거로 작용하고 양수로 향하면 선택지  $r$ 에 대한 증거가 된다.  $\delta$ 의 절댓값이 클수록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alpha$ 가 클수록 노이즈가 차지하는 크기가 커져서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12) 여기에서의 가정은 표류확산모형의 모수가 같다는 것이므로, 학생의 능력이 다른에서 오는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의 상관관계를 만들어낸다. 두 번째는 선택을 빨리 할수록 더 확실한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선택 편향이다. 이러한 선택 편향은 정답을 맞힐 확률과 선택시간 사이의 음의 상관관계를 만들어낸다. 정답확률과 선택시간의 독립결과는 효용과 비용이 고정된 표류확산모형에서 앞의 두 효과가 정확히 상쇄됨을 뜻한다.

하지만 이러한 독립결과는 실험에서 관측되는 패턴과 상반되는데, 실험에서는 주로 선택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정답을 맞힐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착안하여 Fudenberg, Strack, and Strzalecki(2018)는 불확실한 표류확산모형(Uncertain DDM)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정답을 맞힐 확률이 왜 선택시간에 대해 감소하는지를 설명한다.

불확실한 표류확산모형이 앞의 표류확산모형과 다른 점은 정답을 맞힐 때의 효용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효용의 크기 역시 학습을 한다는 점이다. 위의 대학입시의 예시를 보면, 정보수집 과정은 학과의 비전 및 본인의 적성 등에 대한 학습 과정이고, 정답이란 완전정보하에서 생애 기대 효용이 더 높은 학과에 입학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완전정보하에서 정의된 생애 기대 효용의 차이가 크다면 정보수집 과정에서 얻는 정보가 더 강한 증거로 작용하는데, 예를 들어 경제학자의 삶과 통계학자의 삶에서 얻는 효용 차이가 큰 개인과 그렇지 않은 개인의 경우를 상정하도록 하자. 이 경우, 경제학자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대한 똑같은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전자의 개인이 가진 (어떠한 학과가 더 좋을지에 대한) 믿음은 크게 반응하고

후자의 개인이 가진 믿음은 그리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선택 편향에 더해 빠른 선택이 더 큰 생애 기대 효용의 차이를 의미하는 추가적인 선택 편향이 존재하게 된다.

즉, 학과를 빠르게 선택한 개인은 주어진 생애 기대 효용 수준에서 충분히 좋은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두 학과 사이에서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기대 효용의 차이 역시 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택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은 두 학과 중 어떤 학과가 더 적절한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에 더해서 본인의 효용이 두 학과 간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는 정보 역시 주게 된다.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선택을 하기 위한 임계확률이 낮아지게 되고 이는 결국 정답확률과 선택시간 사이의 음의 상관관계를 만들어내게 된다.

Fudenberg, Strack, and Strzalecki(2018)와 Fudenberg, Newey, Strack, and Strzalecki(2020)는 이러한 불확실한 표류확산모형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이로부터 어떠한 패턴의 자료가 생성되는지, 정답확률과 선택시간 사이의 상관관계가 양수 혹은 음수일 필요충분조건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외부 관측자가 자료를 관측함으로써 어떻게 모형의 모수들을 추정할 수 있는지를 기술함으로써 기존의 DDM을 이론적·실증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 4. 소결

본 장에서는 행동경제학 및 의사결정이론 분야에서의 스트랙의 기여를 정리했다. 앞에서 설명한 논문들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스트랙은 다

양한 행동경제학 개념들이 어떻게 엄밀한 모형 속에 도입되고, 새로운 이론적 결론을 얻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이러한 스트랙의 연구는 행동경제학 분야에서 지식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연구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스트랙의 연구는 행동경제학의 다양한 개념들을 통합하는 연구라기보다는 각각의 개념을 확장하는 연구이고, 따라서 그 통일성이 조금 떨어져 보인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스트랙의 연구들은 합리적이지 않은 현실의 경제주체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선택들에서 관측된 경향성이 어떤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술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그의 연구에 등장하는 어떠한 현상에 대한 설명들도 현실에서 현상이 나타나는 유일한 요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그럴듯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 보는 편이 옳다.

그러나 이는 스트랙만의 한계가 아니라 잘 정의된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을 거부하고 현실에 더 가까운 경제주체를 가정하는 행동경제학 자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일하게 정의된 합리적 경제주체에서 벗어나는 순간, 무한히 많은 비합리적인 경제주체 중에서 현실의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경제주체는 무엇인지에 대해 대답해야만 하는데, 이것에 대해 잘 정의된 대답이 아직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답을 위한 전제조건은 현실의 사람들이 갖는 경향성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이해이며, 스트랙의 연구는 정확하게 이 지점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III. 정보이론에서의 기여

#### 1.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과 그 적용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 정보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 중이며, 미국과 유럽연합 등 역시 비슷한 법률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경제학에서 다루었던 기존의 정보이론의 확장 역시 요구되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칩 토크(Cheap talk) 모형이나 베이지안 설득(Bayesian Persuasion) 모형 등은 정보를 알고 있는 쪽이 어떤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결과들을 도출했지만, 이 모형들에서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에 대한 제약은 없었다.<sup>13)</sup> 그러나 오늘날 정보보호 개념의 대두는 정보를 알고 있는 쪽이 전달하면 안 되는 내용이 존재함을 의미하고 따라서 앞의 모형들의 결과를 그러한 제약하의 문제로 확장해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문제를 모형화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란 무엇이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엄밀하게 정의되어야만 한다. 이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인데, 예컨대 서류심사가 성별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약이 있

13) 확실한 정보(Hard information)를 연구하는 문헌들에서는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제약하에 최적 정보 전달을 연구하기도 한다.

다고 가정하고, 어떠한 정보들이 서류심사 과정에 이용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 만약 서류심사에 영향을 끼치는 인센티브와 성별이 완벽하게 독립이라면 이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어떠한 이유로 인해 성별이 서류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다.<sup>14)</sup>

이 문제를 엄밀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성별과 무관하다’의 정의가 필요하며,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서류심사의 결과와 성별이 통계적인 의미에서 독립이기를 요구하는 것이다.<sup>15)</sup> 이를 위해 어떠한 정보들이 서류심사 과정에 제공되어야 하는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력서에 적혀있는 성별에 대한 직접 정보를 지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데, 이름을 통해 성별의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우려하여 실명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교나 학과 등을 통해 성별에 대한 간접적인 유추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그 어떠한 정보라도 성별과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성별에 대한 일부의 정보는 전달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가 주어지면 성별과 서류심사 결과의 독립성을 깨뜨리게 된다.

Strack and Yang(2024)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먼저 개인정보 보호 신호(Privacy-preserving signal)를 정의한다. 개인정보 보호 신호란 전달하면 안 되는 정보와 독립적인 신호를 의미하며, 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전달할 수 있는 정보들의 집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키를 소수

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 인지를 전달할 경우 이는 성별과 (근사적으로) 독립이고 따라서 이러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신호의 일종이다.

앞선 예시는 서류심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어떠한 개인정보 보호 신호는 서류심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 과정에서의 학점에 대한 정보를 생각하면, 만약 학점과 성별이 독립이 아닐 경우 이 정보를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으나, 성별 내에서의 학점으로 매긴 등수는 성별과 항상 독립이기 때문에 전달할 수 있다.

Strack and Yang(2024)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q$ -분위수 신호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신호 중에서 가장 정보량이 많음을 증명하고,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의 제약하에서 의사결정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정보체계는  $q$ -분위수 신호로 주어져야 함을 보였다. 예컨대, 학점과 성별이 알려진 정보의 전부인 세상에서 서류심사가 성별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면서 회사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성별 내 학점의 등수라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많은 정보가 주어질 경우 서류심사는 성별과 독립일 수 없고, 이것보다 더 적은 정보가 주어질 경우 서류심사가 학점과의 상관관계가 떨어지면서 효용이 감소한다.

Strack and Yang(2024)은 이 결과를 기존의 정보이론들이 다루고 있는 상황들로 확장하고, 이러한 최적화 문제를 수치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는 추상적인 정보

14) 예를 들어, 성별 간 근속기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아무런 제약이 없을 때 기업은 특정 성별을 고용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15) 현실에서는 객관적으로 수치화 가능한 특징(시험점수 등)들이 주어진 상태에서 조건부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비조건부 독립을 가정한다. 본고의 논의가 조건부 독립으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Strack and Yang(2024)을 참고하기 바란다.

보호의 개념이 어떻게 엄밀하게 정의될 수 있는지, 또 그러한 모형화를 통해 어떻게 현실의 문제들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볼 수 있다.

## 2. 정보생산비용에 대한 연구

대부분의 경제학 모형은 정보에 대한 어떠한 가정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완전경쟁시장은 정보가 완벽하게 공유되어 있음을 가정하고 있고, 경매 이론(Auction theory)의 경우 각 경매자가 어떠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를 기술하는 것으로부터 모형이 시작된다. 이러한 모형들에서 정보의 가치는 내생적 혹은 외생적으로 결정되고, 그 가치가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고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정보는 가치가 있지만, 그만큼 생산하는 데 비용이 든다. 예컨대, 설문조사를 위해서는 비용이 들고, 어떠한 식당이 맛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직접 먹어보는 수고를 들여야 한다. 이렇듯 정보의 생산비

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 비용이 얼마나 크고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Pomatto, Strack, and Tamuz(2023)는 공리적 접근을 통해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정보생산비용의 개념을 구체적인 수식으로 도출함으로써 정보이론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정보의 한계생산비용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발상인데, 일반적인 재화의 생산함수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부분은 한계생산비용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아니면 고정되어 있는 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화의 생산함수에서 가장 간단한 가정은 물론 한계생산비용이 상수로 고정된 것이다.

Pomatto, Strack, and Tamuz(2023)는 정보의 한계생산비용이 상수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 정보비용 함수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계생산비용이 상수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공리적으로 기술해야 하는데, Pomatto, Strack, and Tamuz(2023)는 다음의 세 가지 공리가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앞의 세 가지 공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를 위해 전화를 돌리는 경우 각각의 대답을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고,<sup>16)</sup> 전화를 한 번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일정하다면 이때 총소요 비용은 이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한다. 일반적으로 위의 공리들은 어떤 모수에 대한 정보를 주는 독립적인 샘플을 관측할 때, 각각

공리 1.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신호를 관측하는 것의 비용이 더 크다.<sup>16)</sup>

공리 2. 두 개의 독립적인 정보를 관측하는 비용은 각각의 정보를 관측하는 비용의 합과 같다.

공리 3. 어떤 신호를 확률  $\alpha \in (0,1)$ 로 관측하는 비용은 그 신호를 확률 1로 관측하는 비용에  $\alpha$ 를 곱한 값과 같다.

16) Blackwell(1951)에 따르면 어떤 신호 X가 Y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신호 X에 어떤 독립적인 오차항 e를 더해 신호 Y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7) 이때, 각각의 전화로부터 대답을 듣게 될 확률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의 샘플을 관측하는 비용이 일정한 상황에서 성립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Pomatto, Strack, and Tamuz(2023)는 앞의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정보생산비용은 다음의 함수로 표현됨을 보임으로써, 정보의 한계생산비용이 일정한 상황의 모형에서 쓸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C(\mu) = \sum_{i,j} \beta_{ij} D_{KL}(\mu_i | \mu_j), \text{ where}$$

$$D_{KL}(\mu_i | \mu_j) = \sum_s \mu_i(s) \log \left( \frac{\mu_i(s)}{\mu_j(s)} \right)$$

여기에서  $i, j$ 는 실제 상태(True state)를 의미하고,  $\mu = (\mu_1(s), \dots, \mu_i(s), \dots)$ 는 실제 상태에 대한 정보를 주는 정보의 체계로서 정보생산비용을 계산하는 대상이 된다. 이때,  $\mu_i(s)$ 는 실제 상태가  $i$ 일 때  $s$ 라는 신호를 주는 확률을 뜻하며,  $D_{KL}(\mu_i | \mu_j)$ 는 실제 상태가  $i$ 일 때,  $j$ 상태하의  $\mu$ 분포에 대비한  $i$ 상태하의  $\mu$ 분포의 로그우도(Log-likelihood)의 평균값이다.<sup>18)</sup>  $\beta_{ij}$ 는 상태  $i, j$ 에 의존하는 0보다 같거나 큰 숫자로 정보가 수집되는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모수가 된다.

이 정보 생산 비용함수는 합리적 무관심(Rational inattention)을 연구하는 논문들에서 주로 가정하는 새넨 엔트로피(Shannon entropy)에 기반을 둔 정보비용 함수와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른데,<sup>19)</sup>

가장 큰 장점은  $\beta_{ij}$ 의 존재로 인해 상태 간 구별이 어려운 정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새넨 엔트로피에 기반한 비용함수는 모든 가능 상태를 대칭적으로(Symmetric) 바라보기 때문에 임의의 두 상태를 구별하는 정보를 얻기 위한 비용이 모두 같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토익 점수가 취할 수 있는 가능 세계가 500점, 501점, 990점이라고 하면, 새넨 엔트로피에 따른 비용함수는 500점과 990점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500점과 501점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차이가 없으나, Pomatto, Strack, and Tamuz(2023)의 경우에는 500점과 501점을 구분하기 위한 비용이 더 크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비용함수에는 단점 역시 존재하는데, 하나의 문제점은 확실한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한 비용이 (무한대가 되어) 정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 중에는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예를 들어 가방 안에 들어 있는 공의 색깔을 알아내는 문제의 경우, 공을 꺼내면 색깔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어지게 된다. 이는 정보를 습득하는 환경에 따라 그에 맞는 정보비용 함수가 다름을 의미하며, Pomatto, Strack, and Tamuz(2023)의 기여는 모수에 대한 정보를 주는 독립적인 샘플을 관측하는 환경에 적합한 정보비용 함수를 공리적인 접근으로 도출해 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8) 이 값을 Kullbeck-Leibler divergence라고 부른다.

19) 합리적 무관심을 연구하는 논문들(Sims, 2003)에서는 정보비용이 정보 습득 전후로 달라지는 불확실성의 정도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이때, 불확실성의 크기는 새넨 엔트로피로 정의하는데, 어떤 확률분포  $p(x)$ 의 새넨 엔트로피는  $H(p) = E_p(-\log(p(x)))$ 로 정의된다. 따라서 상태에 대한 사전적인 믿음  $p(x)$ 가 주어졌을 때, 사후적인 믿음  $q(x)$ 를 유도하는 정보체계의 비용은  $E_p(H(p) - H(q))$ 에 비례한다.

### 3. 소결

본 장에서는 정보이론 분야에서의 스트랙의 기여를 정리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그에 대한 인식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 혹은 남용, 및 규제 당국의 규제 역시 증가하고 있다. 어떠한 사람들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개인정보의 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이익을 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인 최적 지점은 개인정보를 완전히 이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이는 경제학의 거의 모든 논의가 그런 것처럼, 개인정보의 이용에도 효용과 비용이 존재하여 최적 개인정보 이용 수준이 존재함을 뜻한다. 그러나 이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희박하고, 따라서 실증적 연구를 하는 것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앞에서 소개한 스트랙의 연구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새로운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여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트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연구는 현실에서 정책당국 혹은 플랫폼이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제공되는 정보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검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준다. 또한, 스트랙의 정보 생산 비용에 대한 연구는 사회 후생의 측면에서 정책당국 혹은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올바른지, 아니면 아예 수집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 IV. 메커니즘 디자인에서의 기여

### 1. 메커니즘 디자인과 기존 이론

메커니즘 디자인이란 경제적 메커니즘 및 인센티브 설계를 통해 설계자가 원하는 균형을 이루도록 만드는 게임이론의 분야를 말한다. 게임이론의 경우 메커니즘이 주어졌을 때 개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연구한다면, 메커니즘 디자인의 경우 각 개인이 주어진 메커니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고려하여 최적의 메커니즘을 찾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게임 이론이라 불리기도 한다. 메커니즘 디자인은 많은 경우 경매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데, 주어진 경매 방식(잉글리시 옥션, 더치 옥션 등)에서 어떠한 입찰전략을 사용할지 연구하는 것이 게임이론이라면, 이러한 개인들의 균형 입찰전략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경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연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메커니즘 디자인 문제이다.

메커니즘 디자인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결과 중의 하나는 윌리엄 빅클리(William Vickrey)와 로저 마이어슨(Roger Myerson)에 의해 정립된 동등수입정리(Revenue Equivalence Theorem)이다.<sup>20)</sup> (좁은 의미에서) 동등수입정리란 경매 참여자들이 위험중립적이고 각 개인이 느끼는 효용이 서로 독립이라면 결과적으로 같은 배분을 가져오는 경매 방식들은 경매자에게 같은 수익을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공개 입찰 경매에서 최고가격 경매와 차순위 가격 경매를 생각해 볼 경우, 경매 참여

20)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빅클리는 1996년, 마이어슨은 2007년에 노벨상을 수상했다.

자의 입장에서 어떤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센티브가 다르다. 최고가격 경매의 경우 자신이 입찰한 가격을 내야 하기 때문에 높지 않은 가격을 내야 하지만, 차순위 가격 경매의 경우 자신이 낸 가격을 직접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더 높게 입찰할 유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정확한 입찰전략은 달라도, 두 경매 모두 더 높은 효용을 가진 개인이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이 균형 전략이 됨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두 경매 방식은 같은 방식으로 물건을 배분한다.<sup>21)</sup> 동등수입정리에 따르면 이렇게 서로 달라 보이는 두 경매 방식하에서 물건이 팔리는 평균 가격은 결국 같아지게 된다.

동등수입정리에 따르면 경매의 주최자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균형의 결과로 나타나는 배분이 효율적이지 않은 경매 방식을 탐색해야 함을 의미한다. 마이어슨은 계시 원리(Revelation principle)를<sup>22)</sup> 이용해 수익 극대화를 이루는 배분이 가상효용(Virtual value)의 합을 각각의 효용 실현 값에서 극대화하는 것임을 도출했는데,<sup>23)</sup> 앞의 예시에서 이러한 배분은 최소 입찰가격이 존재하는 최고가격 혹은 차상위 가격 경매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경매 참여자들의 위험중립이나 독립적인 효용분포의 가정이 위배되는 일반적인 경우에

서 경매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메커니즘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 스트랙은 기하학에서 볼록집합(Convex set)의 극점(Extreme points)과 Majorization과 관련된 수학적 결과들을 이용해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본 절은 스트랙의 발견 및 메커니즘 디자인에서의 기여를 간단히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내용상 수학적이고 기술적인 서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 2. Majorization과 경매이론

스트랙의 기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Majorization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야 한다. Majorization은 어떤 함수 혹은 벡터의 변동성에 대한 순서를 정의하는 관계로  $[0, 1]$ 에서 정의된 감소하지 않는 함수  $f, g$ 에 대해 “ $f$  majorize  $g$ ”는 다음을 의미한다.<sup>24)</sup>

$$\forall t \in [0, 1], \int_t^1 g(t)dt \leq \int_t^1 f(t)dt,$$

$$\int_0^1 g(t)dt = \int_0^1 f(t)dt$$

이 경우  $f$ 가  $g$ 보다 적은 변동성을 가진다고 볼

21) 그 방식이란 “효용의 실현 값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물건을 배분한다”이며, 이러한 배분을 효율적인 배분이라고 부른다.  
 22) 계시 원리란 모든 메커니즘은 자신의 효용을 직접 보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치환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아무리 복잡한 경매 방식이 주어지더라도 그 방식하에서 직접 균형 행동을 하는 것이나, 본인이 보고한 효용을 바탕으로 균형 행동을 그대로 대신 해주는 AI에게 본인의 효용을 보고하는 것이나 같은 메커니즘이라는 관찰에서 도출된다. 계시 원리에 따르면 모든 메커니즘을 연구할 필요 없이 각 개인이 본인의 효용을 보고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직접 메커니즘(Direct mechanism)이라고 부른다.  
 23) 가상효용이란 수익 극대화 메커니즘 하에서 경매 참여자의 효용에 대한 경매자의 한계수익을 뜻한다. 경매 참여자의 효용이  $v \sim F(\cdot)$ 이고  $i.i.d$ 라면 가상효용은  $v - \frac{1-F(v)}{f(v)}$ 로 주어진다. 자세한 도출은 본고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어 생략하기로 한다.  
 24) 도메인은 임의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함수  $f$ 에 대해서는 모든  $y$ 와 르베측도  $\mu$ 에 대해  $\mu(\{x: f(x) \leq y\}) = \mu(\{x: f^*(x) \leq y\})$ 를 만족하면서 감소하지 않는 함수  $f^*$ 로의 변환 이후 정의된다.

수 있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f$ 와  $g$ 가 같지만(두 번째 등식) 함숫값이 작은 구간을 빼고 보면  $f$ 가 더 크므로(첫 번째 등식),  $g$ 가  $f$ 보다 함숫값이 작은 곳에서는 작고 큰 곳에서는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트랙은 경제학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Majorization관계로 정의된 집합 위에서의 최적화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음을 보였는데,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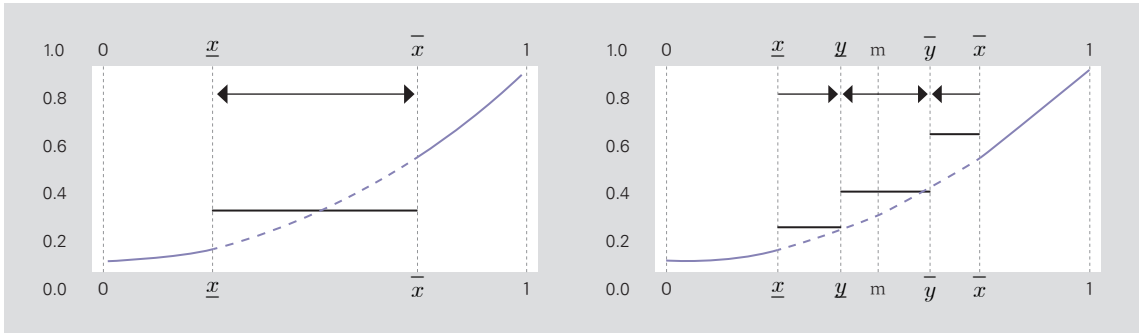
예시 1. (포트폴리오 선택 문제) Majorization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두 함수  $f, g$ 가 어떤 확률변수의 분포함수일 때이다. 이 경우 “ $f$  majorize  $g$ ”는 확률변수  $X_f$ 가  $X_g$ 를 2차 확률적 지배(Second-order stochastic dominance)함과 동치이다. 한편 함수에 정의된 어떤 함수  $K(\cdot)$ 가 “ $f$  majorize  $g$ ”  $\Leftrightarrow K(f) \geq K(g)$ 를 만족할 경우 Schur-convex하다”고 부른다. 따라서 위험기피적인 개인이  $X_f$ 를  $X_g$ 에 비해 선호한다는 것은 곧 개인의 기대 효용함수가 분포함수 위에 정의된 Schur-convex 함수임을 뜻한다.

예시 2. (베이지안 설득(Bayesian persuasion) 문제) 베이지안 설득 문제에서 설득의 주체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이때, 정보 제공자의 정보에 의해 변화된 상대방의 사후분포(Posterior)는 베이즈 법칙에 따라 상대방이 처음 갖고 있던 사전적 분포(Prior)에 대한 평균보존분산(Mean-preserving spread)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전적 분포  $f$ 는 사후적 분포  $g$ 를 majorize한다. 아무런 제약이 없는 베이지안 설득 문제에서는 사후적 분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는 주어진 효용함수를 Majorization set 위에서 극대화하는 문제이다.

예시 3. (메커니즘 디자인) Kleiner, Moldovanu, and Strack(2021)의 한 가지 기여는 메커니즘 디자인에서 가능한 배분(Feasible allocation rule)들이 효율적인 배분(Efficient allocation rule)과 majorization 관계임을 보인 것이다. 이를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 2명의 참가자에게 한 개의 물건을 배분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이때, 2명의 참가자가 가진 물건에 대한 효용은  $i.i.d$ 로 가정하고  $\theta$ 로 일컫기로 한다. 큰 의미에서 배분 룰이란 주어진 참가자들의 효용에서 최종 배분으로 가는 함수를 의미하며  $(q_1(\theta_1, \theta_2), q_2(\theta_1, \theta_2))$ 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가능한 배분 룰(rule)이란 물리적으로 배분이 가능한 룰을 의미하며, 앞의 경우 모든 효용 수준에 대해  $q_1 + q_2 \leq 1$ 을 의미한다. 효율적인 배분이란 물건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룰을 의미하며, 이 경우 효용이 더 높은 사람에게 물건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 $\theta_i > \theta_j \Rightarrow q_i = 1$ ) Kleiner, Moldovanu, and Strack(2021)은 가능한 배분  $q$ 들은 효율적인 배분  $q^*$ 에 의해 majorize됨을 보임으로써 모든 메커니즘 디자인 문제들은 Majorization set 위에서 어떠한 목적함수를 극대화하는 것과 같음을 보였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Majorization관계로 나타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어떤 함수  $f$ 에 의해 Majorize되는 함수들의 집합인  $MPS(f)$ 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Kleiner, Moldovanu, and Strack(2021)은 먼저 임의의 감소하지 않는 함수  $f$ 에 대해  $MPS(f)$ 가 컴팩트(Compact)하고 볼록한 집합임을 보였다. 이는  $MPS(f)$  앞에서 정의된 볼록함수의 최댓값은  $MPS(f)$ 의 극점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Bauer’s maximum principle), Kleiner, Moldovanu, and

[그림 3]  $MPS(f)$ 의 극점(왼쪽)



출처: Kleiner, Moldovanu, and Strack(2021), p 1563, Figure 1.

Strack(2021)은 여기에 더해  $MPS(f)$ 의 극점은 어떠한 구간들의 집합에 의해 [그림 3]의 왼쪽과 같이 표현됨을 보였다.

$f$ 가 분포함수라고 가정할 경우,  $MPS(f)$ 의 원소는  $f$ 의 평균보존분산이기 때문에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됨이 자명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평균보존분산을 하는 방법은 무한히 많고 그것이 구간으로 표현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Kleiner, Moldovanu, and Strack(2021)에 따르면  $MPS(f)$ 의 극점은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된다.

Gershkov, Moldovanu, Strack, and Zhang (2022)은 이 결과를 이용해서 참가자들이 경매에 참가하기 이전 자신의 효용과 관계된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미술품 경매에 참석하기 이전 참가자들이 자신의 효용 수준을 관측한 후 자신의 집에 미술품을 비치할 장식장을 살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장식장에 대한 선택은 추후 미술품을 낙찰받았을 때의 효용 수준

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어진 메커니즘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에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어떤 메커니즘이 주어져 있다면 그 메커니즘하에서 미술품을 낙찰받을 수 있을 확률이 장식장을 구매하는 동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식장에 대한 투자와 경매에서의 비딩 전략은 균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Gershkov, Moldovanu, Strack, and Zhang (2022)은 이와 같이 사전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경매의 경우, 개인의 효용이 물건을 낙찰받을 확률에 대해 불록하게 나타나<sup>25)</sup> 기대 효용이 아닌 행동경제학적인 효용을 극대화하는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음을 보였다.<sup>26)</sup> 이렇게 치환한 문제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메커니즘을 찾는 것 역시 기존의 방식으로 풀기는 어려운데, 개인의 효용이 낙찰받을 확률에 직접 영향을 받을 경우, 메커니즘의 수익이 확률에 대해 선형이 아니고, 따라서 마이어슨의 수익 극대화 메커니즘처럼 가상효용을 각각의 효용 실현

25) 낙찰받을 확률이 올라가면 사전적 투자가 올라가고, 따라서 낙찰받는다 가정하에서의 효용 역시 (주어진 효용 타입에서) 증가하기 때문이다.

26) 한편, 행동경제학적인 효용을 도입하여 메커니즘 디자인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 Gershkov, Moldovanu, Strack, and Zhang(2023)에서는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패턴을 설명하는 것에 행동경제학적인 접근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값에서 극대화하는 것이 전체 수익 극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Gershkov, Moldovanu, Strack, and Zhang (2022)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n$ 명의 참가자- $n$ 개의 물건이 존재하는 메커니즘 디자인 문제의 일반적인 결과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수익이 확률에 대해 선형이 아니더라도 볼록하고, 확률과 개인의 효용 타입에 대해 슈퍼모듈러(supermodular)할 경우, 가상효용이 양수인 타입들에 대해서 효율적인 배분을 하는 것이 이윤극대화를 보인 것이다. 이는 마이어슨의 수익 극대화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구체적인 상황을 상정해서 접근해 왔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일반적이면서 새로운 상황으로 확장 가능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기여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3. 소결

본 장에서는 메커니즘 디자인 분야에서 스트랙의 기여를 정리했다. 메커니즘 디자인 분야에서의 기술적인 기여는 앞서 설명한 두 장에서의 기여에 비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그 결과는 오히려 현실에 직접적으로 더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는 부동산, 자동차, 농수산물, 정부 조달 등에서 경매가 자주 이용되기 때문이다.

경매를 통해 물건을 배분해야 할 때, 어떤 경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기준점으로 동등수입정리는 큰 역할을 하지만, 현실의 경매 참여자들은 위험기피적이고, 때로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똑같이 효율적

인 배분을 하더라도 경매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어떤 경매 방식이 더 바람직한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를 연구할 수 있는 이론적인 도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최적의 메커니즘을 찾는 방법론을 제시한 스트랙의 기여는 비단 이론적인 부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의미도 크다고 할 수 있다.

## V. 결론

본고는 2024년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 수상자인 필립 스트랙의 연구와 경제학적 기여를 정리하고 소개했다. 스트랙의 연구는 여러 가지 분야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행동경제학적인 면이 가미가 되어 있는 의사결정이론 및 학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지식의 지평을 넓혔고, 메커니즘 디자인 분야에서는 기술적인 기여를 통해 새로운 연구를 촉발했다.

스트랙의 연구는 비록 정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책을 고안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먼저 넓은 의미에서 스트랙의 연구들은 정책연구를 함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엄밀한 접근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예를 들어, 앞서 소개했던 현재 편향과 관련된 그의 연구의 경우, 기존이론에 반(反)하고 새로운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자료수집 및 해석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자연스럽지만 잊을 수 있는 교훈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책 연구에 있어서도 이론의 엄밀한 적용 및 자료를 통한 검증이 중요하다

는 기본을 되새기도록 해준다.

스트랙은 많은 분야에 걸쳐 다양한 연구를 하는 학자로서 그의 연구들에서 어떤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의 연구에서 행동경제학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배운다면,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합리적 개인의 가정을 선불리 포기하는 것의 위험성을 배울 수도 있다. 사실 현실의 개인은 때로는 합리적이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합리적이기도 하며,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스트랙의 연구는 이렇게 하나로 쉽게 정의되기 힘든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스트랙의 여러 가지 기여 중에서 구체적으로 정책연구에 고민을 해봐도 좋을 부분 역시 몇 가지 존재한다. 첫째로, 정책의 디자인에 관하여 사람들의 행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세제나 고용지원세제와 같은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는 시기가 실제 일을 하거나 노동자를 고용하는 시기보다 뒤로 설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현재 편향을 고려했을 때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정책의 효과가 커지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사용도 지양해야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지나친 규제 역시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는 비록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치가 있고 생산하는 데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재화와 다를 바 없다. 스트랙의 연구는 정보에

대한 정책 역시도 엄밀한 비용-편익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트랙의 일련의 연구들은 집단에서의 학습 및 행동과 관련하여 비단 정책연구자뿐 아니라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구체적으로, 팀의 일원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팀의 학습에 있어서 각 개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같이 사람들이 어렵듯이 알고 있던 부분들을 엄밀한 모형을 통해 전달해 주고 있다. 이는 경제학 이론이 어떻게 현실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KIPF](#)

## 참고문헌

- Blackwell, David, "Comparison of experiments," *Proceedings of the second Berkeley symposium on mathematical statistics and probabili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 1951.
- Cohen Hoffing, Russell, Povilas Karvelis, Samuel Ruppel, Peggy Seriès, and Aaron R. Seitz. "The influence of feedback on task-switching performance: A drift diffusion modeling account," *Frontiers in integrative neuroscience* 12, 2018.
- Fudenberg, Drew, Whitney Newey, Philipp Strack, and Tomasz Strzalecki, "Testing the drift-diffusion model,"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7.52, 2020, pp. 33141~33148.
- Fudenberg, Drew, Philipp Strack, and Tomasz Strzalecki, "Speed, accuracy, and the optimal timing of

choices,” *American Economic Review* 108.12, 2018, pp. 3651~3684.

Gershkov, Alex, Benny Moldovanu, Philipp Strack, and Mengxi Zhang, “Optimal auctions: Non-expected utility and constant risk avers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89.5, 2022, pp. 2630~2662.

\_\_\_\_\_, “Optimal Insurance: Dual Utility, Random Losses, and Adverse Selec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113.10, 2023, pp. 2581~2614.

Harel, Matan, Elchanan Mossel, Philipp Strack, and Omer Tamuz, “Rational groupthink,”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6.1, 2021, pp. 621~668.

Heidhues, Paul, Botond Kőszegi, and Philipp Strack, “Unrealistic expectations and misguided learning,” *Econometrica* 86.4, 2018, pp. 1159~1214.

Heidhues, Paul, and Philipp Strack, “Identifying present bias from the timing of choices,” *American Economic Review* 111.8, 2021, pp. 2594~2622.

Kleiner, Andreas, Benny Moldovanu, and Philipp Strack, “Extreme points and majorization: Economic applications,” *Econometrica* 89.4, 2021, pp. 1557~1593.

Pomatto, Luciano, Philipp Strack, and Omer Tamuz, “The cost of information: The case of constant marginal costs,” *American Economic Review* 113.5, 2023, pp. 1360~1393.

Sims, Christopher A, “Implications of rational inattention,”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0.3, 2003, pp. 665~690.

Strack, Philipp, and Kai Hao Yang, “Privacy Preserving Signals,” Available at SSRN 4467608, 2023.

## 부록: 역대 존 베이츠 클라크 수상자 목록

연도	수상자	소속(수상 당시)	박사학위	노벨상
1947	Paul Samuels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Harvard University	1970
1949	Kenneth E. Boulding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of Oxford	
1951	Milton Friedman	University of Chicago	Columbia University	1976
1955	James Tobin	Yale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1981
1957	Kenneth Arrow	Stanford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1972
1959	Lawrence Klein	University of Pennsylvania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80
1961	Robert Solow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Harvard University	1987
1963	Hendrik S. Houthakker	Harvard University	University of Amsterdam	
1965	Zvi Griliches	Harvard University	University of Chicago	
1967	Gary Becker	University of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92
1969	Marc Nerlove	Yale University	Johns Hopkins University	
1971	Dale W. Jorgenson	Harvard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1973	Franklin M. Fisher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Harvard University	
1975	Daniel McFadde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Minnesota	2000
1977	Martin Feldstein	Harvard University	University of Oxford	
1979	Joseph Stiglitz	Princeton Universit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01
1981	Michael Spence	Harvard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2001
1983	James Heckman	University of Chicago	Princeton University	2000
1985	Jerry A. Hausma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of Oxford	
1987	Sanford J. Grossman	Princeton University	University of Chicago	
1989	David M. Kreps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1991	Paul Krugma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08
1993	Lawrence Summers	World Bank	Harvard University	
1995	David Card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Princeton University	2021
1997	Kevin M. Murphy	University of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99	Andrei Shleifer	Harvard Universit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01	Matthew Rab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03	Steven Levitt	University of Chicago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05	Daron Acemoglu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London School of Economics	
2007	Susan Athey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2009	Emmanuel Saez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10	Esther Duflo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19
2011	Jonathan Levin	Stanford Universit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12	Amy Finkelstei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13	Raj Chetty	Harvard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2014	Matthew Gentzkow	University of Chicago	Harvard University	
2015	Roland G. Fryer Jr.	Harvard University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2016	Yuliy Sannikov	Princeton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2017	Dave Donaldson	Stanford University	London School of Economics	
2018	Parag Pathak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Harvard University	
2019	Emi Nakamura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Harvard University	
2020	Melissa Dell	Harvard Universit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21	Isaiah Andrews	Harvard Universit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22	Oleg Itskhoki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Harvard University	
2023	Gabriel Zucman	Ecole normale supérieure, Paris and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for Advanced Studies in the Social Sciences (EHESS)	
2024	Philipp Strack	Yale University	University of Bonn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John\\_Bates\\_Clark\\_Medal](https://en.wikipedia.org/wiki/John_Bates_Clark_Medal), 검색일자: 2024. 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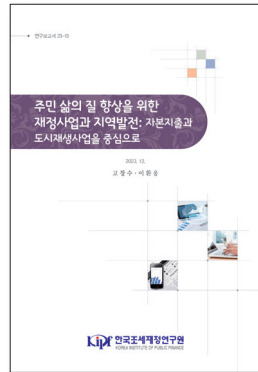


# 정책연구

- +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사업과 지역발전:  
자본지출과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고창수·이환웅
-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송경호
- + 지역노동수요충격이 지역 경제 및 재정에 끼친 영향  
이환웅·고창수·홍용기

# 01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사업과 지역발전: 자본지출과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 +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 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과 그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우리나라가 장기간 직면해 온 현상이다. 이에 더해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 경향에 따라 총인구의 감소 및 전반적인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향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추세는 앞서 언급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이슈를 보다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도 이 점을 인식하고, 지역단위의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방향을 중요한 정책 이슈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인구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많은 경우 지역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지역발전정책'과 성격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의 경제활동 활성화는 해당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발전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나 경제활동 활성화를 자극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으로의 인구유입 및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이 보다 발전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재정정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연구의 중요성은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두 가지 분석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깊은 정책이 지역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우선 재정지출 중 큰 틀에서 주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이 깊은 지출규모가 지역의 고용, 인구,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특정 사업에 대한 분석이 아니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정확히 어떤 경로로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나, 동 실증분석은 넓은 의미에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과 지역발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재정지출에 대한 실증분석의 주요 목표는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지출 및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지출 정보는 김현아(2014)

의 방식과 동일하게 지자체의 예산서의 자본지출 항목을 대리변수로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이는 Glaeser et al.(2001)이 제시한 도시의 정주여건과 관련된 네 가지 어메니티인 소비 관련 시설, 도시의 환경 및 아름다움, 공공재의 품질, 교통 관련 SOC 중 공공재의 품질과 교통 관련 SOC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재정자료가 구축됨에 따라 재정지출에 대한 분석은 시군구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2010~2019년 자본지출의 변화가 동 기간 해당 지역의 고용, 인구,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차분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한다. 지역의 자본지출 규모와 경제여건 등 다양한 지역 상황이 체계적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다는 점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생성 문제를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 지역경제 및 정주여건과 관련된 변수들을 가능한 범위에서 활용하여 추정을 시도한다.

이어서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의 하나인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의 고용, 인구,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다양한 유형의 지역발전정책 중, 도시재생사업은 인구감소, 산업의 이탈, 주거환경의 악화를 경험하는 ‘도시쇠퇴지역’에 초점을 맞추는 재정투자로 볼 수 있다. 동 실증분석은 도시쇠퇴지역에 대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하는 재정투자의 영향을 분석함에 따라 미래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방향을 고려했을 때 분석의 중요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재생사업은 거주 또는 상업활동과 관련 있는 시설 정비를 포함하며, 만약 이에 대해 의미 있는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사업 시행 결과 고용, 인구, 주택가격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변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역 경제 활성화 영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수이며, 인구 및 주택가격은 경제적 영향에 더해 거주민 정주여건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변수로 생각할 수 있다. 분석 과정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유형별·지역별 이질성 또한 논의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지역 선정은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지역여건을 반영할 것이다. 이 점에서 기인하는 내생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합성대조 이중차분법(Synthetic Difference-in-Differences, SDID)을 분석에 활용한다. SDID 방법론은 정책의 시행이라는 처치(treatment)를 받은 지역과 유사한 특성 및 추세(trend)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상적인 대조군을 생성하여 정책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론이며, 내생성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증연구 방법론으로써 널리 이용되는 방법론이다.

분석 결과를 간략히 소개하면, 우선 재정지출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본지출은 해당 지자체의 인구증가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추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1인당 자본지출을 설명변수로 사용한 추정 결과,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집단을 나눈 후 추정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수도권 지역의 추정 결과가 비수도권 지역의 추정치와 비교해 추정치의 절대적인 크기가 크고, 통계적으로도 10.0~10.2% 수준에서 유의하였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서의 자본지출의 증가가 인구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일정 수준에서 찾았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규모가 작은 지자체 혹은 비수도권 지자체로 한정하

였을 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자본지출은 인구 유입을 기준으로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고용 및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자본지출의 증가가 종사자 수 및 주택가격에 양(+)의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 착수한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사업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고, 사업 시행이 대상지역 읍면동의 고용, 인구,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고용에 대한 분석 결과 서비스업 고용인원을 중심으로 대체로 부정적인 추정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해당 추정 결과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인구에 대한 분석 결과, 일반근린형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추정되었으며, 생산가능인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으나 일반근린형 사업 대상지역 중 하나인 공주시가 분석기간 중 발생한 세종특별자치시 신설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추정 결과 KTX 개통 등의 특수한 이벤트가 분석기간 중 발생한 목포시를 제외하면 추정 결과는 대체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결과를 모두 종합하였을 때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수행기간 그리고 마중물사업의 종료 직후 단기간에 대해 지역의 고용, 인구, 주택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두 가지 분석 결과를 모두 종합하면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이 대체로 지역발전과 관련된 변수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재정지출 또는 도시재생사업의 구성요소 중 어떠한 원인이 실

증분석 결과에 기여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어렵지만, 구체적인 정책이 실제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과 부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을 가능성, 예산규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했을 때 정부 정책이 지역 발전을 이끌기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을 가능성, 다수의 지역에 분산된 형태로 정책이 집행됨으로써 개별 지역의 정책규모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정책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종의 임계점에 미치지 못하였을 가능성 등 다양한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인구의 정체 또는 감소 전망 등 향후 인구변화의 추세, 산업의 지역적 분포 및 동향, 기존 존재하는 인프라의 유지비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의 활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이 우리나라의 미래 인구구조 변화 방향을 고려할 때 재정적 지속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서 동 계획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발전정책 대상지역의 숫자를 축소하여 정책의 공간적 범위를 보다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지출을 집행한다면 주민의 거주지와 무관하게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일부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는 있겠으나 소규모 분산형 정책 집행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향후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투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정책 효과성 또한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호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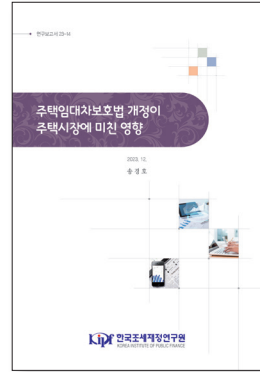
외(202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별 거점을 육성하고 거점 체계를 기반으로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하나의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3-13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사업과 지역발전: 자본지출과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0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 2020년 7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익일(7월 31일)부로 시행되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시 정당한 사유(예: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고자 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해당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여 계약갱신 시 임대료증액 상한을 5%로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주거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취지와 목적에 관하여, 현행 민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임차권자)의 권리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며, 이를 통하여 임대인-임차인 간의 관계를 보다 균형 잡힌 관계로 재정립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다수 존재하는 내

용을 포함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인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와 관련하여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2년 단위 계약의 경직성으로 인해 임대인의 이사 및 주택매매 등에 큰 제약사항을 부여하여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문제도 지적되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여 임차인에게 거주기간 및 계약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계약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미래 예상되는 가격 상승분을 임대차보호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최초 계약가격에 선반영하여 임대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임대인에게 다수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임대료 인한 편익이 감소하여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또한 계약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임대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문제도 존재한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임대시장에 미치는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전월세 임대 가격과 거래량, 주택 매매가격, 임대가격의 변동성이 영향을 받게 된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임차인의 임대거래에 대한 지불의사 가격, 수요가 증가하고 임대인은 임대 비용,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임대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여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임대가격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시장 임대료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임대계약(A)과 매매계약(B)은 일종의 대체재로 하나의 가격이 변하는 경우 나머지 하나의 가격도 영향을 받아 변동하게 된다. 임대가격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인상되는 경우 임대계약에 대한 수요가 일부 매매계약으로 이동하면서 매매계약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전월세 가격이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인상되는 경우 매매가격까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더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임대계약이 기존 2년에서 2+2년(4년)으로 장기화됨에 따라 신규계약 임대가격의 수준과 변동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향후 4년의 미래가치를 현재 계약가격에 반영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전월세상한제를 수반한 계약갱신청구권의 옵션가치가 현재 임대계약에 반영되어 기존의 2년 단위 계약과 비교하여 임대료가 상승하게 된다. 이때 임대료 상승 폭은 시장의 미래 임대가격에 대한 예측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또한 계약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이자율 변동에 따른 임대가격 변동성이 커지게 되며 시장의 불확실한 미래 예측, 장기계약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 등으로 인해 임대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전세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2020년 12월까지 평균적으로 신규계약 전세가격이 모형에 따라 약 9~11% 정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은 재계약 매물까지 모두 포함하는 경우, 위 추정 결과는 약 4~6% 인상으로 추정 결과 수치가 하락하였다. 가장 전세가격이 많이 상승한 2020년 12월의 경우는 신규계약 전세가격이 13~18% 정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재계약 매물까지 모두 포함하는 경우 동 수치는 약 9% 정도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전월세거래량 및 전세거래비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전월세거래량은 2020년 12월까지 평균 약 2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표되고 실제 시행이 되기 전인 2020년 6월, 7월의 경우 법 개정이 시행되기 전 서둘러 임대계약을 하고자 하는 유인으로 인해 거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 발표 시점 이후 2020년 12월까지 평균 약 11% 정도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대거래에서 전세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상반기 67%였으나 법 개정 이후 이 비율은 약 5.58%p 하락,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2.42%p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리하자면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전월세거래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 중에서 전세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매매가격에 미친 영향을 Panel-SVAR

모형을 구축하여 전세가격 변동이 매매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학(dynamics)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같은 전세가격에 고유한 외생적 충격(orthogonal shock)이 발생하여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매매가격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받아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세가격이 로그값으로 1단위 증가하는 경우, 매매가격은 약 6~7%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만 그 영향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전세가격 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매매가격이 한 단위 변화하였을 때 전세가격이 영향을 받는 정도가 변화하였는지를 추정하였다.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매매가격 변동이 전세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추정하며 이 값이 커지는 경우 ‘매매가격 → 전세가격’ 경로의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표본을 2개로 구성하여 우선 임대차보호법 시행 직후의 효과를 추정하고, 임대차보호법 도입 직후 제도 변화로 인한 혼란 등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후(2020년)의 표본을 제외시킨 표본을 구성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모형에서 매매가격이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약 17~21% 정도 커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위 내용을 요약하자면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의 권리로 보장하고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여 최초 계약가격과 거의 동일한 가격(5% 인상 상한)에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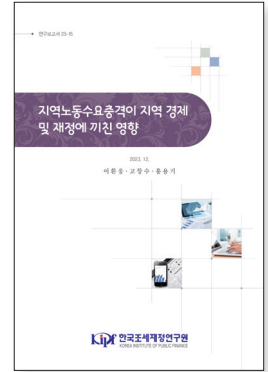
다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실제 주택시장에서 발생한 일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실증분석을 진행한 결과, 과연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임차인의 권리와 후생을 증진시켰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임대가격의 변동성은 확대되었으며 제도 도입 초기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로 인해 신규 계약 시 과도하게 높아진 전세금을 세입자가 지불해야만 했으며 전월세 매물, 이 중에서도 전세 매물은 급감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또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임대인-임차인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안한다. 우선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의 대부분은 시장 임대료의 상승과 전월세상한제로 인한 임대료 상한 폭(5%)의 격차가 커지는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상한제에서 규제하는 임대료 상한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하는 임대계약과 포함하지 않는 임대계약 두 가지를 임대인-임차인이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임대계약의 형태를 다변화하는 것이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검토와 실증분석, 정책 제언을 토대로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보완 및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3-14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03 지역노동수요충격이 지역 경제 및 재정에 끼친 영향

- + 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 홍용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산업구조의 변화 혹은 산업별 앵커기업의 경영차질로 인해 발생한 노동수요충격이 지역 경제 및 재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제Ⅱ장에서는 산업별 고용 추세와 이를 기반으로 한 노동수요충격의 추정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바틱 도구변수에 기반하여 2000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군·구별 노동수요충격을 추정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축된 노동수요충격의 대리변수는 다른 산업부문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적인 효과를 고려한 노동수요충격을 추정하여 산업 간 파급효과를 고려하는 경우와 고려하지 않는 경우 노동수요충격의 지리적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 제시하였다.

제Ⅲ장에서는 노동수요충격이 인구, 고용, 주택가격 등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노동수요충격이 인구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바틱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양(+)의 수요충격은 인

구와 종사자 수 증가로, 음(-)의 충격은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관계는 비선형적임을 확인하였다. 또 숙련 수준에 따른 임금, 종사자 수, 주택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양(+)의 충격에서 대졸 이상 근로자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고졸 이하 종사자 임금은 감소하였고,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MM을 사용한 분석에서는 한국의 이주비용 중요성이 미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고숙련 노동자층에서 이주비용의 탄력성이 저숙련자와 비교해 크게 추정되었다. 두 결과를 종합하면 양의 노동수요충격을 경험한 지역에서 저숙련자의 비율 증가와 임금 하락은 저숙련자의 이주비용이 낮아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일 수 있다. 물론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하나로 특정하기에는 보다 많은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제Ⅳ장에서는 노동수요충격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방재정의 세입은 지역경제 여건에 의존하

며, 세출은 세입여건 및 재정의 경기대응적 역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동수요충격과 깊은 관련이 존재한다. 추정 결과, 노동수요충격은 세입 중 보조금과 세외수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양(+)의 노동수요충격은 세입 중 보조금과 세외수입 항목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양(+)의 노동수요충격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 규모의 증가 속도는 빨라지는 방향으로, 세외수입의 증가 속도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평균 대비 노동수요충격의 변화가 1표준편차 감소하는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세외수입은 증가하는 방향의 결과가 추정되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또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한편 세출 분석에서는 양(+)의 노동수요충격이 발생하면 교육·문화관광·보건 분야의 세출예산이 빠르게 증가했다. 해당 지출 분야들이 대체로 지역의 인구 규모 증가와 관련이 큰 세부사업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Ⅲ장에 제시된 고용 및 인구에 대한 분석 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음(-)의 고용수요충격에서도 총세출과 각 분야의 증가율은 크게 감소하지 않아 세입 분석 결과와 일관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정책적 시사점

제Ⅱ장과 제Ⅲ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의 노동수요 변화에 따른 지역 수준의 노동수요충격은 산업 간 공급사슬로 이어진 간접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와 고려하지 않았을 때 충격의 지리적 분포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기반의 지원정책을 설계할 때 위기 지역선정은 산업 간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충격이 심화될 가능성이 큰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위험을 사전에 알리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의 노동수요충격에 따른 지역고용의 충격은 임금근로자에게 즉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자의 숙련 수준에 따라 고용충격에 대응하는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숙련 수준에 따라 고용충격을 신속히 경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제Ⅲ장의 추정 결과는 미국의 실증 분석 결과와 달리 부정적인 고용충격이 발생한 지역에 저숙련자의 비중이 증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부정적 고용충격이 발생할 경우 저숙련자 위주로 고용 감소가 발생하는 반면 주택가격은 저숙련자들이 이러한 충격을 상쇄할 만큼 하락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참고할 때 부정적 고용충격이 발생하는 지역의 저숙련 임금근로자를 정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고용충격을 경감하는 정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저숙련 임금근로자들을 고용위기가 발생한 지역에 상주하게 하는 것이 해당 근로자들 입장에서 최선의 정책은 아닐 수 있다. 다만 이희선·강동우·최충(2020)에서 확인하였듯이 제조업에서의 고용 감소는 해당 지역 서비스업으로의 파급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수준의 충격이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종사자들이 위기 지역에 상주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저숙련자들이 주택에 지출하는 비용을 경감하는 정책 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Ⅳ장의 분석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세입·세출 구조가 유지될 경우 지역

단위에서 부정적인 노동수요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국세·지방세 구분, 지방 간 재분배 제도의 존재, 해외수입을 통한 대응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세입 및 세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게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 지방정부의 중요한 기능이 지역에 발생한 충격에 의해 크게 훼손되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특정 국가와의 무역 분쟁이나 공급망 이슈로 인한 특정 산업의 업황 악화 등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정부 수준에서 자체적·사전적 대응이 어려운 다양한 충격들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경제적 성과가 지역의 재정여건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 지방정부 단위에서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할 인센티브가 약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의 구조를 단기간에 급격하게 변화시키기보다는, 지역별로 주어진 여건이 크게 상이하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효율적·효과적인 지방정부의 정책 노력을 유도할 인센티브 수단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앞서 제시된 결과는 국가적·구조적인 경제적 충격에 의한 재정 영향과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정적인 노동수요충격에 대한 영향이 국지적이고 임시적일 경우에 한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 간 재원의 재분배를 통한 충격 완화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3-15 『지역노동수요충격이 지역 경제 및 재정에 끼친 영향』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주요국의 조세동향



### 미국

####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규정 발표]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4년 5월 3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New Clean Vehicle Credit)의 최종규정을 발표함<sup>1), 2)</sup>

- 최종규정은 2024년 7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핵심 광물의 함량을 계산하는 테스트 규칙을 제공하고 해외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의 부품사용을 제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제조업체의 실사를 의무화함

- ‘추적된 적격 부가가치 테스트(traced qualifying value add test)’를 통해 핵심 광물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
  - 친환경차 배터리에 포함되는 핵심 광물의 50% 이상은 북미지역에서 채굴, 가공, 재활용되어야 함

- 이 테스트를 통해 제조업체는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의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핵심 광물의 함량 요건을 충족하는 광물의 양을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추적이 불가능한 광물을 제외하는 전환 규칙(transition rule)을 마련함

- 제조업체는 제조한 친환경차가 세액공제 제한 요건인 해외우려기관의 부품을 사용했는지를 판단하는 실사를 수행해야 함

- 해외우려기관이 제조한 배터리 부품을 포함한 친환경차는 세액공제를 제한함

- 해외우려기관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관련된 기관임<sup>3)</sup>

<자료수집 및 조사: 권정교 세무사>



### 캐나다

#### [2024 회계연도 「예산시행법」 No.1 발의]

■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인 크리스티아 프릴랜드는 2024년 4월 30일, 2024 회계연도(2024년 4월 ~ 2025년 3월) 예산안 중 일부를 시행하기 위해 2024 회계연도 「예산시행법」 No.1 (the Budget Implementation Act, 2024, No.1)

1) IRS, "IRS releases final guidance for certain clean vehicle credits under the Inflation Reduction Act," 2024. 5. 3., <https://www.irs.gov/newsroom/irs-releases-final-guidance-for-certain-clean-vehicle-credits-under-the-inflation-reduction-act>, 검색일자: 2024. 5. 16.

2) IBFD, "IRS and Treasury Issue Final Regulations on Clean Vehicle Credits," 2024. 5. 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5-07\\_us\\_2.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5-07_us_2.html), 검색일자: 2024. 5. 16.

3) Bloomberg, "New EV Rules in US May See Fewer Cars Qualify for Tax Credits," 2023. 12. 12.,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international/new-ev-rules-in-us-may-see-fewer-cars-qualify-for-tax-credits>, 검색일자: 2024. 5. 24.

을 발의함<sup>4),5)</sup>

- 「예산시행법」 No.1은 모든 세대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주요 골자로 하고 세제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주 또는 지역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단기 임대소득에 대해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자원봉사 소방관과 자원봉사 수색 구조원의 공제를 3천캐나다달러<sup>6)</sup>에서 6천캐나다달러<sup>7)</sup>로 인상함
  - 언론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5%에서 30%로 일시적으로 늘리고, 대상 언론인 1인당 공제금액 한도는 5만 5천캐나다달러<sup>8)</sup>에서 8만 5천캐나다달러<sup>9)</sup>로 상향함
  - 2024년 1월 1일부터 2034년 12월 31일까지 5~30%의 청정기술제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시행함
  - 청정수소 투자와 관련하여 적격 프로젝트 자본비용에 대해 최대 40%까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 15% 광물탐사 세액공제를 1년 연장함
- 전 세계 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sup>10)</sup> 이상인 다국적 기업(MNE)을 대상으로 15%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함

<자료수집 및 조사: 권정교 세무사>



## 이탈리아

### [단순화된 물류구역(ZLS)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도입]

- 이탈리아는 2024년 5월 7일, 단순화된 물류구역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령 제60/2024호를 발표함<sup>11)</sup>
  - 2024년 5월 8일부터 2024년 11월 15일 기간 동안 단순화된 물류구역(Zone Logistiche Semplificate, ZLS)에서 신규사업에 필요한 적격 자산을 구매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함
  - 지역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경

4) Government of Canada, "Government of Canada announces legislation to ensure fairness for every generation," 2024. 4. 30.,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4/04/government-of-canada-announces-legislation-to-ensure-fairness-for-every-generation.html>, 검색일자: 2024. 5. 16.

5) Bloomberg, "Canada MOF Submits Draft Bill to Implement Budget Tax Measures Tabled in April," 2024. 5. 6.,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international/XA96KCR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iJnbnGF3LmNvbS9wcm9kdWN0L3RheC9zZWYy2gvcmlvZDw0cy9kM2YwYzQ2M2M5MmUzMWw4MwZmOWRiNWQ4MTFlNjU5YSJdXQ--8f3c7fc74d7fa63979ad9300833d14cb88616c03&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criteria\\_id=d3f0c463c91e31c81ff9db5d811e659a](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international/XA96KCR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iJnbnGF3LmNvbS9wcm9kdWN0L3RheC9zZWYy2gvcmlvZDw0cy9kM2YwYzQ2M2M5MmUzMWw4MwZmOWRiNWQ4MTFlNjU5YSJdXQ--8f3c7fc74d7fa63979ad9300833d14cb88616c03&bna_news_filter=daily-tax-report-international&criteria_id=d3f0c463c91e31c81ff9db5d811e659a), 검색일자: 2024. 5. 16.

6) 2024년 5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99만 2,140원임

7) 2024년 5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98만 6,440원임

8) 2024년 5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988만 7,000원임

9) 2024년 5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479만 6,000원임

10) 2024년 5월 2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1,107억 6,500만원임

11) IBFD, "Italy Introduces Tax Credit for Investments in Simplified Logistics Zones," 2024. 5.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5-15\\_it\\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5-15_it_1.html), 검색일자: 2024. 5. 16.

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의 투자세액공제를 ZLS로 확대 적용하는 것임<sup>12)</sup>

- 적격 자산이란 ZLS 내에 위치한 생산시설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토지 및 적격 사업용 부동산을 의미함
- 법령 제60/2024호는 2024년 5월 8일 발효되고 공포 후 60일 이내 의회에서 법률로 전환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조사: 권정교 세무사>



프랑스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제재 도입 및 국제 환급 지원규정 개정]

■ 프랑스 의회는 2024년 4월 24일, EU 지침을 국내법으로 입법하고자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의 경과기간 내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는 내용 및 국제 환급 지원에 관한 국내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수정 법안을 통과시킴<sup>13)</sup>

-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경과기간(2023년 10월

1일~2025년 12월 31일) 동안 프랑스에 설립된 수입업체가 수입품의 총수량에 대한 분기별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재를 도입함<sup>14), 15)</sup>

- 신고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고 납세자는 2개월 내에 수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납세자가 수정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납세자에게 공식 통지함
- 공식 통지 후에도 납세자가 수정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위반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과세관청은 미신고 배출량 1톤당 10유로<sup>16)</sup> 이상 50유로<sup>17)</sup> 이하의 과태료(amende)를 부과함
-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가 2023년 4월 도입한 것으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한 탄소국경세 부과를 내용으로 함<sup>18)</sup>
- 조세 및 관세 환급 신청을 위한 국제 상호 지원에 관한 국내 규정을 개정함
- EU 환급 지침(2010/24)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EU 회원국 간 교환된 정보는 어떠한 경

12) Presidenza del Consiglio dei Ministri, “Festa dei Lavoratori del Primo maggio, il videomessaggio del Presidente Meloni,” 2024. 5. 1., <https://www.governo.it/it/articolo/festa-dei-lavoratori-del-primo-maggio-il-videomessaggio-del-presidente-meloni/25550>, 검색일자: 2024. 5. 27.

13) IBFD, “Parliament Adopts Law That Introduces Sanctions for CBAM Transitional Period, Amends International Recovery Assistance Rules,” 2024. 4.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4-23\\_fr\\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4-23_fr_1.html), 검색일자: 2024. 5. 16.

14) 프랑스 「환경법(Code de l'environnement)」, 제L229-71조~제L229-76조

15) IBFD, “France Publishes Reminder on CBAM Transitional Phase,” 2023. 12.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12-14\\_fr\\_1%23tns\\_2023-12-14\\_fr\\_1](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3-12-14_fr_1%23tns_2023-12-14_fr_1), 검색일자: 2024. 5. 16.

16) 2024년 5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만 4,600원임

17) 2024년 5월 1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만 3,500원임

1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3-5호, 2023, pp. 24~25

- 우에도 프랑스 정부 또는 외국 정부가 환급 또는 예방 조치 적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단, 원래 정보를 공유한 국가의 법률에 의해 예외적인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음
-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 은닉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인 신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를 발표하였으며, 2023년 11월 48개국이 공동성명에 참여한 바 있음<sup>21)</sup>
- 스위스는 2026년 1월 1일부터 CARF를 적용할 계획임
  - 금번 의견수렴은 2024년 9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 스위스

### [암호화자산 자동 정보교환에 대한 의견수렴 개시]

- 스위스 연방의회(Federal Council)는 2024년 5월 15일, 조세에 관한 국제적 자동 정보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을 암호화자산(crypto assets)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개시함<sup>19)</sup>
  - 스위스는 조세 투명성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 통적 자산과 금융기관에 대한 동등한 세무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CARF)를 시행할 계획임<sup>20)</sup>
    - 지난 2022년 10월, OECD는 암호화자산의



## 네덜란드

### [세금인상 철회 및 이자공제 규정 완화 선언문 발표]

- 네덜란드 4개 정당은 2024년 5월 16일 현재 정부 구성을 협상 중인, 임기를 뒷받침할 원칙과 주요 정책을 명시하는 26페이지 분량의 선언문(hoofdlijnenakkoord)을 발표함<sup>22)</sup>
  - 순이자비용 공제한도 규정을 완화하여, 공제율을 기존 20%에서 25%로 5%p 상향함
  - 2025년부터 상장기업 자사주 (재)매입에 대한 배당금 원천세 부과 계획을 철회함
  - 중소기업 이익 면제율을 12.7%에서 12.3%로

19) IBFD, "Switzerland - Federal Council Launches Consultation on Extending International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 to Crypto Assets," 2024. 5.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5-16\\_ch\\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5-16_ch_1.html), 검색일자: 2024. 5. 20.

20) 스위스 연방의회, "Federal Council launches consultation on extending international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 to cryptoassets," 2024. 5. 15., <https://www.admin.ch/gov/en/start/documentation/media-releases.msg-id-101030.html>, 검색일자: 2024. 5. 21.

2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제23-11호, 2023.

22) IBFD, "Aspiring Coalition Government Manifesto Reverses Tax Increases, Relaxes Interest Deductibility Rules," 2024. 5.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5-17\\_nl\\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5-17_nl_1.html), 검색일자: 2024. 5. 21.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축소하기로 한 기존 계획을 철회함
- 중간 소득층을 위한 세 번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도입함
- Box 2 소득의 최고세율 인상을 33%에서 31%로 일부 역전함
- Box 3 소득에 대한 세금 인상을 부분적으로 취소함
- 30% 롤링 제도의 추가 제한 또는 폐지 가능성을 검토함
- 도박세를 기존 30.5%에서 37.8%로 7.3%p 인상함
-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함
- 에너지 세금 인상계획을 철회함

<자료수집 및 조사: 이미현 세무사>



### 노르웨이

#### [2024년 예산 수정안 발표]

- 노르웨이 정부는 2024년 5월 14일, 간접세 조치에 관한 국가 예산 수정안을 발표함<sup>23)</sup>
  - 중고차 판매 및 미군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을 일부 변경함
  - 노르웨이의 할당량 규제 해상 운송에 대한 CO<sub>2</sub> 세금을 감면할 것을 제안함

- (중고차 판매에 관한 매입세액 추징 변경사항)  
중고차 판매 시 추징되는 매입세액 계산 시, 공제 당시의 가액이 아닌 판매 시의 시장가액을 고려하도록 제안함
  - 현재 중고차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신차 구입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해당 차량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차량 구입 후 48개월 이내에 중고차로 판매할 경우 공제된 부가가치세(deducted VAT)는 정해진 공제 방식에 따라 추징(charged back)됨 - 첫 1년 동안은 매월 1/30씩, 그 이후 3년 동안은 1/50씩 추징됨
  - 2024년 7월 1일부터 공제된 매입세액에 양도 당시의 차량 가액을 곱한 후 공제 당시의 가액으로 나누어 추징세액을 결정하는 새로운 추징 규정이 제안됨
  - 따라서, 제안된 변경안은 정해진 공제액 대신 시장가액을 사용하도록 제안함

- (미군을 수용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변경사항) 부가가치세 면제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르웨이 부가가치세 규정의 변경을 제안함
  - 노르웨이는 NATO 회원국으로서 외국 군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NATO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를 준수하고 있음

23) IBFD, "Revised Budget 2024 in Depth: Changes to Reduced Carbon Tax and VAT Chargeback," 2024. 4. 16., 2024. 5.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5-15\\_no\\_2.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5-15_no_2.html), 검색일자: 2024. 5. 21.

- 또한 노르웨이는 미군과 양자 간 협정을 체결하여 미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계약업체 및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음
- 노르웨이는 현재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미군 도급업자 및 하청업자가 취득한 물건이 미군의 공식 용도인 경우 직접 면제하는 방안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 (EU ETS로 인한 해운업 탄소세 감면 제안) 노르웨이의 할당량 규제 해상 운송에 대한 CO<sub>2</sub> 세금을 감면할 것을 제안함

- 2024년부터 총톤수 5천톤을 초과하는 선박은 EU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에 포함되며, 점차적으로 배출 할당량을 충족해야 함
  - 해당 의무는 국내 및 국제 해상 운송에 모두 적용됨
- 이중과세를 피하고 ETS 역외 선박보다 낮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노르웨이의 할당량 규제 해상 운송에 대한 CO<sub>2</sub> 세금 감면이 도입될 예정임
  - 당초 매년 소급 환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기업의 유동성 문제 등의 이유로 직접 면제를 고려하고 있음
  - 면제를 통해 할당량 규제 대상 기업은 등록된 공급업체로부터 인화된 요율로 연료를 구입할 수 있으며, 미등록 공급업체로부터 연료를

구입할 경우 환급 옵션을 사용할 수 있음

<자료수집 및 조사: 이미현 세무사>



덴마크

[OECD 행정지침에 따라 「최저한세법」 개정 제안]

- 덴마크 조세부는 2024년 4월 30일, 최저한세 규정에 관한 OECD 행정지침을 이행하고 방어적 조치에 직면한 국가 목록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 제안서(Lovforslag no. L 186)를 의회에 제출함<sup>24)</sup>
  - 이 법안의 목적은 덴마크 「최저한세법」이 OECD 모델 규정과 행정지침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하는 것임
  - 따라서, 이 법안은 그룹의 국가별 보고서를 근거로 추가세를 0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최저한세법」의 특별 경과 규정을 그룹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또한 2023년 12월 OECD 행정지침에 따라 2022년 12월 OECD가 합의한 영구적 감면(세이프하버) 적용을 위한 간소화된 계산 규칙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에 대한 덴마크의 방어적 조치 대상 국가 목록을 수정하여 유럽연합의 비협조적 조세 관할권 목록과 일치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함

24) IBFD, “Denmark Proposes to Amend Minimum Taxation Act to Align with OECD Administrative Guidance,” 2024. 5.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5-06\\_dk\\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5-06_dk_1.html), 검색일자: 2024. 5. 21.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제안된 법안은 2024년 7월 1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수집 및 조사: 이미현 세무사>

- 해당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조사: 이미현 세무사>



### 핀란드

#### [소규모 기업을 위한 부가가치세 제도 시행 지침 법안 국회 제출]

■ 핀란드 정부는 2024년 5월 16일, 소규모 기업을 위한 특별 부가가치세 제도에 관한 EU 지침(Directive 2006/112)을 개정하는 2020년 2월 이사회 지침(Council Directive 2020/285/EU)을 내국세법으로 이행하는 법률 제안서 HE 50/2024를 발표함<sup>25)</sup>

- 다른 EU 회원국에 설립된 소기업도 유럽연합 내 연간 매출액이 10만유로<sup>26)</sup>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선택할 수 있음
- 핀란드에 설립된 소기업은 유럽연합 내 연간 매출액이 10만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른 EU 회원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음
- 소규모 기업가에게 구제책을 제공하는 특별제도(chapter 14a of AVL)를 폐지함
- 매출액이 1만 5천유로<sup>27)</sup>를 초과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록은 회계연도 시작



### 중국

#### [스톡옵션 행사 소득세 납부 기한 36개월로 연장 발표]

■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상장회사 스톡옵션 행사 관련 개인 소득세 납부 기한을 12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정책 발표함

-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상장회사가 개인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hares)의 보상에 대한 개인 소득세는 스톡옵션 수령일로부터 최대 36개월에 걸쳐 납부할 수 있음
  - 단, 납세자가 36개월 이내 사직하는 경우 퇴사일 이전까지 납부 의무 세금을 전액 납부할 의무가 있음
  - 2023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이 행사되었지만 개인 소득세가 전액 미납된 경우에도 납부 기한 연장 가능함

<자료수집 및 조사: 정호림 세무사>

25) IBFD, "Government Submits Bill Implementing Directive on VAT Scheme for Small Businesses to Parliament," 2024. 5.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5-17\\_fi\\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5-17_fi_1.html), 검색일자: 2024. 5. 21.

26) 2024년 5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4,812만원임

27) 2024년 5월 21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221만원임



호주

[2024/25 연방정부 예산안 발표]

■ 호주 재무부는 2024년 5월 14일, 2024/25 연방 정부 예산안을 발표함<sup>28)</sup>

- 각 공고의 효력 발생일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시행 법률에 대한 왕실 동의일 이후 첫 번째 소득 연도부터임<sup>29)</sup>

■ 법인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즉시 자산 공제(instant asset write-off)를 연장하고, 콘텐츠 관련 공제 요건을 완화함

- 연간 총매출액이 1천만호주달러<sup>30)</sup>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가 2만호주달러<sup>31)</sup> 미만의 적격 사업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즉시 자산 공제 혜택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
  - 즉시 공제가 어려운 2만호주달러 이상의 자산은 중소기업 간이감가상각액에 포함되어 첫 번째 소득연도에는 15%, 그 이후에는 매년 30%의 수준으로 감가상각이 허용됨
- 콘텐츠 제작자의 세금 환급(tax offset) 시 적용되던 콘텐츠 재생시간 요건 및 적격 생산 지출의 20% 상한 요건을 모두 폐지함

■ 2024년 7월 1월 입법이 완료 예정인 개인 소득세 관련 감면 조치를 시행함

- 메디케어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저세율을 적용 받는 독신, 가족, 노인 및 연금 수급자의 소득 기준 상한액을 다음 표와 같이 인상함

<표 1> 메디케어 부담금 완화 대상 소득 기준액 변경

(단위: 호주달러)

구분		2023/24	2024/25
일반	독신	24,276 <sup>1)</sup>	26,000 <sup>2)</sup>
	가족	40,939 <sup>3)</sup>	43,846 <sup>4)</sup>
노인/연금수급자	독신	38,365 <sup>5)</sup>	41,089 <sup>6)</sup>
	가족	53,406 <sup>7)</sup>	57,198 <sup>8)</sup>
부양자녀		3,760 <sup>9)</sup>	4,027 <sup>10)</sup>

- 주: 1)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198만 3천원임  
 2)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354만 4천원임  
 3)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707만 2천원임  
 4)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70만 4천원임  
 5)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473만 9천원임  
 6)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720만 5천원임  
 7)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835만 8천원임  
 8)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179만 2천원임  
 9)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40만 5천원임  
 10)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64만 6천원임

출처: Australia Taxation Office, "Budget 2024-25: Budget Measures," [https://budget.gov.au/content/bp2/download/bp2\\_2024-25.pdf](https://budget.gov.au/content/bp2/download/bp2_2024-25.pdf), p. 12, 검색일자: 2024. 5. 21. 내용 저자 정리

- 세율 인하 및 과세 표준의 상향 조정을 통해 개인소득세 부담을 완화함
  - 19% 세율이 적용되던 구간은 16%로, 32.5%의 세율이 적용되던 구간은 30%로 세율을 인하함

28) Australia Taxation Office, "Budget 2024-25: Budget Measures," [https://budget.gov.au/content/bp2/download/bp2\\_2024-25.pdf](https://budget.gov.au/content/bp2/download/bp2_2024-25.pdf), 검색일자: 2024. 5. 21.

29) IBFD, "Australia - Federal Budget 2024/25: Government to Continue Small Business Instant Asset Write-Offs, Proceed with Individual Tax Cuts, Broaden Capital Gains Tax on Foreign Residents," 2014. 5.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4-05-14\\_au\\_1](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4-05-14_au_1), 검색일자: 2024. 5. 24.

30)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0억 5,210만원임

31)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11만원임

- 37%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상한액은 12만 호주달러<sup>32)</sup>에서 13만 5천호주달러<sup>33)</sup>로, 45% 세율이 적용되는 상한액은 18만호주달러<sup>34)</sup>에서 19만호주달러<sup>35)</sup>로 인상함

■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로열티를 저평가한 글로벌 기업에 대한 패널티 제도를 마련함

- 조세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외국인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 유형을 확대함
  - 또한 2천만호주달러<sup>36)</sup>를 초과하는 주식 및 기타 이익을 처분하는 외국인 거주자는 거래 전 호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요구됨
- 2026년 7월 1일부터 전 세계 매출액이 연간 10억호주달러<sup>37)</sup> 이상인 납세자가 로열티 지불을 잘못 분류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우 이에 대한 패널티로 해당 납세자에 대해 로열티 원천징수세를 적용함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OECD

### [필라2 통합 주석서 및 사례 발간]

■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2024년 4월 25일, 지난 2022년 모델 규정과 함께 발간된 주석서 및 사례에, 이후 새롭게 합의된 내용들을 반영하여 「필라2 통합 주석서 (Consolidated Commentary) 및 사례(Examples)」를 발간함

- 통합 주석서의 각 내용에 합의된 행정지침 (Agreed Administrative Guidance)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부록에 경과 CbCR(Country-by-Country Reporting) 세이프하버, 영구적 세이프하버, QDMTT(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세이프하버, 경과 UT-PR(Undertaxed Payments Rule) 세이프하버를 추가함<sup>38)</sup>
- 통합 사례는 모델 규정의 각 장별로 필요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추가함<sup>39)</sup>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32)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866만원임

33)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2,222만원임

34)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6,296만원임

35)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7,201만원임

36)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1억 680만원임

37) 2024년 5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053억 4천만원임

38)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Consolidated Commentary to the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2023)," <https://www.oecd.org/tax/tax-challenges-arising-from-the-digitalisation-of-the-economy-consolidated-commentary-to-the-global-anti-base-erosion-model-b849f926-en.htm>, 검색일자: 2024. 5. 3.

39)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 Global Anti-Base Erosion Model Rules (Pillar Two) Examples," <https://www.oecd.org/tax/beeps/tax-challenges-arising-from-the-digitalisation-of-the-economy-globe-rules-pillar-two-examples.pdf>, 검색일자: 2024. 5. 3.



## 주요국의 재정동향



### EU

#### ■ EU 집행위원회, 2024년 봄 경제전망 발표(2024. 5. 15.)<sup>1)</sup>

※ EU에서는 연 4회 경제전망(겨울-봄-여름-가을 각 전망)을 발표. 봄과 가을은 종합 전망으로 거시경제 전망치를 다루고 여름과 겨울은 중간 전망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수치를 업데이트함. 봄 경제전망 이전 최신 경제전망은 2024년 2월 15일 발표된 겨울 경제전망<sup>2)</sup>

- (경제) 2023년 경제 침체에 이어 2024년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은 EU와 유로지역<sup>3)</sup> 모두 이전 전망보다 개선이 전망되며, 물가상승률 감소로 점진적인 경제 확장 여건이 마련됨
  -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EU에서 1%로 지난 겨울 경제 전망 0.9%에 비해 0.1%p 상승했으며, 유로지역은 0.8%로 겨울 전망과 동일
  - 2025년 GDP 성장률은 EU에서 1.6%, 유로지역에서 1.4%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2024년과 2025년 경제는 실질 임금 상승과 고용의 증가로 실질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 민간 소비의 지속적인 확대가 주요 성장 기

여 요인으로 작용

- 민간 소비와 달리 투자 증가세는 완만해지고 있음
  - 주택 건설이 부진한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3년 겨울 예상보다 금리 인하가 조금 더 천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세계 경제 회복으로 수출의 증가가 예상되나, 대내 수요 증가로 인해 수입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순수출이 기대보다 덜 증가할 수 있음
- (물가) 2022년 10월 유로지역 물가상승률<sup>4)</sup>은 10.6%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겨울 전망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상승률 2% 목표에 더 일찍 도달할 것으로 예상
  - EU의 물가상승률은 2023년 6.4%에서 2024년 2.7%, 2025년 2.2%로 둔화 전망
  - 유로지역의 경우 2023년 5.4%에서 2024년 2.4%, 2025년 2.1%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 비에너지 제품과 식품 가격 하락으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서비스 물가 상승은 임금 압력의 완화로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1) EU 집행위원회, *Spring 2024 Economic Forecast: A gradual expansion amid high geopolitical risks*, 2024. 5. 15., [https://ec.europa.eu/communication/presscorner/detail/en/ip\\_24\\_2567](https://ec.europa.eu/communication/presscorner/detail/en/ip_24_2567), 검색일자: 2024. 5. 17.,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european-economic-forecast-spring-2024\\_en](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european-economic-forecast-spring-2024_en), 검색일자: 2024. 5. 17.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혹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4년 2월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094>

3) EU 27개 회원국 중 유로화를 자국 통화로 채택한 20개 회원국이 유로지역에 해당되고, 2024년 기준 유로지역 국가들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이며, 비유로지역 국가들은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덴마크

4) 소비자물가지수로 소비자물가지수(HICP: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인플레이션과 물가안정을 나타내는 지표로 유로지역 회원국들의 물가지수 가중 평균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노동) 2023년 이후 경기 확장 둔화에도 노동 시장은 견고하게 회복력을 유지
  - EU 고용 증가율은 2024년 0.6%로 완화된 후 2025년에는 0.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2024년 EU 6.1%)
  - EU의 명목 임금 상승률은 2023년 5.8%로 정점을 찍은 후 2024년 4.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2025년은 3.5%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재정) 정부 재정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예외적 에너지 지원 조치 철회

〈표 1〉 2023~2025년 유로지역 및 EU 회원국의 경제 전망(2024년 봄 경제전망)

(단위: %)

국가	실질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재정수지 <sup>D</sup>		
	2023년	2024년	2025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3년	2024년	2025년
벨기에	1.4	1.3	1.4	2.3	4	2.3	5.5	5.6	5.4	-4.4	-4.4	-4.7
독일	-0.3	0.1	1	6	2.4	2	3.1	3.1	3.1	-2.5	-1.6	-1.2
에스토니아	-3	-0.5	3.1	9.1	3.4	2.1	6.4	7.4	6.9	-3.4	-3.4	-4.3
아일랜드	-3.2	1.2	3.6	5.2	1.9	1.8	4.3	4.4	4.4	1.7	1.3	1.2
그리스	2	2.2	2.3	4.2	2.8	2.1	11.1	10.3	9.7	-1.6	-1.2	-0.8
스페인	2.5	2.1	1.9	3.4	3.1	2.3	12.2	11.6	11.1	-3.6	-3	-2.8
프랑스	0.7	0.7	1.3	5.7	2.5	2	7.3	7.7	7.8	-5.5	-5.3	-5
크로아티아	3.1	3.3	2.9	8.4	3.5	2.2	6.1	5.8	5.6	-0.7	-2.6	-2.6
이탈리아	0.9	0.9	1.1	5.9	1.6	1.9	7.7	7.5	7.3	-7.4	-4.4	-4.7
사이프러스	2.5	2.8	2.9	3.9	2.4	2.1	6.1	5.6	5.4	3.1	2.9	2.9
라트비아	-0.3	1.7	2.6	9.1	1.6	2	6.5	6.5	6.3	-2.2	-2.8	-2.9
리투아니아	-0.3	2	2.9	8.7	1.9	1.8	6.9	7	6.9	-0.8	-1.8	-2.2
룩셈부르크	-1.1	1.4	2.3	2.9	2.3	2	5.2	5.8	5.7	-1.3	-1.7	-1.9
몰타	5.6	4.6	4.3	5.6	2.8	2.3	3.1	3	2.9	-4.9	-4.3	-3.9
네덜란드	0.1	0.8	1.5	4.1	2.5	2	3.6	3.9	4	-0.3	-2	-2.1
오스트리아	-0.8	0.3	1.6	7.7	3.6	2.8	5.1	5.3	5.1	-2.7	-3.1	-2.9
포르투갈	2.3	1.7	1.9	5.3	2.3	1.9	6.5	6.5	6.4	1.2	0.4	0.5
슬로베니아	1.6	2.3	2.6	7.2	2.8	2.4	3.7	3.7	3.6	-2.5	-2.8	-2.2
슬로바키아	1.6	2.2	2.9	11	3.1	3.6	5.8	5.4	5.2	-4.9	-5.9	-5.4
핀란드	-1	0	1.4	4.3	1.4	2.1	7.2	7.4	7.2	-2.7	-3.4	-2.8
유로지역 20개국	0.4	0.8	1.4	5.4	2.5	2.1	6.6	6.6	6.5	-3.6	-3	-2.8
불가리아	1.8	1.9	2.9	8.6	3.1	2.6	4.3	4.3	4	-1.9	-2.8	-2.9
체코	-0.3	1.2	2.8	12	2.5	2.2	2.6	2.8	2.9	-3.7	-2.4	-1.9
덴마크	1.9	2.6	1.4	3.4	2	1.9	5.1	5.6	6	3.1	2.4	1.4
헝가리	-0.9	2.4	3.5	17	4.1	3.7	4.1	4.5	4	-6.7	-5.4	-4.5
폴란드	0.2	2.8	3.4	10.9	4.3	4.2	2.8	3	2.9	-5.1	-5.4	-4.6
루마니아	2.1	3.3	3.1	9.7	5.9	4	5.6	5.5	5.5	-6.6	-6.9	-7
스웨덴	-0.2	0.2	2.1	5.9	2	1.8	7.7	8.4	8.2	-0.6	-1.4	-0.9
EU 27개국	0.4	1	1.6	6.4	2.7	2.2	6.1	6.1	6	-3.5	-3	-2.9

주: 1)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

출처: EU 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spring 2024*, Table 1, 2024. 5. 15.

- 2021년과 2022년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후 경제활동이 약화되면서 2023년 적자 감소가 주춤했으나, 에너지 지원 조치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2024년과 2025년에 재정적자 감소세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
  - EU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24년 3%, 2025년 2.9%로 전망
- 부채<sup>5)</sup> 관련 비용이 상승하고 명목 GDP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EU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82.9%로 안정화된 후 2025년에는 약 0.4%p 증가한 83.4%로 전망
- (위험) 경제 전망에 관한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은 최근 몇 달 동안 더욱 증가
  - (대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간 침략과 중동 분쟁 확산으로 불확실성 증대
    - 광범위한 지정학적 긴장이 하방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미국의 물가 상승이 지속되어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되는 상황은 세계 금융 상황을 타이트하게 만들 수 있음
  - (대내) 물가 상승률의 하락이 예상보다 늦어져 EU 금리 인하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회원국들은 추가적인 재정건전화 조치를 2025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음(이번 예측에서 고려되지 않음)
    - 저축 성향의 하락은 소비 증가를 촉진할 수 있으며, 주거용 건설투자가 더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은 전망에 점차 더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IMF

- IMF 집행위원회, 일본과 연례협의 결과 발표 (2024. 5. 13.)<sup>6)</sup>
  - (현황) 일본은 30년간의 낮은 물가상승률 이후 광범위한 물가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보임
  - (전망) 관광(tourism) 급증 등 2023년에 성장을 뒷받침한 일회성 요인들이 사라지면서 2024년 GDP 성장률은 0.9%로 둔화될 전망이나, 2024년 하반기에 소비가 회복되면서 경제 성장세가 지속될 것임
    - 2024년 봄철 임금협상인 춘투(Shunto settlement)에 따른 명목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률 하락으로 실질 임금이 상승하면서 2024년 하반기와 2025년에 소비 회복이 예상됨
    - 근원 물가상승률이 수입가격 상승효과가 약화되면서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5년 하반기까지 목표 수준(2%)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
    -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최신 재정부양책의 영향이 반영되어 2024년에 6.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중장기적으로 노령화와 인구 감소가 계속해서 주요 거시경제적 과제임
    - 성장과 물가상승에 대한 위험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음

5) 마스트리히트 기준 일반정부 부채(D2)

6)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Japan," 2024. 5. 13.,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4/05/13/pr24156-japan-imf-executive-board-concludes-2024-article-iv-consultation>, 검색일자: 2024. 5. 13.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정책) 재정 완충여력과 채무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건전화의 필요하며, 단기 정책금리의 추가 인상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금융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일부 부동산 부문의 잠재적 취약성으로 인해 거시건전성 대응이 필요함
  - 출산율, 여성 리더, 스타트업, 녹색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가적 구조적 개혁이 필요함

<표 2> 일본의 주요 경제 지표

(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실질GDP증가율(연평균)	1.9	0.9	1.0
실업률	2.6	2.5	2.5
소비자물가상승률 (Headline CPI, 연평균)	3.3	2.2	2.1
기초재정수지 (Primary balance, GDP 대비 %)	-5.6	-6.4	-3.0
일반정부 총채무 (General government debt, GDP 대비 %)	252.4	254.6	252.6
경상수지(GDP 대비 %)	3.4	3.5	3.5

주: 2024, 2025년은 예측치

출처: IMF, "Japan: 2024 Article IV Consultation," 2024. 5. 13.



OECD

### ■ OECD,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An unfolding recovery” 발표(2024. 5. 2.)<sup>7), 8)</sup>

- (동향) 완만한(modest)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세계 경제 전망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는 몇 가지 징후가 있음

- 주택 및 신용 시장에 긴축적 통화정책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민간 부문 신뢰도가 개선되는 등 세계 경제는 회복력(resilient)을 보임
-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고,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에 근접하면서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무역 성장이 플러스로 전환됨
- 경제 회복 속도는 국가별로 상이하여 미국과 신흥시장의 강력한 경제성장이 유럽과 대다수 저소득 국가의 성장 약세로 상쇄됨
- (전망)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3년과 동일한 3.1%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실질 소득 증가와 정책금리 인하로 인해 2025년에 3.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향후 2년간 실질금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소폭의(mild) 재정건전화가 시행되면서, 전반적인 거시경제 정책조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긴축적(restrictive)일 것으로 예상
  - 중국은 예외적으로 2024년 및 2025년에 저금리와 함께 상당한 추가 재정 지원이 가능
  - 국가 간 격차는 유럽의 회복이 확고해지고 미국, 인도 및 기타 신흥시장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임
  - G20 국가의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비용압력이 완화되면서 2024년에 5.9%에서 2025년에 3.6%로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
  - 2025년 말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가상승

7) OECD,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4*, 2024. 5. 2., <https://www.oecd.org/economic-outlook/may-2024/>, 검색일자: 2024. 5. 3.

8) 1장 “General assessment of the macroeconomic situation”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원문 보고서 및 추후 분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본을 참고 바람

- 률이 목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위험) 경제 전망에 대한 상·하방 위험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음
    - 단기적으로는 높은 지정학적 긴장이 하방위

- 험이며, 중동지역의 갈등은 에너지 및 금융 시장을 혼란시켜 물가상승을 촉진하고 성장을 저하시킴
- 서비스 분야에서 비용압력과 마진이 높아지

&lt;표 3&gt; 실질 GDP 성장률 및 주요 지표

(단위: %)

구분	2013~ 2019년 평균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3년	2024년	2025년	
						Q4	Q4	Q4	
실질 GDP 성장률 <sup>1)</sup>									
세계 <sup>2)</sup>	3.4	3.4	3.1	3.1	3.2	3.3	3.1	3.2	
G20 <sup>2)</sup>	3.5	3.1	3.4	3.1	3.1	3.6	3.0	3.1	
OECD <sup>2)</sup>	2.3	3.0	1.7	1.7	1.8	1.7	1.7	1.9	
미국	2.5	1.9	2.5	2.6	1.8	3.1	1.8	1.9	
유로존	1.9	3.5	0.5	0.7	1.5	0.0	1.2	1.6	
일본	0.8	1.0	1.9	0.5	1.1	1.3	1.0	1.0	
한국 <sup>3)</sup>	2.9	2.6	1.3	2.6	2.2	2.5	2.2	2.4	
비 OECD <sup>2)</sup>	4.4	3.7	4.4	4.2	4.3	4.7	4.3	4.2	
중국	6.8	3.0	5.2	4.9	4.5	5.6	4.7	4.5	
인도 <sup>4)</sup>	6.8	7.0	7.8	6.6	6.6				
브라질	-0.4	3.1	2.9	1.9	2.1				
OECD 실업률 <sup>5)</sup>	6.5	5.0	4.8	5.0	5.0	4.9	5.1	5.0	
물가상승률 <sup>1)</sup>									
G20 <sup>2),6)</sup>	3.0	7.9	6.3	5.9	3.6	5.3	4.5	3.1	
OECD <sup>7)</sup>	1.6	9.4	7.1	4.8	3.5	5.7	4.1	3.1	
미국 <sup>8)</sup>	1.3	6.5	3.7	2.4	2.0	2.8	2.5	1.9	
유로존 <sup>9)</sup>	0.9	8.4	5.4	2.3	2.2	2.7	2.3	2.0	
일본 <sup>10)</sup>	0.9	2.5	3.3	2.1	2.0	2.9	1.6	2.0	
한국 <sup>3)</sup>	1.2	5.1	3.6	2.6	2.0	3.4	1.9	2.0	
OECD 재정수지 <sup>11)</sup>	-3.2	-3.3	-4.8	-4.5	-4.1				
세계무역성장률 <sup>1)</sup>	3.4	5.3	1.0	2.3	3.3	1.9	2.5	3.5	

주: 1) %, 마지막 3열은 전년 동기 대비 변화

2) 구매력 감안한 명목 GDP 이동 평균(Moving nominal GDP weights, using purchasing power parities)

3) 한국 데이터는 OECD Economic Outlook: Statistics and Projections, Economic Outlook No 115(Edition 2024/1) 사용하여 계산

4) 회계 연도 기준

5) 경제활동 인구 대비 %

6) 헤드라인 물가상승률

7) 구매력을 감안한 명목 민간 소비 이동평균(Moving nominal private consumption weights, using purchasing power parities)

8) 개인소비지출 디플레이터(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deflator)

9) 조화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consumer price index)

10) COICOP 2018 분류 기준 소비자물가지수(National consumer price index)

11) GDP 대비 %

출처: 1. OECD, OECD Economic Outlook, May 2024, Table 1.1, p. 12

2. OECD Economic Outlook No 115(Edition 2024/1), 검색일자: 2024. 5. 13.

면 물가상승률 하락이 예상보다 느려질 수 있으며, 정책금리 인하가 느리게 진행되어 금융 취약성에 노출되고 노동시장이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 실질금리 상승의 영향이 예상보다 강할 경우 채무 상환 부담이 더욱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상업용 부동산이 큰 압박을 받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기업 파산 및 채무 불이행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 금융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
- 중국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약세 또는 향후 2년간 예상보다 적은 재정 지원으로 인해 중국이 낮은 성장을 보일 수 있음
- 선진국에서 가계 및 기업이 팬데믹 기간 동안 축적한 저축의 영향으로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강한 노동력 증가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더 빠르게 하락할 수 있음
- (정책권고) 물가상승률의 지속적인 감소를 보장하고, 증가하는 압력에 대응하여 재정경로를 확립하며, 중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개혁을 수행하는 것이 정책 우선순위임
- 근본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억제될 수 있도록 신중한 통화정책이 요구되며, 물가상승률이 하락함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정책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으나 대부분 주요 국가의 정책기조는 당분간 긴축적으로 유지해야 함

- 각국 정부는 채무 증가와 인구 고령화,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국방, 새로운 개혁을 위한 자금조달 필요성 등으로 인해 상당한 추가 지출 압박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지출 증가를 억제하고 세입을 강화하며 성장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강력한 노력이 필요
- 미래 생산량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반을 강화해야 하며, 교육 성과를 개선하고, 기술 개발과 혁신을 강화하며, 투자와 노동력 참여를 저해하는 노동 및 상품 시장의 제약을 줄이는 구조개혁 등이 필요
- 지식과 혁신의 확산을 돕고, 글로벌 무역을 강화하며, 탈탄소화와 저소득 국가의 채무 감소를 위해서는 강화된 다자간 협력이 필요



미국

[예산·결산 등]

- 의회 하원, 「이스라엘 안보 지원 법안(Israel Security Assistance Support Act; H.R. 8369)」 가결(2024. 5. 16.)<sup>9)</sup>
- (배경) 2023년 10월 7일에 발생한 하마스 무장 정파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 민간인 2,100명의 사망자 발생 및 240명의 포로 감금 상태
- 하마스의 공격 이후, 이란과 이슬람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Hezbollah) 및 후티(Houthis)

9) 미국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House Passes Israel Security Assistance Support Act," 2024. 5. 16.,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press-releases/house-passes-israel-security-assistance-support-act>, 검색일자: 2024. 5. 22.

의 공격이 이어짐

- (최근 현황) 2024년 5월 8일,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무기 및 포탄 지원 중단 선언
- (법안 주요 내용) 이스라엘 지원을 위해 이미 승인된 자금의 보류, 중지 등을 제한<sup>10)</sup>
  - 이미 승인된 이스라엘에 지원할 무기 등을 이스라엘에 조속히 전달하고, 의회에서 의결한 자금도 조속히 이행하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마스 및 관련 테러 단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sense of congress)을 법안 본문에 포함

※ 참고로, 미국은 2024년 4월 23일 의회 심의를 거쳐 우크라이나와 인도-태평양 지역 외에 이스라엘에 263.8억달러를 지원하는 국가 안보 관련 긴급 추경 세출예산(H.R. 815<sup>11)</sup>; P.L. 118-50)을 제정함<sup>12)</sup>

■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유지 결정 및 대차대조표 축소 속도 둔화 결정(2024. 5. 1.)<sup>13)</sup>

- (기준금리)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를 기존 수준(5.25~5.50%)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연방준비제도는 다음과 같이 현 경제상황을 평가
  - (경제성장) 경제활동이 강세를 보이며 계속

하여 확장됨

- (물가) 물가상승세는 지난 1년간 완화되었지만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
- (노동시장) 고용증가세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
- 지난 1년간 완전 고용 및 2%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있어 위험요소들(risks)이 더 나은 균형(better balance)을 향해 나아감

<표 4> 미국 2024년 1분기 주요 경제 지표 I  
- 물가, 노동시장

(단위: %, 천명)

구분		2024년 1월	2024년 2월	2024년 3월 <sup>1)</sup>
물가	PCE 물가 상승률	2.5	2.5	2.7
	재화	-0.5	-0.2	0.1
	서비스	4.0	3.9	4.0
	PCE 물가 상승률, 식품 및 에너지 제외	2.9	2.8	2.8
노동시장	생산가능인구	267,540	267,711	267,884
	경제활동인구	167,276	167,426	167,895
	경제활동참가율	62.5	62.5	62.7
	취업자 수	161,152	160,968	161,466
	인구 대비 취업률	60.2	60.1	60.3
	실업자 수	6,124	6,458	6,429
	실업률	3.7	3.9	3.8

주: 1. 물가상승률은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개인소비지출) 지표를 사용하여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로 계산

2. 물가지표 및 노동시장 지표 모두 계절 조정된 수치임

1) 해당 수치는 잠정치(preliminary)임

출처: 1.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Personal Income and Outlays, March 2024," Table 7, 2024. 4. 26.<sup>14)</sup>

2.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Employment Situation Summary," Table A-1, 2024. 5. 3.<sup>15)</sup>

10) 한편, 미국은 2016년에 이스라엘과 군사원조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서 미국이 향후 10년(2019~2028년)간 380억달러(매년 38억달러) 규모의 안보 및 미사일 방어(MD) 지원을 이스라엘에 제공하기로 함

11) 미국 백악관, "Press Release: Bill Signed: H.R. 815," 2024. 4. 24.,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4/04/24/bill-signed-h-r-815/>, 검색일자: 2024. 5. 23.

12)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4년 4월호, 2024. 5." 참고

13)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Press Release," 보도자료, 2024. 5. 1.,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monetary20240501a1.pdf>, 검색일자: 2024. 5. 16.

14) 링크: <https://www.bea.gov/sites/default/files/2024-04/pi0324.pdf>, 검색일자: 2024. 5. 16.

15) 링크: [https://www.bls.gov/news.release/archives/empsit\\_05032024.htm](https://www.bls.gov/news.release/archives/empsit_05032024.htm), 검색일자: 2024. 5. 16.

<표 5> 미국 2024년 1분기 주요 경제 지표 II - 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연간 성장률		분기별 성장률(전기 대비 연율)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Q1	Q2	Q3	Q4	Q1 <sup>1)</sup>
실질 GDP 성장률	1.9	2.5	2.2	2.1	4.9	3.4	1.6
명목 GDP 성장률	9.1	6.3	6.3	3.8	8.3	5.1	4.8

주: 분기별 성장률은 계절조정된 전기 대비 연율, 연간 성장률은 전년 대비 성장률을 의미

1) 해당 수치는 속보치를 사용

출처: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Gross Domestic Product, Fourth Quarter and Year 2023 (Advance Estimate),"<sup>16)</sup> Table 1, 2024. 1. 25.

-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sup>17)</sup>에서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가 충분히 제약적(restrictive)이며, 정책의 주안점은 현 기조를 언제까지 견지할 것인지에 두고 있음을 설명
  - 금리를 올려야 한다면 현재 정책이 제약적이지 않다는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다음 정책 금리 조정이 인상 절차는 아닐 것으로 예상
- (대차대조표) 6월부터 국채 월간 원금 환수(redemption) 한도를 60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감축한 대차대조표 축소<sup>18)</sup> 속도 둔화 계획을 발표
  - 정부기관 채권 및 정부기관 MBS(Mortgage-backed securities) 원금환수 월 한도는 350억 달러로 유지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중 조정된 월간 환수 한도 초과분은 재투자 예정
- 미국 공적연금 및 공적건강보험 신탁 이사회, 2024년도 공적연금(social security) 및 공적건강보험(medicare) 연간보고서 발표(2024. 5. 6.)<sup>19), 20), 21)</sup>
  - (배경) 미국 공적연금과 공적건강보험 신탁이사회는 매년 의회에 기금 현황 및 전망과 제언을 담은 연간보고서를 제출
    - (공적연금 전망) 노령·유족보험의 기금은 2033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며 장애보험은 보고서의 분석 기간 종점에 해당하는 2098년까지 예정된 급여 전액 지급 가능
    - 2033년 기금고갈 시 지급 가능 급여액은 기존 지급 계획액의 79% 수준으로 전망되며, 2098년에는 지급 계획 금액 대비 실지금액의 비율이 69%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

16) 링크: <https://www.bea.gov/sites/default/files/2024-04/gdp1q24-adv.pdf>, 검색일자: 2024. 5. 16.

17) 미국 연방준비제도, "Transcript of Chair Powell's Press Conference" 기자회견문, 2024. 5. 1., <https://www.federalreserve.gov/mediacenter/files/FOMCpresconf20240501.pdf>, 검색일자: 2024. 5. 16.

18) 연방준비제도의 대차대조표 축소란 자산을 만기 도래 전 매각하거나 만기가 도래한 자산을 재투자 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채, 정부기관채권 및 정부기관 MBS 보유량을 감축하는 조치를 일컫음

19) 미국 공적연금 신탁위원회, "The 2024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Federal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and Federal Disability Insurance Trust Funds," 2024. 5. 6., <https://www.ssa.gov/oact/TR/2024/tr2024.pdf>, 검색일자: 2024. 5. 17.

20) 미국 연방 의료보험 신탁위원회, "2024 Annual Report of the boards of Trustees of the Federal Hospital Insurance and Federal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Trust Funds," 2024. 5. 6., <https://www.cms.gov/oact/tr/2024>, 검색일자: 2024. 5. 17.

21) 미국 공적연금 및 공적건강보험 신탁위원회, "Status of the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Programs: A summary of the 2024 Annual Reports," <https://www.ssa.gov/oact/TRSUM/tr24summary.pdf>, 검색일자: 2024. 5. 17.

- 향후 75년에 대한 계리적 수치<sup>22)</sup>의 경우, 노령·유족보험은 동 기간 과세 대상 근로소득의 3.63%에 상응하는 적자, 장애보험은 0.14%에 상응하는 흑자로 전망<sup>23)</sup>
- (공적건강보험 전망) 미국 공적건강보험 중 병원보험의 기금고갈이 예상되며 고갈시점은 2036년으로 전망<sup>24)</sup>
- 2036년에 병원 보험 기금 고갈 시 계획된 급여의 89%만 지급 가능하며, 지급 계획 대비 지급률은 2048년 87%까지 감소한 뒤 재차 증가하여 2098년에 100%를 회복 전망
  - 지급 계획 금액 대비 지급률의 반등은 예정된 과세를 증가 및 의료 서비스 공급의 증가세 둔화 등에 기인
- 의회예산처(CBO), 인플레이션 영향 보고서 발표(2024. 5. 14.)<sup>25)</sup>
  - (개요) 본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인한 2019년(팬데믹 이전)과 가장 최근(2023년)의 가구 구매력(household's purchasing power)을 비교
  - (주요 분석 결과) 평균 가구 소득은 4년 전과 비교해 증가하였으나, 인플레이션 영향은 소득 그룹별로 상이
    - 2019년 대비 2023년의 소득이 물가(price)

〈표 6〉 미국 공적연금 및 공적건강보험 기금 현황 및 장기전망

(단위: 억달러, %)

구분	공적연금		건강보험		
	노령·유족보험(OASI)	장애보험(DI)	병원보험(HI)	추가의료보험(SMI)	
수혜범위	은퇴자	장애인	입원환자	외래환자	
최초 적자 발생연도	2021년		2030년		
현황	기금 적립금(2023년 말)	26,415	1,470	2,088	1,879
	2023년 기금수입	11,669	1,838	4,153	6,093
	2023년 기금지출	12,373	1,548	4,031	6,339
	2023년 기금 적립금 변화분	-704	290	122	-247
전망	기금 고갈시점	2033년	2098년 이후	2036년	
	2024~2098년 재정수지 적자(%)	-3.63	0.14	-0.35	
	예정된 수혜 비율(%)				
	기금 고갈 시점	79		89	
2098년	69	100	100		

주: 재정적자 항목 중 음수인 수치는 적자의 증가가 아닌 적자의 감소를 의미

1) 기간이전이란 기간 일정(예: 주말 전 지급 등)으로 인한 수입 지출 이동 내역(timing shift)을 의미

출처: 미국 공적연금 및 공적건강보험 신탁위원회, "Status of the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Programs: A summary of the 2024 Annual Reports," 2024.

22) 계리적 수치(actuarial balance)는 기금 적립금과 예상되는 기금 수입의 현가의 합에서 예상되는 지출의 현가를 차감한 것을 의미

23) 노령·유족·장애보험(OASDI)의 계리적 수치를 GDP 기준으로 평가 시 2098년까지 GDP의 1.2%를 차지

24) 추가의료보험(SMI)은 정부 부담금이 주 수입이며, 정부 부담 보험료가 연간 지출 전망에 맞추어 상승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금 재정 전망 논의에서 제외

25) CBO, "An Update About How Inflation Has Affected Households at Different Income Levels Since 2019," 2024. 5. 14., <https://www.cbo.gov/publication/60166>, 검색일자: 2024. 5. 11.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대비 더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2019년의 소득 대비 소비 비중도 감소<sup>26)</sup>

- 최상위 분위 가구의 경우, 2019년의 소비 묶음 구매 시 필요했던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
- 총지출에 대한 상품 지출 비중이 팬데믹 기간에 크게(considerably) 증가하였으나, 가구들이 점차 팬데믹 이전 소비 패턴으로 돌아오면서 2023년에는 그 비중이 현저히(markedly) 감소하였으며, 2023년 이후에도 지속 감소 전망

■ 미국 감사원(GAO),<sup>27)</sup> 2024년 연례 보고서(분절·유사·중복<sup>28)</sup> 프로그램 감축과 재정 절감방안) 발표(2024. 5. 15.)<sup>29)</sup>

- (개요) GAO는 2011년부터 매해 연방정부 부처·기관 등을 기준으로 정책 프로그램 등을 대상으로 비용절감·수입증대 및 정부의 효율·효과성 개선을 위한 보고서 발표
- (주요 조치 내역) 2024년 3월 기준, 2011년 보고서를 시작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지적 사항(2,018개)중 1,341건(66%)에 대해 완전 시정조치(full address)가 이루어짐
- 부분시정(partial address)은 139건(7%),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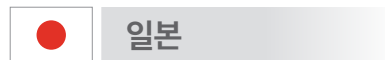
시정(not addressed) 410건, 기타 128건으로 집계

- (2024년 주요 조치) 본 보고서(2024년)는 비용절감·수입증대 및 정부의 효율·효과성 개선이 필요한 정부정책 범위(areas)를 총 42개\*로 구분한 총 112건의 신규 시정 요구 조치(actions)를 포함하여 발표

\* 42개의 정부정책 범위(areas) 중 분절, 유사, 중복 이슈가 있는 정부 정책 범위는 29개로 집계

- (조치 대응으로 인한 재정적 이익)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완전 또는 부분)로 인해 발생하는 총재정적 이득(financial benefits)은 6,675억 달러로 전망

- 총재정적 이득 중 최근(2011~2023년)까지 실현된 이득(estimated accrued benefits)은 5,963억달러로 추정 집계
- 총이득 규모 중 2024년 조치로 인한 발생이득(projected benefits)은 713억달러로 전망



■ 일본 내각부, 2024년 1분기 GDP 1차 속보치 발표(2024. 5. 16.)<sup>30)</sup>

26) 즉, 2023년에 2019년의 소비 묶음(commonly consumed goods and services) 구매 시 필요했던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이 모든 분위에서 감소

27) GAO: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8) 분절(Fragmentation): 1개 이상의 연방기관 또는 기관 내 하부조직이 동일한 분야의 서비스 집행에 관여 / 유사(Overlap): (다수기관의) 프로그램들이 유사한 사업목적 가지고 유사한 활동 또는 전략을 구사하거나 수혜자를 유사하게 설정 / 중복(Duplication): (다수기관의) 프로그램들이 동일한 사업 진행 또는 동일한 수혜자에게 동일한 효과가 있는 서비스 제공(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재정성과평가 동향과 이슈』 - 2017년 하반기에서 발췌, 2017. 12.)

29) “2024 Annual Report: Additional Opportunities to Reduce Fragmentation, Overlap, and Duplication and Achieve Billions of Dollars in Financial Benefits,” 2024. 5. 15., <https://www.gao.gov/products/gao-24-106915>, 검색일자: 2024. 5. 22.

30) 일본 내각부, 「2024년1~3月期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2024. 5. 16., [https://www.esri.cao.go.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https://www.esri.cao.go.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 검색일자: 2024. 5. 17.

- 전분기 대비 2024년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5%(연율 -2.0%)로 2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명목 GDP 성장률은 0.1%(연율 0.4%)
  - (내외수요 기여도)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국내수요(내수) 기여도는 -0.2%p로 4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재화·서비스 순수출(외수) 기여도는 -0.3%p로 2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
  - (민간수요) 민간수요는 전분기 대비 0.5% 감소하여 4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냄
    - 전분기 대비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자동차 및 휴대전화기 관련 지출 등의 감소에 기인하여 -0.7%를 나타냈으며, 민간주택과 민간기업설비는 각각 -2.5%, -0.8%를 나타냄
- 민간재고 변동의 GDP 기여도는 0.2%p로, 2023년 4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실질 재고 잔고의 증가폭이 확대됨에 따라 GDP 성장률에 긍정적으로 기여
  - (공적수요) 공적수요는 정부최종소비지출, 공적고정자본형성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전분기 대비 0.8% 증가
    - 전분기 대비 정부최종소비지출은 의료비 등 증가에 기인하여 0.2% 증가하였으며, 공적고정자본형성은 전분기 대비 3.1% 증가하여 3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
    - 공적재고변동의 GDP 기여도는 0%p
  - (수출입) 재화·서비스 수출은 자동차 및 지적재산권 사용료 등의 감소에 기인하여 전분기 대비 5.0% 감소하였으며, 재화·서비스

<표 7>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계절조정, 전분기 대비) 추이

(단위: %, %p)

구분	2023년				2024년	2024년 <sup>1)</sup>
	Q1	Q2	Q3	Q4	Q1	
실질 GDP	1.2	1.0	-0.9	0.0	-0.5	-2.0
국내수요	1.3	-0.6	-0.7	-0.2	-0.2	-0.6
민간수요	1.7	-0.9	-1.1	-0.2	-0.5	-2.0
민간최종소비지출	0.7	-0.7	-0.3	-0.4	-0.7	-2.7
민간주택	0.7	1.8	-0.9	-1.4	-2.5	-9.8
민간기업설비	2.5	-1.7	-0.2	1.8	-0.8	-3.2
민간재고변동	(0.5)	(-0.1)	(-0.6)	(-0.2)	(0.2)	-
공적수요	0.2	0.2	0.2	-0.1	0.8	3.3
정부최종소비지출	0.2	-0.1	0.3	-0.2	0.2	0.8
공적고정자본형성	0.9	2.2	-0.3	-0.2	3.1	13.1
공적재고변동	(-0.0)	(-0.0)	(0.0)	(0.0)	(0.0)	-
재화·서비스 순수출 <sup>2)</sup>	(-0.2)	(1.7)	(-0.1)	(0.2)	(-0.3)	-
재화·서비스 수출	-2.4	3.8	0.3	2.8	-5.0	-18.7
재화·서비스 수입	-1.5	-3.6	0.9	1.8	-3.4	-12.8
명목 GDP	2.2	2.6	-0.2	0.7	0.1	0.4
GDP 디플레이터	1.0	1.5	0.8	0.7	0.6	-

주: ( ) 안의 수치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1) 연율 환산 수치

2) 재화·서비스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

출처: 일본 내각부, 「2024년1~3月期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p. 11 표 2-1 및 p. 13 표 2-3 재구성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수입은 광물성 연료 및 휴대전화기 등 수입 감소에 기인하여 전분기 대비 3.4% 감소

- 이번 세수추계는 연방 정부의 2024년 봄 전망의 거시경제적 주요 수치를 기반으로 함
  - 실질 GDP 성장률은 직전 추계보다 2024년 1.4%p, 2025년 0.7%p 하향 조정되었으며, 2026년 이후 중기전망에서 GDP 성장률은 직전 추계보다 약간 더 높을 것으로 예상
  - 단체 임금협약 결과와 견고한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한 명목 임금 증가율은 직전 추계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인플레이션 보상법<sup>33)</sup>에 따른 지출이 지난 가을 예측보다 높음



### 독일

#### [예산·결산 등]

■ 독일 연방 재무부, 제166차 세수추계(Steuer-schätzung)<sup>31)</sup> 결과 발표(2024. 5. 16.)<sup>32)</sup>

<표 8> 독일의 제166차 세수추계 결과

(단위: 십억유로,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연방정부	금액	356.0	375.6	389.0	400.3	414.7	428.4
	전년 대비 증감률	5.6	5.5	.6	2.9	3.6	3.3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5.6	-11.0	-8.5	-7.8	-8.7
주정부	금액	382.6	394.4	411.0	426.7	443.5	459.5
	전년 대비 증감률	-0.5	3.1	4.2	3.8	3.9	3.6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5.4	-8.7	-7.8	-5.9	-6.0
지방자치단체	금액	141.8	145.8	152.6	159.4	165.8	171.7
	전년 대비 증감률	4.7	2.8	4.7	4.5	4.0	3.6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0.1	-2.0	-2.0	-1.1	-0.6
EU	금액	35.4	34.5	42.6	50.1	50.9	50.8
	전년 대비 증감률	-8.3	-2.7	23.6	17.7	1.5	-0.2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2.7	-0.3	0.3	1.4	1.8
총세수	금액	915.9	950.3	995.2	1,036.6	1,074.8	1,110.5
	전년 대비 증감률	2.3	3.8	4.7	4.2	3.7	3.3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13.8	-21.9	-18.0	-13.5	-13.5

출처: 독일 연방 재무부, "Ergebnis der 166. Sitzung des Arbeitskreises Steuerschätzungen" - Anlage 1, 2024. 5. 1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Steuern/ergebnis-166-steuerschaetzung-01.pdf?\\_blob=publicationFile&v=8](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Steuern/ergebnis-166-steuerschaetzung-01.pdf?_blob=publicationFile&v=8), 검색일자: 2024. 5. 21.

독일 연방 재무부, "Ergebnis der 166. Sitzung des Arbeitskreises" Steuerschätzungen" - Anlage 2, 2024. 5. 1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Steuern/ergebnis-166-steuerschaetzung-02.pdf?\\_blob=publicationFile&v=5](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Steuern/ergebnis-166-steuerschaetzung-02.pdf?_blob=publicationFile&v=5), 검색일자: 2024. 5. 21.

31) 독일은 연 2회 세수추계 결과를 발표함. 재무부를 비롯해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5개 경제연구소, 연방 통계청, 연방 중앙은행, 거시경제자문위원회, 주정부 재무부, 지방자치단체 연합회가 참여하는 세수추계위원회가 세수추계를 담당함

32) 독일 연방 재무부, "Ergebnisse der 166. Steuerschätzung," 보도자료, 2024. 5. 1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4/05/2024-05-16-ergebnisse-der-166-steuerschaetzung.html>, 검색일자: 2024. 5. 21.

독일 연방 정부, "Deutlich geringere Einnahmen," 2024. 5. 16.,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166-steuerschaetzung-lindner-2283360>, 검색일자: 2024. 5. 21.

33)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소득세 기본 공제액 및 자녀 공제액 인상 등을 추진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 2022년 8월호, 2022. 참고

- 5월부터 시행되는 세법 변화 등을 고려한 세수추계 결과, 총세입은 2024년 9,503억유로로 직전 추계(2023년 10월) 대비 138억유로 하향 조정됨
    - 직전 추계 대비 연평균 세입 규모는 약 160억 유로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당초 예상보다 더딘 경제 회복에 따른 경제평가 악화에 기인
  - 크리스티안 린드너(Christian Lindner) 연방 재무 장관은 세수 감소에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구조적 원인이 함께 작용하고, 연방 정부가 향후 몇 년 동안 세입 부족분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할 것이며, 추계 결과는 앞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임을 암시
- 안정화 위원회의 재정 전망에 따르면 금리 인상, 경제성장 둔화, 구조적 문제 증가와 함께 최근 몇 년간의 위기 대응 관련 지출로 공공예산은 계속해서 큰 어려움에 직면
    - 2023년 경제성장률은 -0.3%였으나, 2024년부터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됨
  - 재정 안정화 위원회는 안정성장협약에 기초한 중기 예산 목표(MTO)의 적자 상한(구조적 적자 GDP 대비 0.5%) 준수는 2028년까지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
    - 2024년 일반정부 적자는 GDP의 1.75%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1%로 감소할 전망
- (자문위원회<sup>36)</sup>의 평가) 연방재무부 전망에 따른 구조적 재정적자는 EU의 권고사항과 일치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재정준칙 한도를 준수해야 하며, 기후변화기금 외 특별기금의 적자관리 필요

## [기타]

### ■ 독일 재정 안정화 위원회,<sup>34)</sup> 제29차 회의 개최 (2024. 5. 6.)<sup>35)</sup>

- (주요 논의) 독일 재정 안정화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예산원칙법」 제51조 2항에 따른 구조적 일반정부 적자 한도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평가위원 선임을 논의

### ■ 독일 연방통계청, 2024년 1분기 GDP 성장률 발표(2024. 5. 24.)<sup>37)</sup>

- 2024년 1분기 독일의 GDP(가격, 계절변동 및 달러효과 조정)는 전분기 대비 0.2% 성장
  - 2024년 1분기는 전분기 대비 투자와 대외

34) 독일의 재정 안정화 위원회(Stabilitätsrat)는 연방 재무장관과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주 정부 재무장관들로 구성되어 통상 연 2회 회의를 개최. 연방 및 주정부 예산을 정기 모니터링해 예산 비상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EU 안정성장협약의 구조적 재정수지 기준 준수 여부를 파악해 필요 시 건전화 방안을 권고

35) 독일 연방 재무부, “29. Sitzung des Stabilitätsrates am 6. Mai 2024,” 보도자료, 2024. 5. 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4/05/2024-05-06-29-sitzung-stabilitaetsrat.html>, 검색일자: 2024. 5. 22.  
독일 재정 안정화 위원회, 21. Stellungnahme des Beirats 05/2024, 2024. 5. 6., [https://www.stabilitaetsrat.de/DE/Beschluesse-und-Beratungsunterlagen/Beschluesse-und-Beratungsunterlagen\\_node.html](https://www.stabilitaetsrat.de/DE/Beschluesse-und-Beratungsunterlagen/Beschluesse-und-Beratungsunterlagen_node.html), 검색일자: 2024. 5. 23.

36) 자문위원회는 구조적 재정적자 한도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련해 재정 안정화 위원회를 지원하여 의견 및 권고를 제시

37) 독일 연방통계청, “Bruttoinlandsprodukt: Ausführliche Ergebnisse zur Wirtschaftsleistung im 1. Quartal 2024.” Press Release, 2024. 5. 24.,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5/PD24\\_205\\_811.html](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5/PD24_205_811.html), 검색일자: 2024. 5. 27.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무역이 증가하여 민간소비 0.4%, 정부지출 0.4%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함
-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1분기 독일의 가격조정 GDP 성장률은 -0.9%, 가격 및 달력효과 조정<sup>38)</sup> 성장률은 -0.2%를 기록
- 2024년 1분기 GNI(경상가격 기준)는 전년 동기 대비 3.1%, 1인당 평균 총임금은 6.1%

- 로 크게 증가
- 취업자수는 4,58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하였으나 노동생산성(노동 시간당 가격 조정 GDP)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
- 독일의 2024년 1분기 전분기 대비 GDP 성장률은 프랑스(0.2%)와 비슷하지만 스페인(0.7%), 이탈리아(0.3%), 유럽평균(0.3%)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

<표 9> 독일의 분기별 GDP 성장률

(단위: 십억유로, %, 지수)

구분	원계열				가격 조정(X-13 활용)		
	경상가격 기준		가격 조정, 연쇄가격 기준		계절변동 및 달력효과 조정		달력효과 조정
	10억유로	% <sup>1)</sup>	2015=100	% <sup>1)</sup>	2015=100	% <sup>2)</sup>	% <sup>1),3)</sup>
2023년(연간)	4,122.21	6.3	108.01	-0.2	108.03	0.0	0.0
2023년 1분기	1,012.93	7.4	180.54	0.5	108.15	0.3	0.1
2023년 2분기	1,009.17	6.2	106.37	-0.3	108.07	-0.1	0.1
2023년 3분기	1,037.07	6.2	108.67	-0.5	108.22	0.1	0.0
2023년 4분기	1,063.04	5.6	108.45	-0.4	107.68	-0.5	-0.2
2024년 1분기	1,049.32	3.6	107.53	-0.9	107.91	0.2	-0.2

주: 1) 전년도 또는 전년 동분기 대비 변화

2) 전년도 또는 직전 분기 대비 변화

3) 연도별 GDP 성장률은 달력효과 조정값과 계절변동 및 달력효과 조정값이 동일(반올림으로 인한 차이 제외)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Bruttoinlandsprodukt: Ausführliche Ergebnisse zur Wirtschaftsleistung im 1. Quartal 2024," Press Release, 2024. 5. 24.,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5/PD24\\_205\\_811.html](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5/PD24_205_811.html), 검색일자: 2024. 5. 27.



## 프랑스

### [예산·결산 등]

#### ■ 프랑스 재무부, 2024년 국가개혁프로그램

(Programme National de Réforme 2024) 발표 (2024. 5. 3.)<sup>39)</sup>

- 국가개혁프로그램은 프랑스가 직면한 주요 과제에 대한 정부의 경제정책 전략을 제시
- 고용을 늘리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38) 해당 자료는 계절조정을 계절변동(달력효과 미반영) 조정과 달력효과(공휴일, 조업일수 변화 등을 반영) 조정으로 구분

39) 프랑스 재무부, *Programme National de Réforme 2024*, 2024. 5. 4., <https://www.tresor.economie.gouv.fr/Articles/2024/05/03/le-programme-national-de-reforme-pnr-2024-a-ete-transmis-a-la-commission-europeenne>, 검색일자: 2024. 5. 21.

- 개혁을 추진해 2027년까지 완전 고용을 달성
- 최근 시행된 실업보험 개혁으로 실업자의 노동시장 복귀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었고, 연금 개혁으로 인해 노년층 취업률 상승이 예상된다
  - 지속적인 직업 교육을 통해 실업자가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고 직업 능력 개발 지원
  - 직업 고등학교 개혁 및 견습 제도 지원을 통해 청년의 고용 지원 강화
  - 산업 경쟁력 및 혁신 강화를 통한 산업 활력 회복
    - 공공과 민간 R&D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재산업화<sup>40)</sup> 지속 및 확대
    - 미래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환경 간소화
  - 인적 자본 강화를 위해 교육에 대규모 투자
    - 교육 혁신 기금을 조성하여 혁신적인 교육 방법 도입
    - 교사의 보수 인상 및 연수 기회 제공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
    - 보육시설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보육의 질 개선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생태학적 전환 가속화
    - 화석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산업 공정 변화에 대한 투자 지원
    -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친환경 이동수단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프로젝트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여 재생에너지의 배치를 가속화
  - 프랑스의 주권 및 회복력 강화
    - 재정지출 통제를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보건, 국방, 디지털 및 생태학적 전환, 잠재적 성장 지원 등 전략 분야 지원을 위한 재정여력 확보
    - 공공 보건 시스템의 질, 효율성,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혁 필요성 강조
    - 국제적인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프랑스의 방어 체계 구축 노력 지속
  - 프랑스 예산국, 2024년 1분기 중앙정부 예산집행 결과 발표(2024. 5. 3.)<sup>41)</sup>
    - (재정수지) 2024년 1분기 프랑스의 총재정수지는 528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9억유로 감소
    - (재정지출) 2024년 1분기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은 980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24억유로 감소
      -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예외적인 가격 보호 조치 종료 반영
    - (재정수입) 2024년 1분기 일반예산수입(re-

40) 제조업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며, 혁신과 R&D를 촉진하여 경제적 자립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는 노력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산업 시설 확장, 친환경 기술 도입, 세제 혜택 제공 등을 추진

41)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État au 31 mars 2024," 2024. 5. 3., <https://www.budget.gouv.fr/documentation/file-download/23466>, 검색일자: 2024. 5. 21.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cettes du budget général)은 715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1억유로 감소  
- 경제활동 부진으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13억유로 감소하는 등 조세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

<표 10> 프랑스 2024년 1분기 예산집행 결과

(단위: 백만유로, %)

구분	2022년 1분기	2023년 1분기	2024년 1분기	2024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재정수지(Solde du budget général)	-27,808	-42,477	-40,186	-
재정지출(Dépenses)	107,763	115,944	112,784	-2.7
재정수입(Recettes)	79,955	73,467	72,598	-1.2
특별회계(Solde des comptes spéciaux)	-10,526	-12,247	-12,596	-
총재정수지(Solde général d'exécution)	-38,334	-54,724	-52,782	-

출처: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Etat au 31 mars 2024," 2024. 5. 3.

<표 11> 프랑스 2024년 1분기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

(단위: 백만유로, %)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률
<b>총재정지출(Dépenses (budget général et prélèvements sur recettes))</b>	<b>115,944</b>	<b>112,784</b>	<b>-2.7</b>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100,485	98,048	-2.4
정부지원(Dotation des pouvoirs publics)	1,077	1,138	5.7
인건비(Dépenses de personne)	35,772	38,618	8.0
운영비(Dépenses de fonctionnement)	16,583	18,163	9.5
부채비용(Charges de la dette de l'État)	5,928	4,754	-19.8
투자지출(Dépenses d'investissement)	5,106	5,234	2.5
정부개입지출(Dépenses d'intervention)	35,713	29,876	-16.3
금융활동(opérations financières)	307	265	-13.6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15,459	14,736	-4.7
지방자치단체 이전(Prélevements au profi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8,962	9,340	4.2
EU 부담금(Prélevement au profit de l'Union européenne)	6,498	5,397	-16.9
<b>총재정수입(Recettes du budget général (avec fonds de concours))</b>	<b>73,467</b>	<b>72,598</b>	<b>-1.2</b>
일반예산수입(recettes du budget général)	72,647	71,457	-1.6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70,725	69,613	-1.6
소득세(impôt sur le revenu)	17,795	17,742	-0.3
법인세(impôt sur les sociétés)	12,528	12,820	2.3
에너지제품소비세 (Taxe intérieure de consommation sur les produits énergétiques(TICPE))	4,055	3,653	-9.9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joutée(TVA))	26,063	24,749	-5.0
기타 조세수입(Autres recettes fiscales)	10,283	10,649	3.6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1,922	1,844	-4.1
협력기금(Fonds de concours) <sup>1)</sup>	820	1,141	39.1

주: 1) 공익적 지출에 기여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납입하는 비조세적 성격의 기금으로 재정조직법(LOLF)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제3자의 부담금  
출처: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Etat au 31 mars 2024," 2024. 5. 3.



## 영국

■ 영국 재무부, 북아일랜드 정부와 임시 재정 프레임워크(Interim Fiscal Framework)에 합의 발표 (2024. 5. 21.)<sup>42)</sup>

- (개요) 정부는 북아일랜드의 지속가능한 공공재정 및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자본지출 차입 한도 증액, 바넷 공식에 필요기반 요소(needs-based factor)<sup>43)</sup>의 적용 등, 재정 프레임워크에 대해 논의
- (합의 주요 내용) 바넷 공식의 보완, 연간 자본지출 차입 한도 증액, 북아일랜드 채무 상각(write off) 등에 합의
  - 예외적으로 웨일스에만 적용되었던 필요기반 요소를 2024-25회계연도부터 북아일랜드에도 적용하되, 그 수치는 124%로 설정
    - 단,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출처에서 상대적 수요가 124%와 차이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경우, 상대적 수요에 대한 검토를 고려
  - 지출검토(Spending Review)<sup>44)</sup>에서 2026-

27회계연도 자금조달을 포함하여 북아일랜드의 자금조달 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논의

- 연간 자본지출 차입 한도는 2024-25회계연도에 2억파운드에서 2억 2천만파운드로, 2천만파운드 증액하고, 2025-26회계연도에 는 물가상승률에 맞춰 증액
- 2022-23회계연도와 2023-24회계연도에 거버넌스 격차로 인해 발생한 북아일랜드 채무 5억 5,900만파운드를 상각하되, 북아일랜드 정부는 2024년 8월까지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을 위한 계획을 발표
  - 또한 2024년 가을까지 포괄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장기 전략적 인프라 계획도 발표

■ 영국 통계청, 2024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2024. 5. 22.)<sup>45)</sup>

- 2024년 4월 CPIH<sup>46)</sup>는 전년 동월 대비 3.0%, CPI는 2.3% 상승하여, 3월 대비 각각 0.8%p, 0.9%p 하락
  - 이는 최근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2년 10월 (각각 9.6%, 11.1%) 이후 최저치로, 영국 중

42) HM Treasury, "Deal reached on interim Fiscal Framework for Northern Ireland," News story, 2024. 5. 21., <https://www.gov.uk/government/news/deal-reached-on-interim-fiscal-framework-for-northern-ireland>, 검색일자: 2024. 5. 22.

HM Treasury, "Northern Ireland Executive's Interim Fiscal Framework," Policy paper, 2024. 5. 2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orthern-ireland-executives-interim-fiscal-framework>, 검색일자: 2024. 5. 22.

43) 영국은 바넷 공식(Barnett Formula)을 이용하여 포괄보조금(block grant)의 연간 변화량을 계산하고, 이를 활용하여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지방정부에 대한 영국 정부의 예산을 결정. 바넷 공식은 [영국 정부 부처 예산의 연간 변화량(파운드)]×[영국 부처의 서비스가 지방정부에 위임된 정도(%)]×[잉글랜드 인구 대비 지방정부의 인구 비율(%)]로, 각 부처에 대해 수행되고, 각 결과 값은 합산되어 각 지방정부의 포괄보조금에 추가되는 방식. 예외적으로 웨일스의 경우, 공공서비스의 재정적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상대적 포괄보조금이 잉글랜드의 115%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기반 요소(115%)]를 추가적으로 적용(출처: Matthew Keep, The Barnett formula and fiscal devolution, Research Briefing, House of Commons Library, 2024.)

44) 영국의 지출검토는 2~4년마다 이루어지며, 검토 기간 각 연도의 정부 부처별 지출 한도를 설정함

45)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Consumer price inflation, UK: April 2024," 2024. 5. 22.

46) Consumer Prices Index including owner occupiers' Housing costs: 주민세(Council tax)와 자가 거주자의 주택 소유, 유지, 거주 비용을 포함한 소비자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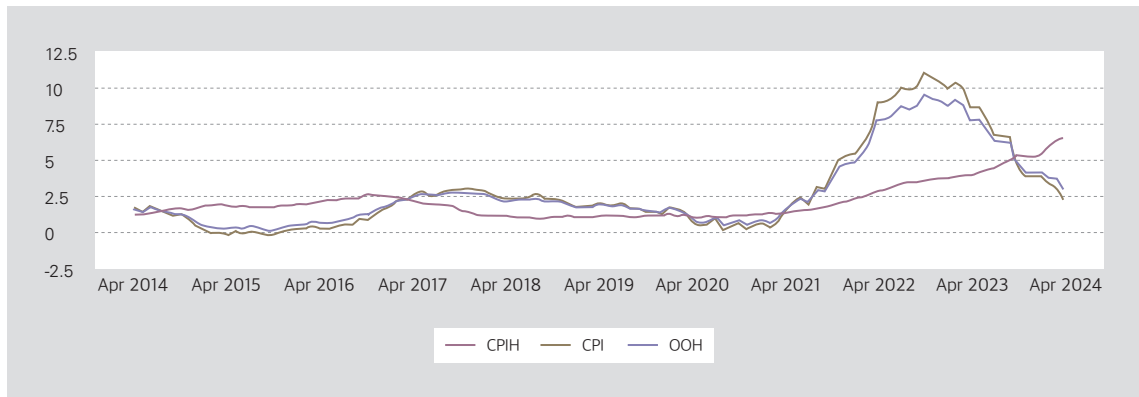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양은행 목표치인 2%에 가장 근접한 수치
-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가스 및 전기 가격 하락이 물가 하락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고, 자동차 연료 가격 상승은 이를 부분적으로 상쇄
- OOH<sup>47)</sup>는 전년 동월 대비 6.6% 상승하여, 3월 대비 0.3%p 상승

- 이는 199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연율
- 에너지, 식품,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 Core CPIH와 Core CPI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4%, 3.9% 상승하여, 3월 대비 모두 0.3%p씩 하락

[그림 1] 물가상승률 추이(전년 동월 대비)

(단위: %)



출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Consumer price inflation, UK: April 2024," 2024. 5. 22.



## 호주

### [예산·결산 등]

- 호주 연방정부, 2024-25회계연도<sup>48)</sup> 예산안 발표 (2024. 5. 14.)<sup>49)</sup>
  - (경제) 호주 경제는 2023-24회계연도에 1.75%, 2024-25회계연도 2%, 2025-26회계연도 2.25%로 완만한 성장을 나타낼 전망
  - 호주 경제는 글로벌 경제성장 대비 둔화, 완

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률 및 높은 금리로 인해 2022-23회계연도 대비 성장이 둔화

- 높은 임금상승률, 인플레이션 완화 전망, 지속적 고용 증가, 정부의 생계비 부담 완화 조치 등은 가계 실질가처분 소득 및 가계 소비 회복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
- (고용) 2024-25회계연도 기간 동안 노동시장이 완화되면서 실업률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2024-25회계연도 실업률은 4.5%로

47) Owner occupiers' housing costs(자가 거주비용): CPIH의 구성요소로, CPIH의 16%를 차지하며, CPIH와 CPI 상승률 간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동인

48) 2024-25회계연도: 2024년 7월~2025년 6월

49) 호주 예산안 홈페이지, <https://budget.gov.au/content/documents.htm>, 검색일자: 2024. 5. 14.

-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
- (물가) 에너지 요금 지원 조치 등으로 2024-25 회계연도 물가상승률은 2.75%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
    -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상당히 완화되었으며, 현재는 2022년 최고치의 절반 이하
    - 국내외 경제전망은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이번 예산의 에너지 요금 지원<sup>50)</sup> 및 연방 임대료 지원 조치는 2024-25회계연도 물가상승률을 0.5%p까지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
  - (재정) 2024-25회계연도 현금수지(underlying cash balance)는 283억호주달러 적자, 2025-26회계연도에는 428억호주달러 적자로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기적으로는 점차 개선될 전망
    - 2022-23회계연도 현금수지는 221억호주달러(GDP의 0.9%) 흑자, 2023-24 회계연도에는 93억호주달러(GDP의 0.3%) 흑자가 예상되어 약 20년 만에 연속 2개년도 흑자 달성
    - (수입) GDP 대비 수입(Receipts) 비중은 2023-24회계연도에 25.8%에서 2024-25 회계연도 25.3%, 중기적으로 2027-28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25.2%로 하락할 전망
    - (지출) 2024-25회계연도 지출(Payments)은 총 7,267억호주달러(GDP의 26.4%)로 2023-24회계연도 대비 437억호주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7-28 회계연도에는 GDP의 26.0%까지 감소할 전망
    - (채무) 총채무는 2026-27회계연도에 GDP의 35.2%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34-35회계연도까지 30.2%로 개선될 전망

〈표 12〉 2024-25회계연도 주요 재정 변수 전망

(단위: 십억호주달러, %)

구분	실적		전망			
	2022-23 회계연도	2023-24 회계연도	2024-25 회계연도	2025-26 회계연도	2026-27 회계연도	2027-28 회계연도
수입(Payments) <sup>1)</sup>	649.5	692.3	698.4	719.4	760.0	801.8
GDP 대비 비율	25.3	25.8	25.3	25.1	25.1	25.2
지출(Receipts) <sup>1)</sup>	627.4	683.0	726.7	762.2	786.7	826.2
GDP 대비 비율	24.5	25.4	26.4	26.6	26.0	26.0
현금수지 <sup>2)</sup> (Underlying Cash Balance)	22.1	9.3	-28.3	-42.8	-26.7	-24.3
GDP 대비 비율	0.9	0.3	-1.0	-1.5	-0.9	-0.8
총채무(Gross Debt)	889.8	904.0	934.0	1,007.0	1,064.0	1,112.0
GDP 대비 비율	34.7	33.7	33.9	35.1	35.2	34.9
순채무(Net Debt)	491.0	499.9	552.5	615.5	660.0	697.5
GDP 대비 비율	19.2	18.6	20.0	21.5	21.8	21.9

주: 1) 현금주의 기준

2) 현금주의 기준. 현금수지=수입-지출

출처: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4-25 Overview," 2024. 5. 14, p. 58

50)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가구당 300호주달러, 소규모 기업에 325호주달러의 에너지 요금 지원을 발표하였으며, 현금 지급이 아닌 에너지 요금에서 청구액 할인으로 지원

- (예산 기초 및 우선순위) ‘세계 지원 및 미래를 위한 투자’를 목표로 1) 생계비 부담 완화, 2) 주택 건설, 3) 미래를 위한 투자, 4) 메디케어 및 돌봄 강화, 5) 기회 확대 및 평등 증진에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 반영
  - (생계비 부담 완화) 납세자에 대한 세금 감면, 에너지 요금 지원, 연방 임대료 지원 추가 인상, 학생 및 의약품에 대한 재정지원 조치 등을 통한 생계비 완화
  - (주택 건설) 더 많은 주택 제공, 사회주택 및 노숙자를 위한 재원 추가, 성장 지역의 교통 개선 투자 등 인프라 확충
  - (미래를 위한 투자) 재생가능 에너지 강대국이 되기 위한 정부 계획 가속화, 디지털 및 국방 우선순위에 투자, 중소기업 지원, 고등 교육 개혁 등 미래를 위한 투자 집중
  - (메디케어 및 돌봄 강화) 긴급클리닉을 포함한 메디케어 강화, 의약품 보조금 제도 (PBS)<sup>51)</sup> 목록 재검토 및 업데이트 등 저렴하고 접근하기 쉬운 의료서비스 제공에 투자, 노인 돌봄 개선, NDIS<sup>52)</sup> 정상화 등 포함
  - (기회 확대 및 평등 증진) 유급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연금 지급,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성평등 지원 계획, 원주민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

[기타]

- 호주 중앙은행(RBA), 2024년 5월 경제전망 업데이트 및 기준금리 동결 발표(2024. 5. 7.)<sup>53)</sup>
  - (경제) 호주의 경제성장률은 2024년 1.6%으로 지난 2월 전망(1.8%) 대비 하향조정 되었으나, 2025년 2.3%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노동)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나 최근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실업률은 2024년 4.2%, 2025년에는 4.3%로 전망
  - (물가) 지난 2월 전망과 동일하게 물가상승률은 2025년 하반기 중앙은행의 목표범위인 2~3%대로 진입할 전망이다, 단기 물가상승률은 이전 전망 대비 상향 조정
    -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지만 예상했던 완화 속도보다 느리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지난 2월 전망에서는 올해 6월 물가상승률이 3.3%로 둔화하고 내년 12월 2%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전망에서 올해 6월 물가상승률 전망은 3.8%로 상향 조정
  - 2024년 5월 회의에서 중앙은행 이사회는 기준금리 목표를 4.35%로 동결

51) Pharmaceutical Benefit Scheme: 호주 국민이 사용하는 외래 처방 의약품의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급여 의약품 목록이자 비용 상환 방식과 주체 모두를 아우르는 체계(출처: Korean Journal of Clinical Pharmacy)

52)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호주는 국가장애보험제도를 2013년 도입하였으며, 10년간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최근 동 제도에 대한 개혁 이슈가 논의 중

53) 호주 중앙은행, “Statement on Monetary Policy – May 2024,” 2024. 5. 7., <https://www.rba.gov.au/publications/smp/2024/may/>, 검색일자: 2024. 5. 7.  
 \_\_\_\_\_, “Statement by the Reserve Bank Board: Monetary Policy Decision,” Media release, 2024. 5. 7., <https://www.rba.gov.au/media-releases/2024/mr-24-08.html>, 검색일자: 2024. 5. 7.

&lt;표 13&gt; 호주의 주요 경제 지표 전망

(단위: %)

구분	2023년 12월	2024년 6월	2024년 12월	2025년 6월	2025년 12월	2026년 6월
GDP 성장률	1.5	1.2	1.6	2.1	2.3	2.4
실업률	3.9	4.0	4.2	4.3	4.3	4.3
소비지물가상승률	4.1	3.8	3.8	3.2	2.8	2.6

주: 표의 단위는 해당 분기 이전 4분기 동안의 퍼센트 변화분을 나타내며, 실업률은 분기별임

출처: 호주중앙은행, "Statement on Monetary Policy - February 2024," 2024, p. 6, Table 발체, 2024. 5. 7., <https://www.rba.gov.au/publications/smp/2024/may/>, 검색일자: 2024. 5. 7.



## 네덜란드

### [예산·결산 등]

■ 네덜란드 재무부, 「2023년 국가재정연례보고서(National Financial Annual Report)」 발표 (2024. 5. 15.)<sup>54)</sup>

- 2023년 격변하는 세계경제 상황 가운데 네덜란드는 고물가·고금리로 경제성장이 둔화하여 경제성장률이 2022년 4.3%에서 2023년 0.1%로 하락
- 2023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예산안의 추정치(재정수지 GDP 대비 -3%, 정부채무 49.5%)보다 개선된 -0.3%, 46.5%로 각각 집계
- 2023년 재정수지가 예산안의 추정치보다 개선된 -0.3%인 것은 예상보다 높은 조세수입(191억유로), 당초 예산 대비 미집행분(130억유로), 지방정부의 재정수지 흑자(20억유로)에 기인

- 2023년 국가채무는 지난 2개년(2022년 GDP 대비 51.0%, 2021년 52.1%)보다 낮았으며, 채무 감소는 주로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명목GDP 상승에 기인(분모 효과)

- 중앙정부는 지난 몇 년간 재정관리의 우선 순위인 코로나19 팬데믹 및 에너지위기 관련 지원 조치를 마무리하고 2023년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재정관리 등에 중점을 둬
- 네덜란드 감사원에 따르면 2023년 의무지출(obligations), 재정지출, 재정수입의 규정 준수성<sup>55)</sup>은 각각 98.9%, 99.6%, 99.9%로 나타났으며, 예년에 비해 준수성 비율은 지속적으로 향상

&lt;표 14&gt; 주요 거시경제 수치

(단위: %, 천명)

구분	2023년 예산안	2023년 재정연례보고서
국내 총생산(GDP)	1.5	0.1
인플레이션	2.6	3.8
임금상승률	3.7	5.9
실업자 수(천명)	385	358

출처: 네덜란드 재무부, "Financieel Jaarverslag van het Rijk 2023," 2024. 5. 17.

54) 네덜란드 재무부, "Financieel Jaarverslag van het Rijk 2023," 2024. 5. 15., <https://www.rijksfinancien.nl/financieel-jaarverslag/2023>, 검색일자: 2024. 5. 17.

55) 네덜란드 감사원이 정부의 재정실적을 감사할 때 적용하는 기준은 장관이 계획된 지출·수입을 예산법의 조항과 국제 규정, 일반 행정명령에 따라 모든 자금을 수령하고 지출하였는지, 모든 부처의 규정 위반사항이 1% 기준(모든 부처의 합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함

<표 15> 주요 재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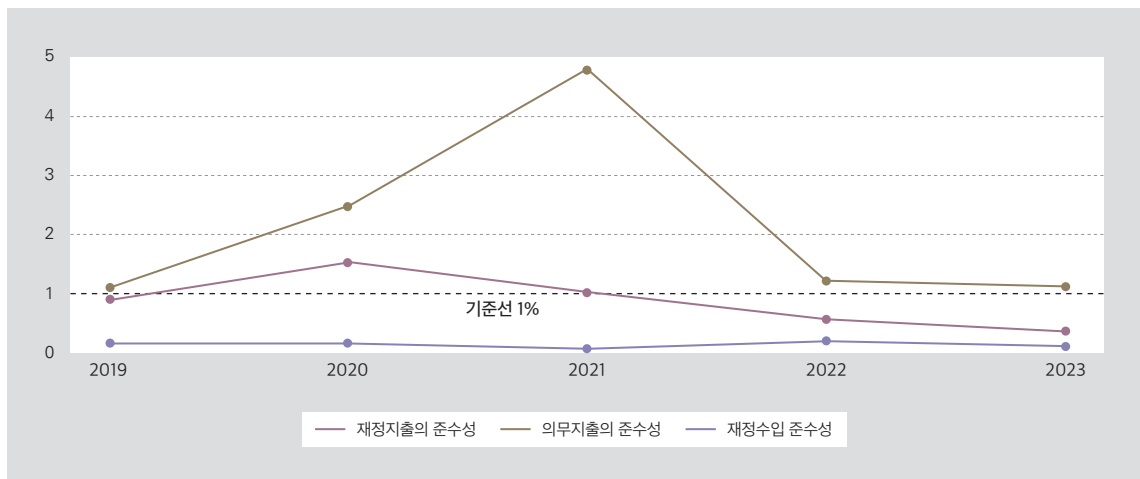
(단위: 십억유로, GDP 대비 %)

구분	2023년 예산안	2023년 재정연례보고서	차이
일반정부 재정수입	366.4	385.6	19.1
일반정부 재정지출	395.0	390.3	-4.7
일반정부 재정수지	-29.6	-3.5	26.0
(GDP 대비 %)	-3.0%	-0.3%	2.6%
국가채무	491.7	480.7	-11.0
(GDP 대비 %)	49.5%	46.5%	-3.0%

출처: 네덜란드 재무부, "Financieel Jaarverslag van het Rijk 2023," 2024. 5. 17.

[그림 2] 2019~2023년 미준수 비율 변화

(단위: %)



주: 위 그래프의 미준수 비율이 0%에 근접할수록 준수성 비율은 100%에 가까워짐을 의미

출처: 네덜란드 재무부, "Financieel Jaarverslag van het Rijk 2023," 2024. 5. 15.

[기타]

■ 네덜란드의 새로운 연립정부, 연립내각합의서 (Coalition Agreement) 발표(2024. 5. 16.)<sup>56)</sup>

- 네덜란드의 새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임명된

리처드 반 즈월(Richard van Zwol)과 엘베르트 다이크그라프(Elbert Dijkgraaf) 조정자는 자유당, 자유민주당, 신사회계약당, 농민시민운동당의 4개 당 지도자들과 연정구성 협상<sup>57)</sup>을 완료하고 5월 16일 연립내각합의서를 발표

56) 네덜란드 연립정부, "Eindverslag en hoofdlijnenakkoord informateurs Dijkgraaf en Van Zwol," 2024. 5. 16., <https://www.kabinetsformatie-2023.nl/actueel/nieuws/2024/05/16/eindverslag-en-hoofdlijnenakkoord-informateurs-dijkgraaf-en-van-zwol>, 검색일자: 2024. 5. 21.

57) 지난 2023년 7월 이전 네덜란드 내각은 망명 및 이주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와 망명 신청자의 '유입' 통제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 붕괴됨. 이로써 루테 총리의 4차 내각은 1년 반 만에 막을 내렸으며,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새로운 정책 계획의 중단으로 이어짐. 그 후 오랜 기간의 협상 끝에 자유당(PVV), 자유민주당(VVD), 신사회계약당(NSC), 농민시민운동당(BBB)은 새 내각을 꾸리기로 합의

- 연립내각합의서에서는 총 10가지의 정책주제에 대한 목표와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으며, 역대 가장 엄격한 망명·이민정책을 골자로 함
    - 10가지의 주제는 1) 사회보장 및 구매력 확보, 2) 망명·이민 통제, 3) 주택, 인프라 및 교통, 4) 농업과 어업, 5) 에너지, 6) 돌봄과 교육, 7) 좋은 거버넌스와 강력한 법치주의, 8) 국가안보, 9) 국제안보, 10) 탄탄한 국가재정,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
    - 계속 증가하는 국가채무를 방지하기 위해 2028년까지 재정적자를 GDP 대비 최대 2.8%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
    - 현재의 재정적자를 합의된 목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2025~2029년 동안 정부지출 삭감 조치 471억유로와 세금인상 조치 162억유로 규모의 조치가 포함되어있으며,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폐지: 2025~2029년 동안 38억유로 세금인상 난민에 대한 영주권 허가를 폐지하고, 거부된 망명 신청자는 국외로 추방: 2025~2029년 동안 25억유로 지출절감
    - 주택, 인프라 등 야심찬 투자 계획 이행을 위해 세금감면 및 투자 조치 608억유로 규모의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어있으며,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의료부문 공제액(Eigen risico)<sup>58)</sup>을 2027년
- 까지 현재 연간 385 → 165유로로 절반 이상 인하: 2025~2029년 동안 139억유로 세금감면
-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10만채의 신규 주택 건설을 촉진할 계획: 2025~2029년 동안 50억유로 투자
  - 2024년 봄각서의 천연가스에 대한 에너지세 3~5등급 세율, 2025년부터 22.4% 인상 조치 폐지: 2025~2029년 동안 10억유로 세금감면
  - 2025년부터 1인당 아동수당 139유로 인상\*에 따른 보육예산 증액: 2025~2029년 동안 15억유로 투자
- \* 2024년 현재 아동수당은 첫째 자녀의 경우 최대 750유로, 둘째 자녀부터 최대 883유로
- 우크라이나 군사적지원 등 국방비 지출을 NATO 기준에 따라 GDP의 최소 2%를 목표로 지출: 2025~2029년 동안 55억유로 투자
- 이번 연립내각 합의가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2025~2026년 재정수지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2027년부터 플러스(+) 영향을 미쳐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재정수지가 개선되는 효과
  - 재정수지에 2025년 -73억 9천만유로, 2026년 -2억 1,900만유로, 2027년 5억 2,700만유로, 2028년 48억 6,200만유로, 2029년 46억 6천만유로만큼 영향

58) 의료부문 공제액(Eigen risico)은 네덜란드의 기본 건강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본인 부담금 또는 공제액을 의미함. 이 제도는 기본 건강 보험 가입자가 매년 일정 금액까지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이 금액은 385유로임. 즉, 보험 가입자는 이 금액까지의 의료비를 본인이 지불하고, 그 이후의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함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표 16> 연립내각 합의가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가. 세금 인상	302	2,962	3,831	4,507	4,627
나. 세금감면 및 투자	-9,569	-8,969	-14,155	-13,552	-14,652
나. 지출 절감	1,877	5,788	10,851	13,907	14,685
라. 재정수지 변화	-7,390	-219	527	4,862	4,660

출처: 네덜란드 재무부, "Budgettaire bijlage hoofdlijnenakkoord," 2024. 5. 16., 표 재구성

<표 17> 세금인상 조치 요약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캠핑장을 제외한 숙박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폐지		1,212	1,212	1,212	1,212
순환형 플라스틱 부과금 도입				547	547
문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폐지		953	953	953	953
도박세 30.5%에서 37.8%로 인상	202	202	202	202	202
부정적으로 평가된 조세제도의 규정 단계적 폐지		250	250	250	250
2027년 1월 1일부터 태양광 발전에 대한 상계거래제도 폐지			621	625	720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공제 한도 설정	100	100	100	225	250
비행세는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			248	248	248
일반 실업기금(AWf)의 고용주 부담금 0.1%p 인상		245	245	245	245
<b>세금인상 총합</b>	<b>302</b>	<b>2,962</b>	<b>3,831</b>	<b>4,507</b>	<b>4,627</b>

출처: 네덜란드 재무부, "Budgettaire bijlage hoofdlijnenakkoord," 2024. 5. 16., 표 재구성

<표 18> 세금 감면 및 투자 사항 요약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중산층 근로자 구매력 및 세제혜택	-2,000	-2,000	-2,000	-2,000	-2,000
2025~2027년 사회부조에 대한 이중 세액 공제의 단계적 폐지 기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동결	-72	-167	-263	-251	0
취약계층 지원	-237	-237	-237	-249	-500
아동 관련 예산 증가	-300	-300	-300	-300	-300
주택 수당 증가	-500	-500	-500	-500	-500
건강보험법상 의료부문 공제액 2027년까지 165유로로 절반 이상 인하			-4,321	-4,660	-5,002
2025년과 2026년 현재 의료부문 공제액 385유로 동결		-262			
의료부문 25억유로의 세금경감	-2,500	-2,500			
건강보험료, 소득관련 기여금(AB) 및 의료 수당에 대한 공제액 폐지	0	207	3,796	4,100	4,350
소득세 국민보상	0	-171	-3,040	-3,272	-3,487
보험회사(AOF) 프리미엄을 통한 기업의 세금경감	0	-36	-757	-828	-862
노인 돌봄 투자			-600	-600	-600
농업용 디젤 사용 재도입			-131	-132	-141
국제안보 강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1,400	-1,700	-2,400
NATO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 목표료 방위비 지출					
농민에 의한 농업관리		-500	-500	-500	-500
좋은 거버넌스와 법치에 투자	-100	-150	-200	-200	-200

&lt;표 18&gt;의 계속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국가 안보 강화-경찰, 사법, 보안 서비스 강화	-200	-250	-300	-300	-300
자사주 매입 폐지 반대	-800	-800	-800	-800	-800
2024년 불가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 12.7 → 12.03% 인하 폐지	-93	-93	-93	-93	-93
2024년 불가사의 천연가스에 대한 에너지세 3~5등급 세율 2025년부터 22.4% 인상 폐지	-211	-209	-198	-187	-227
2025년부터 소득세의 구간 2의 세율을 31 → 33%로 인상 조치 취소	-214	-214	-214	-214	-214
소득세의 구간 3의 세율 인하	-100	-100	-100	-100	-100
연료 소비세 인하 2025년까지 1년 연장	-1,539				
에너지세 감면	-271	-260	-275	-296	-357
법인세 이자공제 한도 20 → 25% 인상	-432	-427	-425	-423	-419
학자금 대출 학생에게 14억유로의 추가 지원			-1,297	-47	0
<b>세금감면 및 투자 총합</b>	<b>-9,569</b>	<b>-8,969</b>	<b>-14,155</b>	<b>-13,552</b>	<b>-14,652</b>

출처: 네덜란드 재무부, "Budgettaire bijlage hoofdlijnenakkoord," 2024. 5. 16, 표 재구성

&lt;표 19&gt; 지출절감 사항 요약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국가 본예산, 2024년 불가사의 지출조치 완화	1,252	2,902	3,609	3,784	4,120
ODA 지원 절감	350	550	2,475	2,500	2,500
EU 기여금 절감				1,600	1,600
망명 신청자 유입 제한			500	1,000	1,000
1년간 공무원 정원 동결		600	600	600	600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모든 예산에 대한 보조금 감소	275	1,550	1,800	2,000	2,000
유학생 감소	0	128	511	606	705
치료 및 장기요양	0	0	415	870	1,155
사회보장	0	58	941	947	1,005
<b>지출절감 총합</b>	<b>1,877</b>	<b>5,788</b>	<b>10,851</b>	<b>13,907</b>	<b>14,685</b>

출처: 네덜란드 재무부, "Budgettaire bijlage hoofdlijnenakkoord," 2024. 5. 16, 표 재구성



## 스웨덴

- 재무부, 「2023년 중앙정부 연차보고서」 발표  
(2024. 5. 10.)<sup>59), 60)</sup>

- 2023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GDP 대비 -0.6%로 400억크로나 적자이고, 2022년과 비교하면 1,110억크로나가 감소한 수치  
-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재정수지가 악화

59) 정부는 매년 회계연도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중앙정부 연차보고서를 스웨덴 의회에 제출, 본문은 2024년 5월 10일 발표된 영어로 된 요약 보고서를 정리함

60) 스웨덴 재무부, "Central government annual report 2023 - summary," 2024. 5. 10., <https://www.government.se/legal-documents/2024/05/central-government-annual-report-2023-summary/>, 검색일자: 2024. 5. 20.

<표 20> 2023년 재정 결산에 대한 주요 지표

(단위: 십억크로나)

구분	2023년	GDP 대비 <sup>1)</sup>	2022년	GDP 대비 <sup>2)</sup>
일반정부 재정수지	-40	-0.6	71	1.2
중앙정부	-4	-	26	-
노령연금제도	14	-	21	-
지방정부	-51	-	24	-
중앙정부 예산수지	19	0.3	164	2.7
지출 상한선	1,665	26.5	1,634	27.4
지출 상한선에 따른 지출	1,575	25.0	1,559	26.1
중앙정부 순자산	160	2.5	112	1.9
중앙정부 채무	970	15.4	1,031	17.3

주: 반올림으로 인하여 금액의 합이 총액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음

1) 2023년의 예비 GDP는 6조2,950억크로나(현재가격)

2) 2022년의 수정 GDP는 5조9,720억크로나(현재가격)

출처: 스웨덴 재무부, "Central government annual report 2023 - summary," 2024. 5. 10., Table 1, 2를 참고하여 재구성, <https://www.government.se/leg-act-documents/2024/05/central-government-annual-report-2023-summary/>, 검색일자: 2024. 5. 20.

된 이유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하여 지출 압박을 받은 지방정부의 재정적자가 특히 크게 증가했기 때문

- 스웨덴 의회가 정한 2023년 지출 상한선은 1조 6,650억크로나였으나, 중앙정부 결산에 의하면 지출 상한선에 따른 지출은 1조 5,750억크로나로 한도보다 900억크로나 적게 나타남
- 중앙정부 예산수지는 190억크로나이며, 이는 2022년과 비교하여 1,450억크로나 감소함
- 중앙정부 채무는 2023년 9,700억크로나로 감소했으며, GDP 대비 비율도 2022년 17.3%에서 2023년 15.4%로 감소

[기타]

- 중앙은행(Riksbank), 스웨덴 정책금리 3.75%로 인하(2024. 5. 8.)<sup>61)</sup>
  - 통화정책과 공급 충격의 감소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여 현재 목표치(2%)에 근접
    - 3월 CPIF는 2.2%,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2.9%였으며, 이는 중앙은행의 가장 최근 전망치보다 낮은 결과
  -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2016년 이후 8년<sup>62)</sup> 만에 처음으로 인하하기로 결정
    - 인플레이션 전망이 계속 유지된다면 정책금리는 3월 전망에 따라 하반기 중 두 차례 더


61) 스웨덴 중앙은행, "Policy rate cut by 0.25 percentage points to 3.75 percent," 2024. 5. 8., <https://www.riksbank.se/en-gb/press-and-published/notices-and-press-releases/press-releases/2024/policy-rate-cut-by-0.25-percentage-points-to-3.75-per-cent/>, 검색일자: 2024. 5. 13.

62) 스웨덴 중앙은행 통계, "Policy rate, deposit and lending rate," <https://www.riksbank.se/en-gb/statistics/interest-rates-and-exchange-rates/policy-rate-deposit-and-lending-rate/>, 검색일자: 2024. 5. 14.

인하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현재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 모두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
  - 스웨덴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리스크는 주로 미국 경제의 강세, 지정학적 긴장, 코로나 환율 등과 관련되어 있음
  -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의 조정은 점진적인 정책금리 인하를 통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 군사적 지원은 국방 물자 기부, 재정적 기부, 국방 물자 조달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지원 유형에 따라 2026년 이후에도 몇 년 동안 공공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음
-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스웨덴의 국방력 증강이나 필요한 개혁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 프레임워크는 흑자 목표<sup>65</sup>에서 제외함 

#### ■ 국방부·재무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750억크로나 규모의 군사 지원(2024. 5. 24.)<sup>63)</sup>

-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 이후, 스웨덴은 여러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 군사적 지원을 확대했으며 재정 지원, 민간 위기 관리, 우크라이나의 개혁 작업 및 재건에 370억크로나를 지원
  - 여기에는 300억크로나를 초과하는 15개의 군사 지원 패키지<sup>64)</sup>가 포함되며, 우크라이나는 스웨덴의 최대 개발 원조 수혜국이 됨
-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투쟁이 계속됨에 따라 스웨덴 정부 및 민주당은 2024~2026년 동안 군사 지원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연간 250억크로나, 총 750억크로나를 지원하기로 결정

63) 스웨덴 국방부, 재무부, “SEK 75 billion in military support to Ukraine,” 2024. 5. 24., <https://www.government.se/press-releases/2024/05/sek-75-billion-in-military-support-to-ukraine/>, 검색일자: 2024. 5. 27.

64) 스웨덴 정부, “Militärt stöd till Ukraina,” <https://www.regeringen.se/regeringens-politik/sveriges-stod-till-ukraina/militart-stod-till-ukraina/>, 검색일자: 2024. 5. 28.

65) 일반정부 순대출의 흑자 목표를 평균 GDP의 1/3%로 설정하고, 흑자 목표와 구조적 순대출을 비교하여 흑자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정정책 조치의 규모를 평가(스웨덴 정부, “About the Swedish fiscal policy framework,” <https://www.government.se/government-of-sweden/ministry-of-finance/central-government-budget/the-fiscal-policy-framework/>, 검색일자: 2024. 5. 28.)

# 재정포럼

2024년 6월호 통권 제336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인**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편집위원장** 원종학(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집위원** 권성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신혁(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지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창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환(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송경호(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인혁(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편집간사** 장정순(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편집·제작** 장은정(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24년 6월 17일 발행 / 통권 제336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7 / **E-mail:** pub@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디자인·인쇄**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7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로 만나는  
내 손안의 재정포럼